

2017-05

현안연구

#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문순덕 · 고승한 · 고경민

Bandung issue research

Basic research

Commissioned research

Policy research

Jeju Research Institute 제주연구원

현안연구 2017-05

#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문순덕 · 고승한 · 고경민



## 발 간 사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에 따른 관련정책이 논의되어 결혼이주여성들이 들어오고,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문화가족이 형성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며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의 고용, 보호, 관리·지원 및 인권 등에 대한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외국인 지원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정책(다문화정책 포함)을 통해 다문화사회 진입에 대한 대응 과제와 실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가는 추세이지만, 외국인근로자 관련 지원정책은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도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합리적·체계적인 지원정책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은 주로 행정기관이 위탁하여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기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서 중·장기적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점이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지원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미흡한 편입니다.

따라서 제주 거주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적·종합적·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주 거주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 설치 등 행정 지원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상황 상시 모니터링, 외국인 2세대 혁신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 실태 조사의 정례화, 제주 거주 외국인 재능기부 발굴 및 활성화 사업 등이 요구

되며, 중장기 과제로는 (가칭)제주외국인주민센터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이 공공성과 개방성을 띠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직접 운영, (가칭)제주외국인재단 설립 후 직접 운영, 민간단체 위탁 운영' 등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심성의껏 이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제주 거주 외국인과 외국인 관련 업무 담당자, 관련단체 전문가 등에게도 고마운 뜻을 전하며 이 연구 결과가 제주사회 구성원들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과 내국인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9월

제주연구원장 강 기 춘

## 연구요약

### 1. 연구개요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에 따른 관련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이 들어오고, 다문화가족이 형성되면서 관련정책 사업이 추진됨.
- 이에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고용, 보호, 관리·지원 및 인권 등에 대한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외국인 지원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함.
- 현재 정부부처별로 외국인 지원정책 사업이 분산·중첩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도와 행정시 소속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향후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이에 제주 거주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적·종합적·체계적인 조직 설치 ('가칭 제주외국인주민센터') 및 운영이 필요함.
-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 거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 체류 외국인 등 외국인주민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조직 설치 필요성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음.

#### 2) 연구 방법 및 범위

- 방법
  -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고찰 (기존 연구 및 정책 분석)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련 통계자료 분석
- 제주 거주 외국인 관련 분야 담당자 심층면접 및 외국인 설문조사

#### ○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7년을 기준 삼았으나, 다만 2017년에 해당되는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2016년도를 기준하였음.
- 외국인 논의 대상 범위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 3) 연구의 한계점

-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기 때문에 표집된 사례분석 결과를 가지고 제주지역의 전체 외국인 모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제주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조사에 따라 단일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관련성(association)과 인과성(causality)을 단언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향후 다른 시점에서 정례적 조사가 필요함.
- 또한 이 연구는 제주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직 설치와 관련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요인과 외국인 지원의 내적·외적 요인과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음.

## 2. 국내 외국인 지원정책의 주요 특징

### 1) 외국인의 개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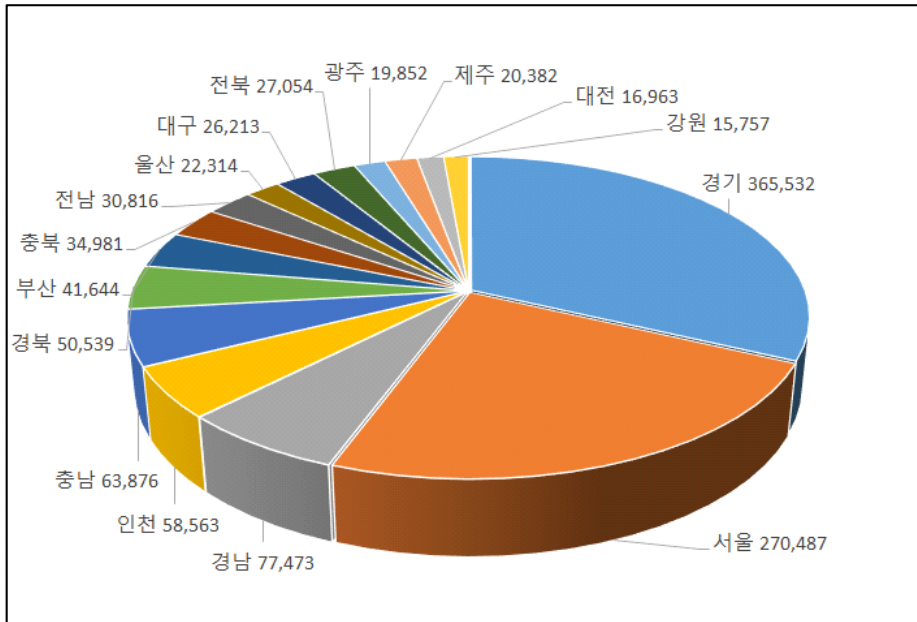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 이주민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

- 이주노동자,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 등이 이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혼용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편임.
- 정부부처에 따라 이주민을 지칭하는 용어 쓰임이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함. 즉 ‘외국인’은 주로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로 한정하고자 하는데, 두 유형은 외국인주민이라 부르기도 함.
- ‘외국인근로자’는 현재의 국적이 외국 국적이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가리킴.
- ‘결혼이민자’는 혼인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의미함.

## 2)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유형도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 또한 시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을 보면 2017년 4월 말 현재 등록 외국인이 각 지역별로 거주하고 있는 현황은 [그림]과 같음.
-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로 365,532명(31.9%)이고, 그 다음이 서울시로 270,487명(23.7%)이며,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하면 등록외국인의 55.7%가 수도권에 거주함을 알 수 있음.
- 2개의 지역을 제외하면 외국인 거주지역은 경남, 인천, 충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역 간에는 큰 차이 없이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그림]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 현황

### 3) 외국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는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2007년을 전후하여 외국인 지원정책을 체계화하기 시작함(2017년 현재 2,024,813명).
- 정부는 유입인구관리를 출입국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오다가 최근 들어 법무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관리 차원으로 확장시켜 왔음.

#### (1) 법률 및 정책 간 중첩으로 업무와 사업의 중복과 경쟁

- 국내 유입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과 정책의 상호 중첩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중복이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임.

##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분담의 한계

- 2000년대 들어 이주민 통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와 정책이 확산됨.
- 전담 부서 없이 몇 개의 부서로 나뉘어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외국인정책에 따른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따른 사업이 중첩됨으로써 업무 및 사업상의 중복이 나타남.

## (3) 외국인정책의 통합·조정을 위한 거버넌스의 미확립

- 외국인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들이 다양한 사업을 놓고 예산과 주도권, 성과를 둘러싼 경쟁을 하고 있음.
-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정책을 전담하는 통합 부서의 설치와 관련 인력 확충이 여전히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및 민간단체와 연계와 협력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3. 제주 지역의 외국인 지원정책 현황

## 1) 제주 거주 외국인 현황

- 제주지역 전체 외국인 등록 인구수는 2010년에 7,343명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19,593명으로 늘어나 지난 7년 동안 16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법무부(2017. 06.)의 통계 월보에 따르면 20,705명으로 이는 2016년에 비해 5.7% 증가한 것임.
- 2017년 6월 기준으로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수는 20,705명이고, 그 가운데 제주시는 13,344명, 서귀포시는 7,361명으로 나타남.

## 2)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지원정책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과 사업들은 주로 다문화가족에 집중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하는 정도임.
-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 근거는 국가 법률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2008. 0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2011. 06.),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2011. 11.),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2012. 01.) 등에 기초하고 있음.

## 3)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정책의 한계점

### (1) 외국인 지원정책 사업의 한계점

- 제주지역에서 외국인을 위한 지원정책 사업은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지원정책이나 사업들은 개별 부서(여성가족정책과, 경제정책과, 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등)들에 의해서 각각 추진되어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체계적·종합적 외국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 설치가 요망됨.

### (2) 민간 지원조직 운영의 한계점

-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범위와 목적의 한계 내에서 외국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민간지원조직은 예산 부족으로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할 수 없고, 제주의 다양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4. 제주지역의 외국인 대상 실증조사 결과

- 제주 거주 외국인 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시사점과, 외국인 지원 업무 담당자, 민간단체 관계자, 중간관리자 등 1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제주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사업장 별로 소수로 근무하여 고립된 생활, 정보공유의 한계, 소통기회의 부족, 접근 및 이동의 제한 등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제도적으로 필요함.
- 제주지역의 산업특성상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려는 내국인 인력은 감소하여 그 대체 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산업별·업종별 특성들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제주거주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다양한 비자 유형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 유형에 따른 외국인 지원정책의 다양화도 필요함.
- 성실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모범 고용주 및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업체(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외국인주민들의 문화 사회활동 참여 기회와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인거리’를 조성하고,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제주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지원 업무들이 이원화되어서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함.
-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주와 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인권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공조직이 필요함.
- 제주거주 외국인주민들의 실태조사, 행정지원서비스의 체계적·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주민공동체의 활성화,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공동체의 상생 발전 등과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가칭)제주외국인주민센터 설립 및 운영이 요구됨.

## 5.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방안

### 1) 기본 방향

- 사람 중심의 지원시스템 구축
  - 인종, 민족, 종교, 계층, 국가, 지역 등의 차이로 법적·제도적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임.
  - 따라서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은 우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고, 지원하는 외국인·다문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음.
- 외국인주민 참여·이용의 극대화
  - 제주 거주 모든 외국인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여러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주민들이 우선 지원조직을 적극 이용 및 활용하려는 참여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지원조직 운영 관계자들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태도와 실천적 노력도 요구됨.
- 지역사회의 통합·상생의 문화조성

- 외국인 지원조직은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는 업무가 우선이지만, 동시에 지역주민들도 함께 동참하여 외국인주민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는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임.

○ 외국인의 삶의 질 향상

- 외국인 지원조직은 다양한 국가와 체류기준(비자), 다양한 산업별 고용지위, 다문화 가족 등의 특성을 지닌 제주 거주만족도를 높여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적극적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임.

## 2) 추진전략

○ 수요자 맞춤형 지원전략

- 외국인 지원조직은 우선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외국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들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갖추어 외국인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기역량 강화 전략

- 외국인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에 대체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동안 자신들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미래 설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 연계 전략

-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기관은 외국인과 지역사회 일반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전략을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 다변화·허브화·복지화 전략

-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은 우선 다양성을 존중하여 이용 외국인의 출신 국가, 종교, 체류 자격(비자 유형), 고용형태별, 다문화가족

유무, 외국인근로자 유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3)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조직의 운영 방안

#### 가) 외국인 지원조직의 성격

##### ○ 다양한 행정서비스 지원

- 외국인 지원조직은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법률지원 서비스(출입국 관련 비자문제, 고용, 결혼, 귀화 등 법률 상담 및 지원), 외국인 대상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 의료통역서비스 도입, 생활 적응을 위한 행정 민원 서비스(교통이용, 전출입 신고 등) 등 제주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센터 기능을 담당함.

##### ○ 외국인 대상 다양한 정보 제공

- 외국인 지원조직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모든 복지서비스, 교육, 행정, 종교, 법률, 고용, 사회활동참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 외국인을 위한 공익성 실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들은 우선 행정 서비스 소비자인 일반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것임.

##### ○ 외국인 친화 생활문화 조성

- 외국인 지원조직은 외국인들이 제주지역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동시에 외국인들이 유·무형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합서비스 및 복지 지원의 성격을 지녀야 할 것임.

## 나)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의 접근 유형

### (1) 단기 과제

#### ①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 설치 등 행정 지원조직의 일원화

- 현재 외국인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전담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국내 과 단위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함.

#### ② (가칭)제주외국인주민센터 설치 관련 기본계획 수립

- 외국인 관련 업무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기구 설치를 준비해야 하므로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하고, 지원조직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함.

### (2) 중·장기과제

- (가칭)제주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주체 등을 결정하여 추진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운영, (가칭) 제주외국인재단 설립(도 출자·출연기관) 후 직접 운영, 민간단체 위탁 운영 방식 등이 있음.

## 다) 외국인 지원조직의 주요 운영 사업

### (1)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상시 모니터링

-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관련 조례에 국제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반영해야 함.

### (2) (가칭)제주외국인협의회 조직 및 운영

-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2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외



국민 지원관련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의 인권 보호 및 업무 증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함.

- 제주 거주 외국인 중심의 민간협의체 운영도 필요

(3) 외국인 대상 다양한 복지·교육 및 문화사업 추진

- 제주지역의 각 산업체별 고용주(또는 중간관리자 등) 대상 인권교육, 문화다양성교육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4) 다문화가족 대상의 취업 상담·알선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

- 다문화가족 구성원(결혼이민자 중심)들이 안정적인 지속적 일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 업무를 담당함.

(5) 외국인 건강보건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사업

- 제주 거주 외국인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의료기관 및 의료진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함.

(6) 외국인 2세대 혁신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한국사회의 교육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심리적 격차를 좁히는 역할을 담당함.

(7)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의 정례화

- 현재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의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8)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 출입국 관련 대행 사무

- 외국인들의 제주 입·출국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함.

(9) 제주 도민 대상 외국인 및 다문화 바로 알기 교육 사업

- 제주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외국인과 상생 방안을 마련함.

(10) 제주 거주 외국인 재능기부 발굴 및 활성화 사업

- 외국인들은 여러 정책의 수혜자이고, 도움을 받는다는 수동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여 봉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줌.

(11) ‘(가칭)제주외국인의 날’ 지정 및 운영

- 현재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기념일을 지정하여 외국인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함.

## 6. 정책제언

- 제주 거주 외국인 지원조직의 신설과 그에 따른 (가칭)제주외국인주민센터 등 공식 기관의 설치는 단기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하다고 봄.
- 이에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 신설이나 지원조직 설치 등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책과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 1) 외국인 지원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 활성화

-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은 한국국적 미취득자, 난민, 미등록체류자 등 제주지역에서 주거, 일자리, 인권 보장 등이 가능하도록 행정과 민간 지원이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금융기관과 민간 지원단체, 행정이 협력하여 서비스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협력 방안을 권장해야 함.

### 2) 외국인 친화적인 제주 만들기 지원

-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노동 조건과 거주 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주살이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정도가 다를 것이므로, 이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
- 이에 제주지역에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지면서 다문화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외국인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3)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방안 마련

- 정부의 숙련기능인(E-7) 제도는 자격 요건이 강한 편이어서, 제주지역의 산업체에서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선정이 어려움. 이에 산업별(특히 제조업) 숙련기능 인력 유입 방안을 보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제주의 핵심 산업인 농·수·축산업과 관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외국인 체류 자격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4) 제주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의 활성화 방안

- 제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도입 정책 시행을 앞두고 점검한 결과 이행 실적이 낮게 나타나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또는 마을단위)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계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5) 무사증제도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 제주도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들의 국내 미등록체류를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음.
- 향후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통해 의도적인 미등록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체계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목 차

<b>I. 연구개요</b>	<b>1</b>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4
4. 연구의 한계점	6
<b>II. 국내 외국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주요 특징</b>	<b>8</b>
1. 외국인의 개념 정의	8
2. 우리나라 외국인 지원정책의 등장 배경	15
3. 외국인 지원정책의 변천 과정	18
4.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및 주요 지원정책	30
5. 외국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43
<b>III. 국내 외국인 지원조직의 유사사례 분석</b>	<b>47</b>
1. 외국인 지원정책 및 전담조직 설치 관련 선행 연구	47
2. 국내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 사례	60
3. 국내 사례의 주요 시사점	82
<b>IV.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정책의 현황 및 지원조직 사례 분석</b>	<b>84</b>
1. 외국인 지원정책 관련 법률과 조례 검토	84
2.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정책 현황	90

3. 제주지역의 외국인 대상 실증조사 결과 및 해석 .....	122
4. 전문가 면접 조사 결과 .....	194
<b>V.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방안 .....</b>	<b>203</b>
1.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	203
2.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조직의 운영 방안 .....	206
<b>VI. 정책제언 .....</b>	<b>214</b>
<b>참고문헌 .....</b>	<b>219</b>
<b>Abstract .....</b>	<b>223</b>
부록 1.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유형 .....	225
부록 2. 외국인주민 대상 설문지 .....	235
부록 3.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 .....	245

## <표 목차>

<표 II-1> 정부의 국내 이주민 지칭 용어와 내용 .....	9
<표 II-2> 국내 유입 인구에 대한 지원정책과 전개 과정 .....	29
<표 III-1> 대구시 기업친화형 센터의 조직구성 및 인원계획 .....	54
<표 III-2> 대구시 주민친화형 센터의 조직구성 및 인원계획 .....	54
<표 III-3>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인력 및 업무분장 .....	58
<표 III-4>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방안 .....	59
<표 III-5> 안산시 거주 유형별 외국인 현황(2016) .....	61
<표 III-6>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조직 및 인원 현황(2017) .....	64
<표 III-7>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위원회 현황 .....	65
<표 III-8> 국내·외 방문자 현황 .....	66
<표 III-9>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현황 .....	70
<표 III-10>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및 예산실적 .....	72
<표 III-11> 아산시 다문화지원팀 주요 업무 .....	74
<표 III-12> 취업사관학교 진행내용 .....	77
<표 III-13> 다문화 협동조합 글로벌 국방 진행내용 .....	78
<표 III-14> 아산시 신창면 맞춤형 다문화 프로젝트의 사업내용 .....	79
<표 IV-1> 제주지역 외국인의 등록인구 현황(2016. 12. 31. 기준) .....	91
<표 IV-2> 제주지역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2016. 11. 15. 기준) .....	93
<표 IV-3> 제주지역 내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2017. 06. 기준) .....	95
<표 IV-4> 제주지역 외국인 국적별 세대수 현황 .....	96
<표 IV-5>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국적별 자녀 현황 .....	97
<표 IV-6>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연령별 자녀 현황 .....	98
<표 IV-7> 제주지역 외국인 부모 유형별 자녀 현황 .....	99
<표 IV-8> 제주지역 외국인주민과 결혼이민자 등 시도별 현황 .....	100
<표 IV-9> 제주지역 업종별 외국인 현황 .....	101
<표 IV-1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업 현황 .....	103



<표 IV-11> 제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업 현황 .....	105
<표 IV-12> 서귀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업 현황 .....	107
<표 IV-13>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및 쉼터 연도별 지원 및 실적 .....	109
<표 IV-15> 외국인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별 주요 업무 내용 .....	113
<표 IV-1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25
<표 IV-17> 제주도 거주 만족도 .....	127
<표 IV-18> 제주도 거주 불만족 이유 .....	129
<표 IV-19> 제주도 거주 만족 이유 .....	131
<표 IV-20> 제주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	133
<표 IV-21> 공공시설 이용 여부(종합) .....	135
<표 IV-22> 공공시설 이용 여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37
<표 IV-23> 공공시설 이용 여부(이주여성지원센터) .....	139
<표 IV-24> 공공시설 이용 여부(읍·면·동 행정기관) .....	141
<표 IV-25> 공공시설 이용 여부(보건소) .....	143
<표 IV-26> 공공시설 이용 여부(도서관) .....	145
<표 IV-27> 공공시설 이용 여부(고용센터) .....	147
<표 IV-28> 공공시설 이용 여부(외국인공동체) .....	149
<표 IV-29> 공공시설 이용 여부(출입국관리사무소) .....	151
<표 IV-30> 공공시설 이용 여부(시 공공의료원) .....	153
<표 IV-31> 공공시설 이용 여부(학생문화원) .....	155
<표 IV-32> 공공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	157
<표 IV-33> 주변인과의 관계 .....	159
<표 IV-34> 한국 생활 시 애로사항 .....	161
<표 IV-35> 최근 1년 업무 중 경험 .....	163
<표 IV-36> 제주도 거주 지속 의향 .....	165
<표 IV-37> 거주 의향 없는 이유 .....	167
<표 IV-37> 행정기관 민원 처리 경험 .....	169
<표 IV-38> 행정기관 방문 계기 .....	171
<표 IV-39> 어려운 일 발생 시 우선 도움 요청(1순위) .....	173
<표 IV-40> 어려운 일 발생 시 우선 도움 요청(1+2순위) .....	175

<표 IV-41> 평소 이용하는 기관(단체) .....	177
<표 IV-42> 외국인대상 행정지원서비스 만족도 .....	179
<표 IV-43> 행정지원서비스 불만족 이유 .....	181
<표 IV-44> 외국인대상 행정지원 서비스 우선 필요 사항(1순위) .....	183
<표 IV-45> 외국인대상 행정지원서비스 우선 필요 사항(1+2순위) .....	185
<표 IV-46> 경제활동 위한 우선 필요 지원 .....	187
<표 IV-47> 제주도 거주 위한 우선 정책 .....	189
<표 IV-48> 국내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조직 사례(2017. 03. 기준) .....	208

##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수행 체계도 .....	5
[그림 II-1]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이행 절차 .....	12
[그림 II-2] 고용특례 외국인 취업절차도 .....	14
[그림 II-3]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2007~2017. 04.) .....	30
[그림 II-4]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 현황 .....	33
[그림 II-5]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 .....	43
[그림 III-1]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조직도 .....	57
[그림 III-2] 안산시 거주 국적별 외국인 현황 .....	61
[그림 III-3]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의 비전 및 전략 .....	62
[그림 III-3] 충남지역 등록외국인의 시·군별 분포 현황 .....	67
[그림 III-4] 충남지역 다문화가족 분포 현황 .....	68
[그림 III-5] 충남지역 다문화가족의 국적별 분포 현황 .....	68
[그림 III-6] 아산시 외국인 자녀 현황 .....	69
[그림 III-7] 아산시 여성가족과의 조직 현황 .....	74
[그림 III-8] 아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구축 모형 .....	81
[그림 IV-1] 한림수협 조직도 .....	111
[그림 IV-2] 사)외국인평화공동체 조직도 .....	115
[그림 IV-3] 제주도 거주 만족도 .....	126
[그림 IV-4] 제주도 거주 불만족 이유 .....	128
[그림 IV-5] 제주도 거주 만족 이유 .....	130
[그림 IV-6] 제주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	132
[그림 IV-7] 공공시설 이용 여부(종합) .....	134
[그림 IV-8] 공공시설 이용 여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36
[그림 IV-9] 공공시설 이용 여부(이주여성지원센터) .....	138
[그림 IV-10] 공공시설 이용 여부(읍·면·동 행정기관) .....	140
[그림 IV-11] 공공시설 이용 여부(보건소) .....	142

[그림 IV-12 ] 공공시설 이용 여부(도서관) .....	144
[그림 IV-13 ] 공공시설 이용 여부(고용센터) .....	146
[그림 IV-14] 공공시설 이용 여부(외국인공동체) .....	148
[그림 IV-15] 공공시설 이용 여부(출입국관리사무소) .....	150
[그림 IV-16] 공공시설 이용 여부(시 공공의료원) .....	152
[그림 IV-17] 공공시설 이용 여부(학생문화원) .....	154
[그림 IV-18] 공공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	156
[그림 IV-19] 주변인과의 관계 .....	158
[그림 IV-20] 한국 생활 시 애로사항 .....	160
[그림 IV-21] 최근 1년 업무 중 경험 .....	162
[그림 IV-22] 제주도 거주 지속 의향 .....	164
[그림 IV-22] 거주 의향 없는 이유 .....	166
[그림 IV-23] 행정기관 민원 처리 경험 .....	168
[그림 IV-24] 행정기관 방문 계기 .....	170
[그림 IV-25] 어려운 일 발생 시 우선 도움 요청(1순위) .....	172
[그림 IV-27] 어려운 일 발생 시 우선 도움 요청(1+2순위) .....	174
[그림 IV-28] 평소 이용하는 기관(단체) .....	176
[그림 IV-29] 외국인대상 행정지원서비스 만족도 .....	178
[그림 IV-30] 행정지원서비스 불만족 이유 .....	180
[그림 IV-31] 외국인대상 행정지원 서비스 우선 필요 사항(1순위) .....	182
[그림 IV-32] 외국인대상 행정지원서비스 우선 필요 사항(1+2순위) .....	184
[그림 IV-33] 경제활동 위한 우선 필요 지원 .....	186
[그림 IV-33] 제주도 거주 위한 우선 정책 .....	188



# I. 연구개요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에 따른 관련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해외인력 활용정책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외국인 지원정책이 입안되기 시작함.
  - 산업연수생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문제(외국인 차별, 임금체불, 폭력, 인권 침해, 불법 체류 등)들이 발생하여 다문화정책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포함한 관리 차원에서 추진됨.
- 또한 1980년대 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이 들어오고, 다문화가족이 형성되면서 관련정책 사업이 추진됨.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2000년대 들어와서임.
- 이에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의 고용, 보호, 관리·지원 및 인권 등에 대한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외국인 지원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등이 제정됨.
-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정책(다문화정책 포함)을 통해 다문화사회 진입에 대한 대응 과제와 실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특히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지원정책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됨(자세한 내용은 II. 3. 참조).
- 또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음(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07.).

- 국정 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대한 국정 전략으로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가 수립됨.
- 이에 따른 국정과제로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등이 선정됨.
-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가는 추세임.
- 반면 외국인 근로자 관련 지원정책은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합리적·체계적인 지원정책에 혼선이 발생함.
- 이에 제주 거주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중심의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위해서도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함.
- 제주지역에도 외국인 거주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기준으로 19,524명의 외국인주민이 제주에 거주하고 있음. 제주 거주 외국인들은 근로자가 6,383명(32.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결혼이민자(2,119명), 재외동포(1,471명), 유학생(1,050명), 혼인귀화자(85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제주 거주 외국인들은 제주 사회에 노동 및 고용시장, 외국인 투자, 결혼문제, 대학 신입생 모집, 외국어 교육 등 관련분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반하여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폭력, 임금체불, 노동착취 등), 다문화가족의 문제(문화충격, 이혼, 가정폭력, 자녀교육 등), 미등록체류, 외국인 범죄 등의 부정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거주 외국인들과 관련된 부정적인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조례)를 마련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2007),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2008),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2011),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2011), 등이 있음.
- 이와 같은 여러 조례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와 행정시 소속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2. 연구 목적

- 현재 제주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은 주로 행정기관이 위탁하여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기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서 중·장기적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점이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지원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미흡한 편임.
-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단기적·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제주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과 사업 지원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됨.
- 제주지역에는 외국인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위상에 걸맞게 개방적·포용적 다문화정책을 표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구축해야 함.
- 이에 제주 거주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적·종합적·체계적인 관리 조직(“가칭 제주외국인주민센터”) 운영이 필요함.
-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 거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 체류 외국인 등 외국인주민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조직 설치 필요성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 또는 제주 거주 외국인의 주요 특성과 지원 정책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고찰함.



- 둘째, 국내 외국인 지원조직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주지역의 외국인주민 지원조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제주 거주 외국인 정책과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담당 부서의 업무, 예산규모, 지원 정책사업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모색함.
  - 넷째,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들의 지원체계와 운영에 대한 도내 관련 기관(단체)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면접조사,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현안과제를 파악함.
  - 다섯째, 외국인 지원정책 사례분석, 현재 제주의 외국인 지원정책과 사업, 지원체계와 운영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통해서 제주 거주 외국인 지원조직의 설치 필요성, 방향,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함.
- 궁극적으로는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해소와 갈등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조직의 체계화·종합화·허브화 구축을 위한 정책 자료를 도출하고자 함.

### 3. 연구 방법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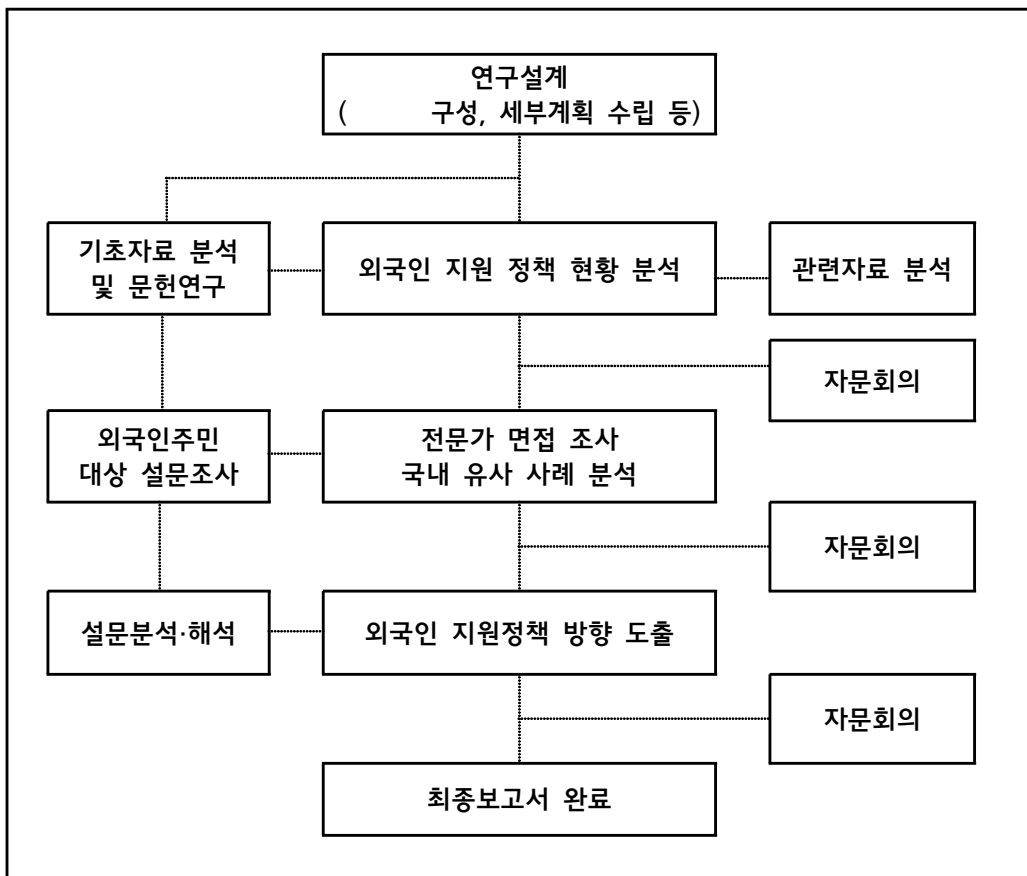
#### 가. 방법

-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고찰 (기존 연구 및 정책 분석)
  - 외국인 지원 관련 법률과 조례 등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전담조직 연구 분석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련 통계자료 분석
  - 외국인 국적별, 유형별, 산업별 현황 파악 근거 자료로 활용
- 제주 거주 외국인 관련 분야 담당자 심층면접 및 외국인 설문조사
  -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 심층 면접

- 제주 거주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 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 의견수렴
  -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 제주지역의 외국인 현황, 정책 방향 등 수렴

## 나. 연구 수행 단계

- 이 연구는 크게 연구 설계, 기초자료 분석, 외국인주민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국내 유사 사례 분석, 정책 시사점 도출 등의 단계로 구성됨([그림 I -1] 참조).



[그림 I -1] 연구수행 체계도

## 다.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7년을 기준 삼았으나, 2017년에 해당되는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2016년도를 기준하였음.
- 외국인 논의 대상 범위 : 한국국적 취득자, 미취득자 등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 내용적 범위
  - 외국인 지원정책의 주요 특성과 문제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정책 분석
  - 국내 외국인 지원조직 유사 사례 분석
  - 제주지역의 외국인 정책과 지원 사업 분석
  - 제주 거주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의 방향과 운영 방안 제시

## 4. 연구의 한계점

-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표집된 사례분석 결과를 가지고 제주지역의 전체 외국인 모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제주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소통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설문지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응답 가능한 외국인을 임의 표출하였음. 따라서 전체 외국인 가운데 소수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제주 거주 외국인 대상 조사연구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에 의한 외국인의 입국 동기, 적응 과정상의 여러 문제점(비자, 임금체불, 사회적 차별, 인권, 소외와 사회적 격리감, 고용주와의 관계, 가족불화, 이혼 의사, 언어소통문제 등), 거주지 만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지원 관련단체 관계자들과 자문회의를 통해 부분적으로 보완하였음.
- 외국인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제주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제주 거주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음.
- 반면 제주 거주 외국인들(원어민 교사, 귀화인, 일시 체류 비즈니스 외국인, 유학생 등)의 체류자격별 조사를 추진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sup>1)</sup>
- 따라서 제주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조사에 의해 단일 시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관련성(association)과 인과성(causality)을 단언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향후 다른 시점에서 정례적 조사가 필요함.
-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국 혹은 타 시도 거주 외국인들과 비교 분석하는 데 한계점이 있음.
- 또한 이 연구는 제주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직 설치와 관련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요인과 외국인 지원의 내적·외적 요인과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음.

---

1)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제주 거주 전체 외국인수 가운데 32.7%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에 한정하였으며, 향후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실태조사가 필요함.

## Ⅱ. 국내 외국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주요 특징

### 1. 외국인의 개념 정의

#### 가. 개념

-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 이주민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
  - 이주노동자,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 등이 이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혼용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편임.
- 이와 같이 외국인 관련 용어가 다양한 것은 정부 부처별로 각각의 정책 목적에 따라 외국인 지원정책이 추진된 결과이며, 국민들의 이해와 정부 정책의 명료성을 위해서도 용어의 통일과 범주가 분명해져야 함.
  - 외국인의 입출국을 관리하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들은 부처의 설립 목적과 준거법에 따라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
- 법률과 정부 부처에서 이주민을 지칭하는 용어와 범주는 <표 II-1>과 같음.
  - 정부 부처에 따라 동일한 대상을 상이한 용어로 지칭하거나, 상이한 대상을 동일한 또는 유사한 용어로 지칭하기도 함.
  -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주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자녀 등으로 구분되어 쓰임.

<표 II-1> 정부의 국내 이주민 지칭 용어와 내용

용어	내용	출처
재한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	· ①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결혼이민자)과, ②출생, 인지,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①인지,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②출생, 인지,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 지원법
외국인주민	· ①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등), ②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그 외 국적 취득자), ③외국인주민 자녀	2014년 지방자치 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외국인주민 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녀 · 유형에 따라, ①외국인부모(부모가 모두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②외국인-한국인 부모(부모 중 한쪽이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③한국인부모(‘출생 시부터 한국인’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또는 모)가 이혼 후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자와 재혼한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	· 국제결혼가정 자녀*+외국인가정 자녀(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국내 출생 자녀(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중도입국 자녀(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교육부 보도자료

출처: 이창원(2015:2) 재인용.

- 정부 부처에 따라 이주민을 지칭하는 용어 쓰임이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함.
-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법률과 부처에 따라 대상에 차이가 있음. 예를 들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재한외국인’과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통계의 ‘외국인주민’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름.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제2조)로 정의함.
  - 행정안전부가 정의하는 ‘외국인주민’은 “①국내 90일 초과 체류한 국적미취득자, ②외국인이었으나 국적취득자, ③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를 모두 포함함.<sup>2)</sup>으로 되어 있음.
- 외국인의 범주도 법률과 정부 부처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나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에서는 ‘외국인’ 용어를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에게 사용함.
  - 행정안전부 통계에서 ‘외국인’은 현재 국적과는 상관없이 과거 외국 국적자가 기준이 됨.
- 따라서 이 연구에서 ‘외국인’은 주로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로 한정하고자 하는데, 두 유형은 외국인주민이라 부르기도 함.
  - ‘외국인근로자’는 현재의 국적이 외국 국적이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가리킴.
  - ‘결혼이민자’는 혼인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의미함.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국적 취득자와 미취득자로 구분됨.
  - 한국국적 취득자는 혼인귀화자, 일반귀화자, 특별귀화자 등을 가리킴.
  - 한국국적 미취득자는 근로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재중동포, 고려인동포), 기타(합법체류자 : 투자이민자, 전문가 그룹 등), 미등록체류자, 난민

2)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참조함.

지위신청자 등을 가리킴.

- 제주 거주 외국인의 체류자격에는 주로 유학(D-2), 단기방문(C-3), 기업투자(D-8), 교수(E-1), 회화지도(E-2), 예술홍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이 있음 (부록 1. 참조).

## 나.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와 고용특례제도

###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에 입각하여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고, 일정기간 국내의 산업체에 근무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가리킴.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이행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현재 제주지역의 사업주들이 이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요청·채용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보완한 ‘숙련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보도자료, 2017. 07. 18.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행’).
- 이 제도는 정부의 기존 제도는 비숙련 이주노동자의 국내 장기 체류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한 것임.
  - 법무부와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숙련 이주노동자인 경우 2회 연장하여 9년 8개월까지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 명문화할 계획임.
- 이 제도와는 별도로 법무부에서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기 체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 8월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음.
  - 이 제도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선원취업(E-10) 비자를 받아서 4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주노동자가 연령, 경력,



숙련도,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받은 뒤 일정 점수를 넘기면 ‘외국인 숙련 기능점수제 비자’(E-7-4)로 전환 기회를 주고 있음. 그런데 이 제도는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만 해당됨.



출처: 제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

[그림 II-1]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이행 절차

- 현재 숙련기능인(E-7)이 되려면 35세 미만, 전문대 졸업 이상,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농업분야

업체에 정상 취업경력,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자격조건이 엄격한 편임.

- 숙련기능인력 점수는 필수항목(산업분야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과 선택항목(국내 보유자산, 해당분야 국내 근무경력, 관련 직종 교육·연수경험·가점항목 등)을 가리킴.
-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뿌리기술(주조, 금형, 용접, 소성 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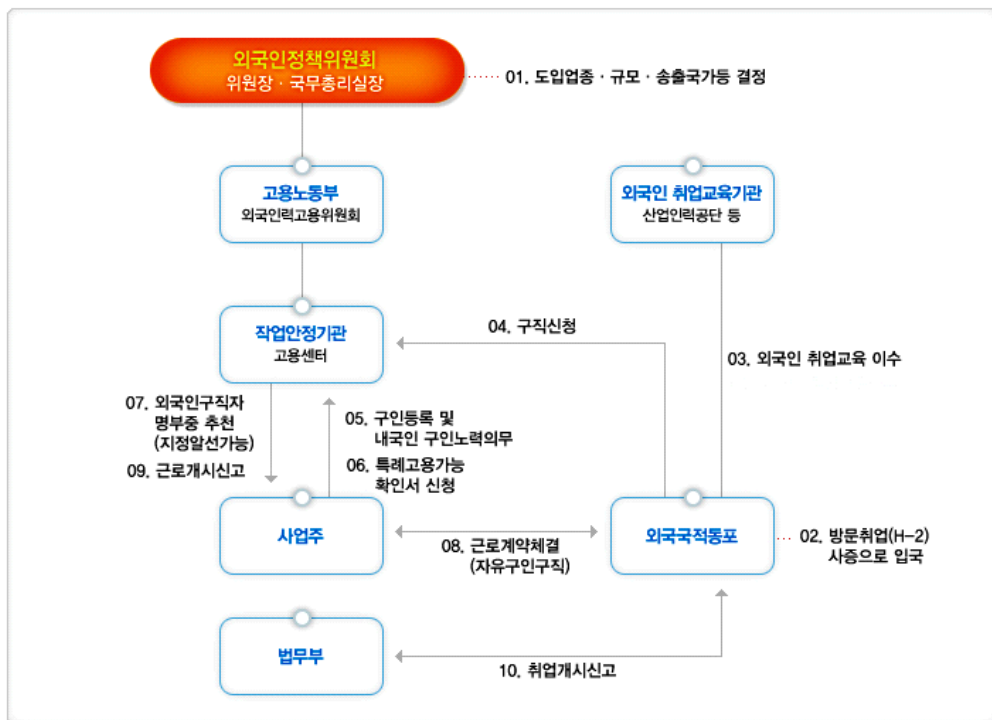
## □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일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활성화되기까지는 제도 보완이 필요함.
- 현행 외국인력 제도(고용허가제)는 지정된 근무처에 장기간 근무(3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농어촌의 계절별 인력 수요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함(제주시 농정과 보도자료, 2017. 06. 13.).
- 제주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시범사업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43개 농가에서 88명의 외국인 고용 신청서를 접수했음. 이 결과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여 인원을 배정받기로 함.
- 서귀포시에서도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담당).
- 참여농가의 자격요건으로는 지정된 임금 지불과 숙식제공이 가능한 농가여야 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농가 등으로 정했으며, 미등록체류 및 외국인 인권침해 방지도 역점을 둘 계획임.

- 외국인근로자들은 감귤, 월동무, 양배추 수확 시기인 11월부터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하게 됨. 즉 이들은 단기취업비자(90일)로 입국 가능함.
- 외국인근로자 입국 대상자는 해당지역(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에 한정됨.

## □ 외국인 고용특례제도

- 고용특례 외국인은 방문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장에 알선된 후 근로개시를 하거나 직접 구직 활동하여 근로개시를 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가리킴.



출처: 제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

[그림 II-2] 고용특례 외국인 취업절차도

## 2. 우리나라 외국인 지원정책의 등장 배경

- 외국인 지원정책의 등장은 국내유입 외국인의 증가가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유입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국내외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 점에서 국내유입 인구 증가의 국내외 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외국인 지원정책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자 함.

### 가. 인구 이동의 세계화와 정책적 대응

- 교통·통신의 발달과 세계적인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국내 경제의 규모 확대와 국제교류의 증대 등과 같은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국내유입 인구가 급증함.
-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증대와 관리 문제, 결혼 이민의 증가와 정착 및 자녀 양육 문제,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관리 문제, 전문 인력의 유치와 관리 문제, 재외동포의 입국 증가와 관리 문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유입 급증과 정착 문제 등과 같은 새롭고 다양한 사회 문제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부각됨.
- 국내유입 인구의 증가는 노동 인력 문제의 해소와 사회적 다양성 증진,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개방성 증진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의 효과도 있었으나 출입국 관리 문제, 정착과 적응의 문제, 이탈과 범죄 문제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도 나타남.
- 또한 경제의 세계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자본·상품·노동이 자유로운 ‘이주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 2013).
- UN은 “1년 이상 의도적 체류를 동반하는 인구이동”을 ‘이민’으로 파악하는데,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 이민자는 약 1억 9천여만 명을 기록하여 세계 인구 64억7천만 명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법무부, 2008).

- 인구 이동의 세계화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인구가 점증하는 선진국들의 정책적 대응도 적극화 양상을 보임.
  - 특히 지식·정보력을 갖추고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유치 노력을 전개함.
  -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테러 급증으로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도 함.
  - 국내유입 인구의 증가로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강화를 추진함.
- 인구 이동의 세계화 흐름은 국내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0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국내유입 인구의 관리와 지원 등을 위해 「고용허가제」(200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등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국내유입 인구가 과거에는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인구변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이민자의 유입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음(이규용 외, 2015 : 4).

## 나. 국내유입 인구의 증가와 체류 유형의 다양화

- 외국인 지원정책이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국내유입 인구의 증가라고 할 수 있음.
  - 체류외국인은 1997년 38만명에서 2007년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12년에는 145만명이고, 2017년 4월말 현재 2,024,81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한시적 체류의 외국 인력뿐만 아니라 정주형 이민자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민자 유입정책과 더불어 사회통합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이규용 외, 2015 : 5).
- 종래의 체류외국인들은 대부분 단순기능 분야 종사자였으나 최근에는 결혼·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방문취업동포, 단순기능인력(비전문취업), 결혼이민자, 유학생, 전문인력, 영주자격자, 투자자 등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임.

## 다.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 이민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수요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수요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임.
- 지난 10년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민정책의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는 이민자에 대한 수요가 한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 간 지속되고 그 규모도 점차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함(정기선, 2016:1).
- 출산율 저하로 장기적으로는 총인구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총인구는 2013년 5,022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까지 성장하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 4,396만 명에 이를 전망이고,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04만 명으로 최고점에 다다른 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강동관 2016:16).
- 인구성장률은 2013년에 0.43%에서 점차 둔화되어, 2031년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진입한 후 2060년에 -1.0%까지 감소율이 확대될 전망이고, 고령 인구의 규모도 2017년 유소년인구를 초과, 2030년에는 유소년인구의 2배, 2060년에는 4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강동관, 2016 : 17).
- UN통계에 따르면, 15세~64세까지 경제활동인구를 2020년에 3,660만 명으로 유지하려면 2020~2050년까지 640만 명의 이주민이 필요하다고 추정함.<sup>3)</sup>

3) <http://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ReplMigED/Korea.pdf>.(검색일: 2017. 06. 26.).

- 저출산 문제는 국적이탈 및 상실자가 귀화·국적회복자보다 많은 만성적 인구 순유출 현상과 맞물리면서 심각한 노동력 문제를 야기함.
  - 그에 따라 노동력 확보라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인력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고급인력의 해외진출과 해외잔류 경향 심화로 국내 노동력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고학력화와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현상도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 대학입학율이 70%이상 되면서 고학력화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노동력 구조의 이중성, 즉 고급인력 부문에서는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중소기업 부문에 필요한 기술·숙련인력과 비전문 인력의 노동력은 공급부족을 초래하여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mismatch)되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음.

## 라. 다문화사회 진입

-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착 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취학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이들의 교육 문제 등이 새롭게 부각됨.
- 다문화사회 진입과 관련하여, 단일민족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배타적 정서와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문화·생활양식 정립 노력이 혼재함.

## 3. 외국인 지원정책의 변천 과정

-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외국인 지원정책의 변천은 크게 시기와 정책 유형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됨.
  - 하나는 정부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어떤 지원정책들을 취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입국 관리, 외국인력, 다문화 등과 같이 정책 유형별로 분석하는 것임.

## 가. 시기별 외국인 지원정책<sup>4)</sup>

- 외국인 지원정책은 외국 산업인력이 유입되던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이래로 2010년대인 현재까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2005년부터 정부 정책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포괄하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정책의 추진이 시작되었음. 특히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입법 및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사업을 책정, 추진해 왔음(하종범, 2012 : 1).
- 정부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노무현정부 들어 각종 법제를 구축하면서 질적인 전환을 보였음.
- 따라서 시기별 외국인 지원정책은 참여정부 이전과 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1) 참여정부 이전

#### □ 제1·2공화국 시기

- 건국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고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며, 국제교류도 활성화되기 이전 시기였기 때문에 외국인의 유입은 물론 내국인의 유출도 거의 없었던 시기에 해당됨.
- 서구 열강의 침탈과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경험으로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배타적 감정 때문에 폐쇄적인 출입국 관리를 유지함.

#### □ 제3·4공화국 시기

- 근대화 달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간호사와 광부의 서독 파견, 베트남 파병 등으로 출입국관리 수요가 급증함.

4) 아래의 내용은 주로 김원숙(2012); 정명주(2012); 하종범(2012) 등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함.



-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출입국자의 증가로 사증발급제도의 확립,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위한 무사증입국제도의 도입 및 사증면제협정의 체결 확대, 한미행정협정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절차가 정립되었고, 1973년에는 대통령의 문호개방 선언이 이어졌음.
- 외국인 유입 문제를 국가 발전의 맥락에서 접근하면서 선량한 외국인의 입국은 적극 유치하고, 불순 외국인의 입국과 정주는 방지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 업무를 수행함.

## □ 제5공화국 시기

- 김포공항 등 전국 공항에 전산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출입국 관리를 효율화함.

## □ 제6공화국 시기

-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면서 이념을 초월하여 동포들에게 우리 사회를 개방함과 동시에 모든 나라에 문호를 개방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함.
- 1991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세칙’이 제정·시행되면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됨.
- 1980년대 말부터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한 중국동포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던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으면서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전개에 일조했고,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아시아 여성들도 증가하였음.
- 그러나 미시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외국인력 문제에 대처함으로써 이후 산업계의 심각한 인력부족과 국민의 3D업종 기피 현상과 맞물리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 □ 문민정부 시대

- 국가 시책으로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함.
- 국내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보다 확대하게 되고 이에 장기체류 외국인도 1994년 84,905명에서 1997년 176,890명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중 산업연수생이 1994년에는 약 2만여 명에서 1997년에는 9만여 명으로 증가함.
-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산업인력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 관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
- 1995년 초 네팔인 산업연수생의 명동성당 시위로 외국인근로자 문제의 심각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차원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 향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시도함.

## □ 국민의정부 시대

- IMF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국내 노동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외국인 인력정책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법취업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체하고 신규 산업연수생을 최소화하였음.
- 출입국관리 차원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신설하여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
- 특히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999) 제정을 통해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고려하였으나, 재외동포 중 중국동포와 구 소련 동포들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됨으로써 동포 문제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됨.
- 헌법재판소의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방문취업제’를 마련하여 중국 및 구소련 동포들이 고국을 방문하여 최장 5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함.

## 2) 참여정부 이후

### □ 참여정부 시대

- 노무현 대통령은 국제결혼이민자와 혼혈인 그리고 한국인 남성이 외국에서 여성과 동거하여 출생한 자녀 문제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민행정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지녔다고 평가되므로, 참여정부 시대는 한국 이민 행정사의 질적 전환을 이루는 분수령에 해당됨.
- 참여정부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종래의 통제와 관리 중심 정책에서 외국인의 처우 개선 및 인권 옹호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부처별로 단편적인 정책 추진에 그쳤던 것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정책과 이를 위한 총괄체계를 구축함.
- 다문화사회의 외국인정책 수행의 근거가 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등이 설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서 법무부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출범하였고,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
- 한편,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외국인 인력의 편법 활용, 사업체 이탈,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평가에 따라 2003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4년에 합법적인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인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음. 이어 2007년부터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고용허가제로 통합해서 저숙련 외국인 인력의 고용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

### □ 이명박정부 시대

- 이명박정부 하에서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거하여 2008년 12월 17일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 질서 확립’을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함.
- 외국인정책의 비전을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 일류국가’로 정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한 4대 목표와 13대 중점과제를 확정하였음.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회에 걸쳐 중앙행정기관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함.
-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2010년에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였음.
- 2009년에 사회통합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같은 해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도 5대 역점사업 분야의 하나로 다문화의 포용과 외국인에 대한 배려를 설정하고 우선 추진 10대과제 중의 하나로 따뜻한 다문화사회 만들기를 선정함.

## 나. 정책 유형별 외국인 지원정책

- 국내유입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건국 이후 여러 단계로 발전해 왔음.
- 외국인 지원정책은 이(주)민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며, 국가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의 입국, 체류, 출국을 관리함으로써 이민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이민정책은 연구자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이혜경(2010)에서는 출입국관리정책, 외국인력정책, 사회통합정책으로 나누고, 이선미(2011)에서는 이민유입정책, 사회통합정책, 국경관리정책으로 나누며, 김이선 외(2011)에서는 출입국정책, 이주관련정책(이주관리정책, 다문화사회정책)으로 나누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선미(2011)의 구분에 따라 출입국관리정책, 외국인력정책, 사회통합정책(또는 다문화사회정책)으로 구분하여<sup>5)</sup> 분석하였음.

5) 이러한 구분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분절적이고 단절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정책은 연속하여 지속되지만 다른 정책의 등장에 따른 선택과 집중 등으로 정책의 우

## 1) 출입국관리정책

- 출입국관리정책은 국민·영토·주권이라는 요소를 기반으로 성립된 국민 국가의 등장과 함께 외국인의 입·출국과 관련된 국경통제의 성격이 강한 정책임.
  - 1980년대 초까지 한국은 적극적으로 해외에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였음. 이 당시까지 국내유입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내 입국 방문자 및 관광객 등을 위한 출입국 관리업무가 주종을 이루었음(하종범, 2012 : 4).
- 한국의 출입국 관리정책은 제1공화국에서 제4공화국을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형성, 정착되었으며(조원탁 외, 2012 : 188), 관련 행정 업무도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었음.
  - 협소한 국토와 빈약한 자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선진 외국의 기술을 유치하고 수출을 진흥하며 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상반된 두가지의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따라서 외국 인력에 대한 출입국관리의 기본방향은 전문 외국 인력의 유치와 단순 기능 인력의 입국 제한이었음. 이러한 출입국관리의 기본방향은 국민의 정부시대까지의 출입국관리 행정의 기초였음(김원숙 2012 : 25).
- 출입국 관리행정은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에서 본격적인 발전기를 맞이하게 됨.
  - 출입국 관리행정의 조직과 인원이 개편되고 중국 동포와 외국 인력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출입국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음.
  - 그러나 이 당시에 취해진 출입국관리정책은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계기로 사회질서가 재구성되는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어려움.
  - 반면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관리, 영주권 및 국적 업무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유입인구와 한국사회의 관계를 설정하고 사회구성원을 범주화하기

---

선순위가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함(하종범, 2012 : 4).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관련 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하중범, 2012 : 4~5).

- 1990년대 이전까지 출입국관리정책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 문제는 중요한 정책 이슈로 간주되지 못했음.
- 외국인 출입국자가 많아지고 국내 체류 활동이 확대되면서 산업연수생에 대한 처우나 불법취업 외국인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의 인권보장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함.
- 특히 1995년 1월 네팔 산업연수생 농성은 외국인의 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음.
- 문민정부는 산업연수생에게 국내근로자에 준하는 각종 조치를 취했고, 국민의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의 인권침해와 차별방지에 노력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인권 논란이 지속되다가 마침내 참여정부에서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산업연수생 관련 인권 논란이 종식됨.
- 그리고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인권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함.

## 2) 외국인력정책

- 외국인의 유입과 관련된 정책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인력수출국가에서 이주 노동력 유입국가로 탈바꿈하게 됨.
- 인력수요의 증대에 따라 1991년 11월 해외투자업체의 현지 고용 인력의 유입이라는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를 도입하였고, 1993년 11월 추천단체에 의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로 확대됨.
- 당시 정부는 단순 노무인력으로 분류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건에서 입국을 허용하고 체류하도록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외국인인력정책의 단초가 됨.
- 반면 '산업연수생제도'는 입국자격, 거주기간, 취업분야 등을 제한하고 입

국 후 체류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 이동횟수 등 노동조건에서도 상당히 규제적 입장을 취하는 제도였음.

- 산업연수생제도는 중소 3D업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은 되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편법 활용한 정책적 한계 때문에 연수생의 작업장 이탈과 그에 따른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옴(하중범, 2012 : 5).

○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8월 ‘고용허가제’와 종전의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함.

- 두 제도의 병행은 외국인근로자 간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함. 그에 따라 2005년 7월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확정함.

○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요구,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헌법소원, IT산업 등에서 전문 인력의 효율적 유치 필요성,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한 국제결혼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남.

- 또한 외국인력 가운데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한국인과 특별한 관계성을 인정하여 2007년부터 ‘방문취업제’라는 별도의 제도를 시행하였음.
- 이 외에도 최근에는 유학생이나 전문 인력이 유입차원의 정책의제로 통합되어 과학기술부(Study Korea)와 지식경제부(Contact Korea)에서 추진되고 있음.

○ 외국인 유입과 관련한 정책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인력구조를 고려해 국내 노동시장의 부족분을 외부로부터 공급하는 정책인데, 이는 인구노동정책의 성격이 강하며 인력을 중심으로 이주자의 양과 질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이주관리정책’으로도 볼 수 있음.

-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이주자 등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출입국 관리차원에서 국가 이익의 보호와 외국인 인권 보호의 조화에 목표를 두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 한편, 비합법적으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열악한 근로조건, 폭력 문제 등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음(하종범, 2012 : 6).

### 3) 사회통합정책

-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다수의 이주민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국내 유입 인구에 대한 정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됨.
- 한국인과 외국인,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과정에서 인권침해, 결혼과 국내입국 이후 가족 간의 갈등, 자녀 성장과 교육 등 사회적 관심사가 현안으로 대두되자 이들을 정부의 현안 정책과제로 설정되게 되었음.
- 이러한 정책적 인식 전환은 그동안 외국인 정책이 통제와 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외국인의 처우개선, 인권옹호, 사회적 관계증진 등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통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필요성에 부응한 결과임.
- 2005년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생활적응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고, 2006년에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이 발표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이 제시되어, 다문화사회의 개념이 공공정책 차원에서 공식 의제로 설정되어 추진되기 시작했음.
-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 개념이 공공정책에서 본격적으로 채택되자 다문화사회정책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함.
- 출입국관리정책과 외국인력정책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각종 문제에 대응하고 문화적·종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적합한 사회질서를 만들어 갈 사회통합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와 관련한 정책은 제도적·일상적 차원에서 국내유입 인구를 사회구성원으로 수용하고 이들의 증가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사회·문화 질서를 새로 구축해 가는 것이 포함되는데 관련 지원정책은 인권, 복지,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음.
- 다양한 자격으로 국내에 유입하여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문화적·종족적 차이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직면하는 어려움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이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질서를 확립해 가는 것이 필요하므로, 여기에 사회통합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됨.
-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정책이 그 하위의 핵심부분을 이루고 있음.
- 한편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기본법」도 다문화사회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사회통합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다. 외국인 지원정책의 특징과 평가

- 우리나라에서는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2007년을 전후하여 외국인 지원정책이 체계화되기 시작함.
- 그에 따라 학계에서는 다문화정책, 이민정책, 교육, 문화, 고용, 가족 등 특정 분야별 정책, 소수자 정책, 외국인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했고, 정부기관에서도 이민, 고용, 교육, 복지, 문화 등의 분야별로 다문화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부처별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함(정명주, 2012 : 88).
- 이후 관련법령들이 정비되면서 다문화정책 관련 각 부처가 소관 법률에 의거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외국인 지원정책 추진이 본격화됨.
- 한편, 그동안 정부가 취해 온 외국인 지원정책은 국내유입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몇 가지 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변화·발전함

- 정부가 그동안 취해 온 외국인 지원정책은 출입국관리정책, 외국인력정책, 사회통합정책 또는 다문화사회정책으로 병행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
- 외국인 지원정책은 종래의 단순한 질서유지 차원의 출입국관리에서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통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갖는 것으로 질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음.

<표 II-2> 국내 유입 인구에 대한 지원정책과 전개 과정

구분	출입국관리정책	외국인력정책	사회통합정책
시기	1990년 이전	1991년 이후~	2000년 중반 이후~
정책환경	국경유출입 관리	이주노동자 증가	결혼이민자 등 국내유입인구 증가
정책목표	유입인구의 적법관리	외국인력관리효율/ 국민경제의 발전	결혼이주민의 정착 지원/외국인 체류지원 및 사회통합 지향
정책대상	출입국자	외국인력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혈연관계)
법률	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관련제도	출입국관리제도	산업기술연수생제/ 연수취업제/취업 관리제/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방안/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08~12)/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10~12)
정책 서비스	출입국관리	입·출국/외국인 근로자 적정관리	합법적 체류자: 한국어교육, 다언어서비스, 차별시정, 인권보호 등/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대상: 취업지원, 건강관리, 가족관계증진, 자녀성장지원 등
현안	불법체류관리	외국인근로자 인권문제 등	유입인구의 다양성과 관리문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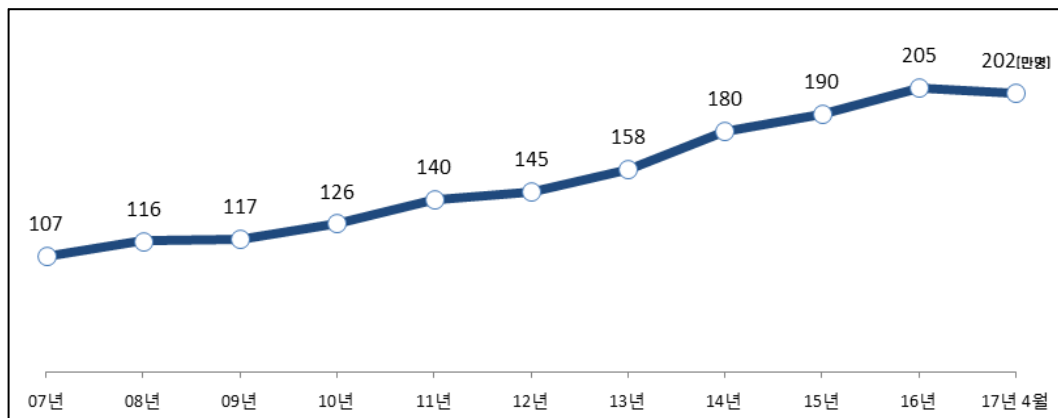
출처: 하종범(2012 : 7).

- 정부는 유입인구관리를 출입국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오다가 최근 들어 법무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관리 차원으로 확장시켜 왔음.
- 이제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은 크게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으로 그 정책의 추진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됨(정명주, 2012 : 89).

## 4.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및 주요 지원정책

### 가. 현황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유형도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다양함([그림 II-3] 참조).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 13).

[그림 II-3]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2007~2017. 04.)

-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매월 발표하는 최근 자료에 따라 체류외국인 현황, 체류외국인의 자격별 현황, 결혼이민자 현황, 외국국적 동포 현

황, 외국인 유학생 현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 4월말 기준).

### 1) 체류 외국인 현황

- 2017년 4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024,813명이며, 이 중 외국인 등록자는 1,142,446명, 외국국적 동포는 382,749명, 그리고 단기체류자는 499,618명임.
  - 국적별로는 중국이 48.6%(984,771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7.7%(155,553명), 미국 7.3%(147,440명) 등의 순임.
  - 외국인 유학생은 123,462명이었고, 국민의 배우자, 즉 결혼이민자는 153,672명이며,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자는 382,749명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수도권에 694,582명(60.8%)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 218,183명(19.1%), 충청권 115,820명(10.1%), 호남권 77,722명(6.8%) 순으로 거주하고 있음.

### 2) 체류 외국인의 자격별 현황

- 재외동포(F-4)가 387,536명(19.1%), 비전문취업(E-9)이 267,274명(13.2%)이며, 방문취업(H-2) 241,639명(11.9%), 영주(E-5) 133,167명(6.6%), 유학(D-2) 83,001명(2.0%) 등임.
  -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572,619명인데 이 중에 단순기능인력(E-9, H-2, E-10)은 524,357명이며, 단기취업(C-4)과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E계열의 체류자격을 포함하는 전문인력은 48,262명임.
- 전문인력 중 가장 많이 논의되는 취업비자는 특정활동(E-7)비자임.
  - 이 비자의 체류외국인은 2010년 10,712명에서 2017년 4월 현재 20,166명으로 지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음.
  -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은 전문인력 66개 직종, 준전문인력 8개 직종, 숙련기능인력 8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전문인

력은 8,364명, 준전문인력은 10,476명, 그리고 숙련기능인력은 1,326명임.

### 3) 결혼이민자 현황

-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이민자의 규모도 증가해 왔음.
- 2017년 4월 말 현재 외국인 배우자는 153,672명이며, 혼인귀화자 116,588명을 포함할 경우 27만 명에 이룸.
- 외국인 배우자는 남자(24,376명)보다 여자(129,296명)가 5배 이상 많으며, 중국(한국계 포함)이 57,226명, 베트남 42,080명, 일본 13,231명의 순으로 나타남.

### 4) 외국국적 동포 현황

- 외국국적 동포는 방문취업제도 도입 및 재외동포에 대한 문호개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여 왔으며, 2008년 421,000명에서 2017년 4월 말 현재 781,238명으로 증가했음.
- 외국국적 동포를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F-4) 387,536명, 방문취업(H-2) 241,639명, 영주(F-5) 88,168명, 방문동거(F-1) 27,644명, 기타 36,251명임.
- 이들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이 652,73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국 45,791명, 캐나다 15,991명, 오스트레일리아 4,610명 순임.

### 5) 외국인 유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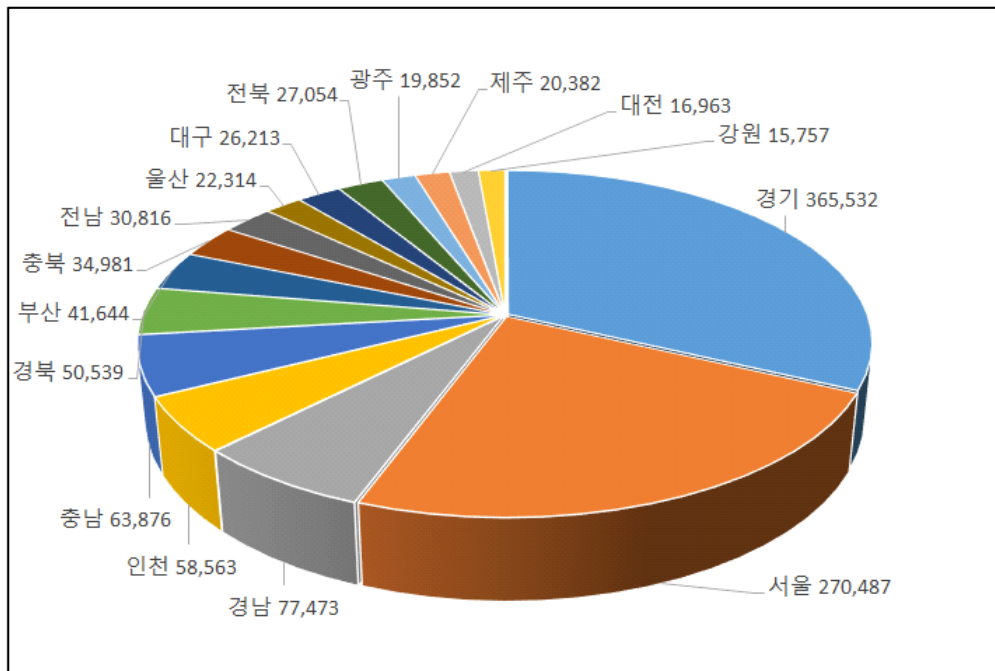
- 2017년 4월 말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123,462명으로, 이 중에 유학(D-2)이 83,001명, 한국어연수(D-4·1)가 40,447명, 그리고 외국어연수(D-4·7)가 14명이며, 전년대비 19.3% 증가함.
- 외국인 유학생 추이를 2011년 이후를 중심으로 보면 한국어 연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규 유학생은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다시 증

가하여 2017년 4월 말 현재 83,001명이 체류하고 있음.

## 6) 시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

○ 2017년 4월 말 현재 등록 외국인이 각 지역별로 거주하고 있는 현황은 [그림 II-4]와 같음.

-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로 365,532명(31.9%)이고, 그 다음이 서울시로 270,487명(23.7%)이며,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하면 등록 외국인의 55.7%가 수도권에 거주함을 알 수 있음.
- 2개의 지역을 제외하면 외국인 거주지역은 경남, 인천, 충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역 간에는 큰 차이 없이 제주도에 이르기 까지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 16).

[그림 II-4]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 현황

## 나. 외국인 주요 지원정책

- 국내 유입 인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으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동법 제1조)은 재한외국인의 적응 및 능력발휘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그렇지만 이 두 법률은 모두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 목표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기본계획 내용을 분석하였음.

###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외국인정책’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게 되면서 법무부가 주관이 되어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법무부는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근거로 5년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현재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등이 수립되었으며, 각각의 수립 배경과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구분	1차 기본계획(2008~2012)	2차 기본계획(2013~2017)
비전	·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 일류 국가	·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기본 방향	· 개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 · 우리 사회를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발전 ·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를 확립	·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
주요 과제	·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질 높은 사회통합 ·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 외국인 인권옹호	[개방]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향후 5년간 시행될 외국인 정책을 반영하고 있음.

- 비전은 국민 공감 외국인정책, 조화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함.
- 정책 대상은 단기방문자(관광객)~단기·장기체류 외국인~이민배경국민(귀화자 및 이민자 2, 3세) 및 일반 국민에 두었음.
- 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은 국익 우선, 통합의 쌍방향성, 보편성, 지역성, 국제성, 민간 참여 제고 등에 있음.
- 중점 과제로는 전략적 이민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안보가 담보되는 국경관리 및 체류 질서 확립, 공동가치의 존중과 국민과 이민자의 쌍방향적 통합 강화, 차별방지, 인권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통한 국격 제고, 이민협력을 통한 국제공동발전 기여, 협치 강화를 통한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선정함.



##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2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기본방향,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 제도 개선,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됨.
-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기반 마련
-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생활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 정부에서는 1·2차 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차 기본계획은 2017년 말까지 수립할 예정임.

구분	1차 기본계획(2010~2012)	2차 기본계획(2013~2017)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관련 통합적 지원체계 확립</li> <li>· 분야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li> <li>·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가족·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패러다임 재구성</li> <li>· 다문화가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처, 지자체간 협력·조정 강화</li> </ul>
비전	·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 국가 구현	·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li> <li>·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li> <li>·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li> </ul>

## 3) 입국 및 체류 절차와 외국인 지원정책

### ☐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절차

- 국내로 들어오는 유입인구, 즉 외국인은 체류와 정주 과정에서 국내법과

정책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입국 후 체류 중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입국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활동을 해야 함. 입국 및 체류 과정에서 국내 유입 및 체류 외국인들은 다음의 행정 절차들을 거쳐야 함(하종범 2012 : 33).

- 사증발급과 입국허가를 위해서는 외국인이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VISA)이 필요함.
  - 외국인은 공항이나 항구에 소재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입국할 수 있음.
  - 사증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지만 해외 공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 체류허가 취득은 외국인이 입국 허가를 받아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음을 뜻함.
  - 체류 자격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정부는 우수해외인력 유치, 방문취업제 근로자, 재외동포 등에 대해 거주 자격 부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 외국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입국 일자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코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과 함께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됨.
- 외국인의 국내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입국한 외국인, 그중에서도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들은 체류자격에 합당한 활동으로서 관광·연수·유학·취재·연구·거주·취업 등을 할 수 있음.
  -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 중에서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수(E-1)로부터 특정활동(E-7)까지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관광취업(H-1) 등임.

## □ 외국인 지원정책

- 국내 체류 자격이 인정된 외국인들은 현행법에 따른 두 가지 유형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하종범 2012 : 33).
  - 하나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을 위주로 하는 서비스로서, 한국어교육 등 적응 지원, 다언어 서비스, 차별시정, 인권보호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통합서비스임.
  - 다른 하나는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과 같이 특정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취업 지원은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 등 적극적인 사회통합 대상자들에게 제공되고, 건강관리는 결혼이주민에게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환경 보호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가족 관계나 자녀세대 성장 문제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게만 제공되고 있음.
- 현행 외국인 지원정책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책 서비스를 정책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기보다는 소관 부처별로, 유입 대상별로 독립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제공하고 있음.
  - 유입 인구는 관계법과 정책목적에 따라 대상별, 체류자격별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구별되는 정책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예컨대, 결혼이민자나 재외동포 등은 정주 및 사회통합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 난민 등은 사회통합 서비스 제공보다는 입출국과 관련한 제도와 지원, 체류기간 동안에 직면하게 되는 고충 해결 등 생활환경 조성 및 기본적인 인권보호 차원의 지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하종범 2012 : 33).
-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 외국인정책은 법무부 이외에도 여러 중앙 행정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기본계획 상에 명기되어 있는 소관부처는 법무부 이외에도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행정안전부, 보건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임.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경우도 여성가족부 이외에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다문화적 상황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법무부 주관의 외국인 정책과 여성가족부 주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들 수 있음.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중앙 행정기관들은 각 조직의 고유 기능을 고려하여 다문화적 상황에 필요한 관련 정책을 기획하여 외국인정책 혹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등에 포함시켜 소관부처로서 추진하고 있음(정명주 2012 : 96).

#### 4) 외국인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동법 제1조에 규정된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6조 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도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근거하여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토대로 2009~2012년까지 5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자체들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오고 있음.
- 제18조에서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이나 체류에 관한 사항은 월경(越境)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고유사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이미 입국한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실질적 단위체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도 외국인 정착 및 사회통합에서 지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2007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했고, 2010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편람」을 작성, 배포했음.
  - 2011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전담부서·인력확충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전담부서·인력확충 방안」(2011)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 취지

- 지자체가 외국인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및 인력조정 방안으로, 이를 통해 중앙과 연계 강화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함.

#### □ 기본 방향

- 기능에 따라 실·국(과)에서 분산·수행하는 외국인 지원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추진체계 일원화
- 소요인력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존 외국인업무 지원부서의 담당인력을 이체·활용

- 행정수요 감소부서 인력활용, 다문화 지원수요에 따라 단계별 확충

#### □ 전담부서 설치

- 시·도
  - 외국인 주민 수 5만명 이상 또는 주민등록인구대비 비율이 2.5% 이상인 시·도(6개)는 ‘과(課)’ 단위(12명 내외) 전담부서 설치
  - 기타 시·도는 5급 1명을 포함한 정원 4명 내외 전담부서 설치
- 시·군·구
  - 외국인주민 3만 명 이상 또는 주민등록인구대비 비율이 10% 이상인 시·군·구(6개)는 ‘과(課)’ 단위(12명 내외) 전담부서 설치
  - 외국인주민 1만~3만 명 또는 주민등록인구대비 비율이 5~10%인 시·군·구는 6급 1명을 포함한 정원 4명 내외 전담부서 설치

#### □ 인력 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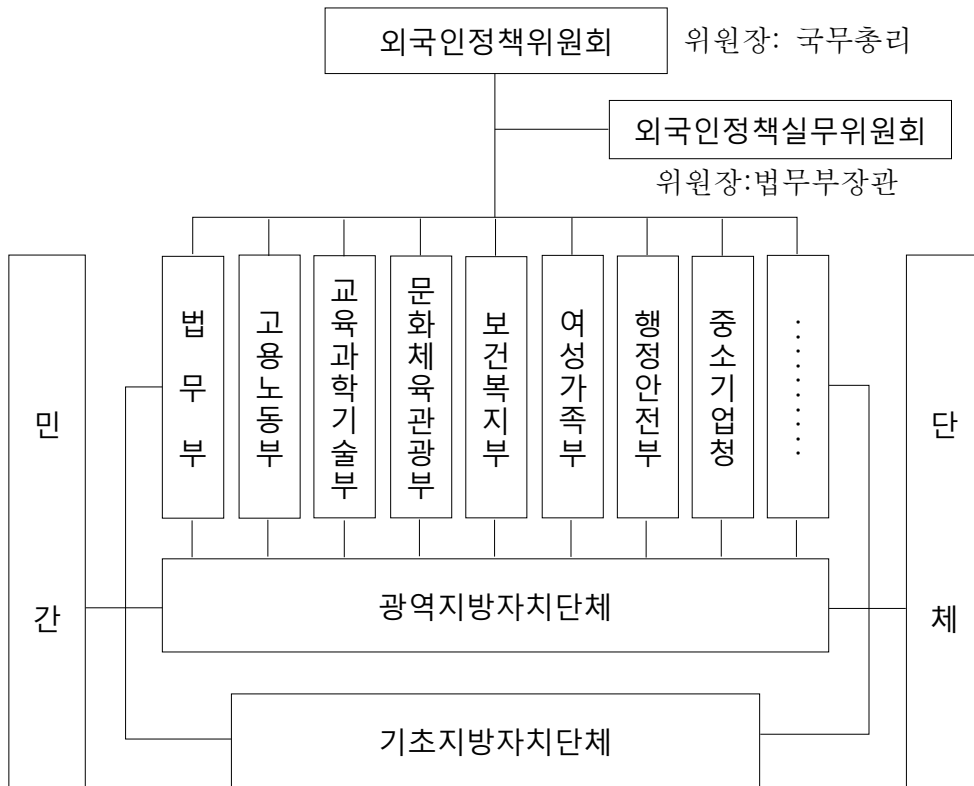
- 시·도 전담부서 정원은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
- 시·군·구 전담부서 정원은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감안, 외국인주민 수 2,500명을 기준으로 1명씩 산정하여 책정

○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 체류, 정착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지역적 토대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내로 들어와 지역사회에 정착하며, 그 과정에서 도시나 지역사회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를 겪게 되고 이것이 점차 국가사회 공간 전반에 변화를 유도하게 됨(최병두, 2012).
- 일본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다문화 공생’도 중앙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다문화공생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상황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음(정미애, 2011).

- 따라서 외국인의 정착과정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체는 지역 주민, 기업, 단체 그리고 지방정부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정책의 효과는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문화사업들은 지역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역할을 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조석주, 2007).
- 국제화를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면서 지방정부의 대외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열린 지역사회’를 만들어 ‘내향적 국제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강희원, 2007 : 81).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법률적 근간을 두면서도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제화를 지향하는 지방정부의 대외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반면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열정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영역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각급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영역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해야 할 것임. [그림 II-5]는 다양한 조직의 협력체계를 보여줌.



자료: 정명주(2012 : 99).

[그림 II-5]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

## 5. 외국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 가. 법률 및 정책 간 중첩으로 업무와 사업의 중복과 경쟁

- 국내 유입 인구와 관련된 기본계획으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근거로 한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있음.<sup>6)</sup>
- 이들 관련 법률과 계획들은 고유의 추구하는 목표와 사업들이 있지만 장

6) 이외에도 국내 유입인구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이 있음.



기적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정책은 그 대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유사성과 중첩성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국내로 유입된 인구를 ‘외국인’이라는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예를 들면, 외국인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가족성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외국인 투자자 등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에서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정책 대상이 상호 중첩된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국적취득 이전의 결혼이민자와 자녀는 외국인정책의 대상이면서 다문화가족정책의 대상이기도 함.

- 추진 사업 측면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세부 사업들은 많은 부분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속에 포함되는 경향을 보임(하종범, 2012 : 69).

○ 국내 유입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과 정책의 상호 중첩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중복이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임.

-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소관 법령에 따라 제각기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장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업무의 중첩이나 사업 중복 등으로 비효율이 나타나게 됨.

## 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분담의 한계

○ 2000년대 들어 이주민 통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면서(정기선 외, 2012 : 1)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와 정책이 확산됨.

- 행정안전부는 2007년과 2010년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

착지원을 위한 업무 편람을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역할 분담을 강조한 바 있음.

- 2011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전담부서·인력확충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기도 했음.
-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와 생활인으로서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포괄적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한 것임(정기선 외, 2012 : 1).
- 반면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지침은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큰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서울, 경기 및 안산 시와 같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추진되고 있음.
- 전담 부서 없이 몇 개의 부서로 나뉘어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외국인정책에 따른 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따른 사업이 중첩됨으로써 업무 및 사업상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나타남.

## 다. 외국인정책의 통합·조정을 위한 거버넌스의 미확립

- 외국인정책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들이 다양한 사업을 놓고 예산과 주도권, 성과를 둘러싼 경쟁을 하고 있음.
- 정부 부처들 간의 경쟁에 따라 관련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 집행을 위해 여러 기관들이 조직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이수기관,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터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남.
-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 내에서 외국인정책 관련 거버넌스체제가 비효율적이면서, 일선 집행 기관들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업무와 사업의 중복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업무집행은 지방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 등을 통

해 이루어지며, 중앙부처 간의 경쟁과 갈등은 지역 차원의 업무집행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경우, 외국인복지센터(수원시, 시흥시, 화성시 등)를 통해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미등록체류자 포함).
  - 교육부의 경우 교육청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경우 산업인력공단, 외국인지원센터나 외국인인력상담센터에서, 여성가족부의 경우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위임 혹은 위탁기관을 두고 있음(하종범, 2012 : 76).
  -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조정하는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정책을 전담하는 통합 부서의 설치와 관련 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여전하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조정의 필요성도 여전한 문제임.
- 따라서 외국인 지원체계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통합 지원부서의 신설 및 인력의 확충과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Ⅲ. 국내 외국인 지원조직의 유사사례 분석

### 1. 외국인 지원정책 및 전담조직 설치 관련 선행 연구

- 이 절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전담조직 설치 방향을 제시한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선행 연구로는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김상우 외, 울산발전연구원, 2012), 『대전지역 체류이주민 현황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2016), 『대구 외국인근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오창균·안지민, 2008),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방안』(이동기 외, 전북발전연구원, 2010) 등이 있음.
-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물에는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의 연구가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였음.
- 외국인인력지원센터 설치 관련 결과물에는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의 연구가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중심의 지원 정책 방안을 다루었음.

### 가. 울산시의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sup>7)</sup>

#### 1) 연구 목적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 외국인주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울산지역 실정에 맞는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함.

7) 김상우 외,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울산발전연구원, 2012)을 참조하여 정리함.

- 또한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에 대한 맞춤형 시책개발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의 구성원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지역의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2) 울산 거주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분석

- 2012년 기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1,400명(대략 3,600세대)으로 전체 주민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울산거주 외국인들의 정책요구를 수렴·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한국어교육의 중요성, 근로환경의 개선 문제, 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 정책적 개선사항으로 도출됨.
- 다문화가정 자녀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급우 및 부모 등과 의사소통 강화 등이 정책적 개선사항으로 도출됨.

## 3) 정책 제언

-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 연계 사업
- 외국인과 결혼한 남성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다문화교실 운영(교육청)
- 외국인주민을 위한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 전문 의료 통역 서비스 도입 및 시행
- 이주민가족과 함께 하는 다문화 영상 여행

- 이주민 한글 백일장
- 결혼이민자 자원봉사단 구성 및 지원
- 다문화거리 조성 시범사업 시행
- 다문화 교육 홈페이지 제작·운영(교육청)

## 나. 대전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와 정책 방향<sup>8)</sup>

### 1) 연구 목적

- 대전지역 이주민의 규모가 증가하고,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이주민 유형이 확대되고 있음.
  - 지역주민의 인구학적 변화와 지역 내의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 확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 및 이주민 정책이 요구됨.
- 대전지역 이주민 현황 파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이주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2) 대전지역 이주민 현황

- 대전지역 내국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주민 유입의 꾸준한 증가로 인구 감소 추세는 201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함.
  - 대전지역 내국인 수의 감소세를 늦춰준 것은 외국인주민, 이주민의 꾸준한 증가로 볼 수 있음.
  - 2012년 대전시민 104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주민은 2016년 3월 90명당 한 명으로 증가함.
- 대전시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유성구(6,636명)로 조사됨.
  - 유성구의 이주민은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고,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는 결혼이민자(여성)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8) 류유선, 『대전지역 체류이주민 현황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대전세종연구원, 2016)를 참조하여 정리함.

### 3) 대전지역 다문화 또는 이주민의 특성

- 대전지역 이주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전지역의 다문화, 이주민 관련 정책 현황과 평가, 향후 필요한 정책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다문화 관련 공무원 6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5명, 이주활동가 5명, 총 16명임.
- 대전시는 충남의 인근 지역과 달리, 노동형태와 사회·문화·교육·건강 서비스 인프라 및 접근성 차원에서 '도시형' 다문화로 개념화할 수 있고, 대전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도시형 다문화정책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
-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내적 다양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사별과 이혼, 별거 등으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도 증가하고 있고, 이주노동자 가족, 난민가족 등 다문화가족의 결합방식과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음.
- 이주 아동들이 증가함에 따라 공교육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및 학교문화 적응 프로그램과 함께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현장의 인식개선도 시급함.
- 대전지역의 영세 제조업 및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미등록 포함) 및 이들 가족에 대한 의료·건강·교육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약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여성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들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문제에 있어서 남성에게 비해 취약하므로, 법률적 상담이나 심리적 상담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
- 또한 대전지역 체류이주민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은 유학생에 대한 중·장기 정책 필요성이 제기됨.

#### 4) 정책 제언

-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다문화’ 정책에서 이주아동(중도입국 자녀, 해외 장기체류 아동, 난민, 미등록 이주 아동 등), 이주노동자(미등록 포함), 유학생, 난민 등 대전지역 체류 이주민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학업, 노동, 결혼 등 이주 목적에 상관없이 대전에 체류하는 이주민을 지역민으로 수용하는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며,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전지역 이주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중장기 이주민정책을 생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주민 실태조사가 필요함.
- 또한 지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차이와 다름을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인정하고 승인하는 지속적인 다문화인식 개선 운동과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중요함.
- 여성 결혼이주민, 여성 이주노동자, 여성 유학생 등 여성 이주민을 위한 심리 상담 전담이 가능한 지원센터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다. 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sup>9)</sup>

#### 1) 연구 목적

-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사회 부적응이나 소외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체류하는 지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활발한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마련은 지역 외국인근로자 인권 신장,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제고뿐만 아니라 대구의 도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봄.
- 고용허가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언어·문화·법률 등의 이해가 부족한

9) 오창균·안지민, 『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대구경북연구원, 2008)을 참조하여 정리함.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공적 차원의 체계적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수적임.

## 2) 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 구상

- 대구·경북 체류 외국인근로자는 2008년 2월 현재 27,016명(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내부자료)으로 전국의 5.8%에 해당함.
  - 2000년 이후 연평균 4.0%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함.
  - 비전문취업이나 연수취업과 같은 일반 고용허가제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07년 12월 현재 17,654명으로, 2005년 이후 매년 3천여 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례 고용허가제로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2007년 12월 현재 5,099명으로 2006년에 비하여 152.4% 증가하였음.
-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 및 단체 현황
  - 대구광역시의 경우 시청 내 기업지원본부 국제협력팀과 경제정책팀에서 사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담당함.
  -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 대구지부에 외국인지원 전담팀(4명)을 설치함.
  - 구미시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축제 및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내 외국인근로자 정보자료실·상담센터·쉼터 등을 지원함.
  - 지역별로 외국인노동상담소, 성서이주노동자센터, 대구 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등의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
- 설립 방향
  - 대구·경북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향상 및 안정적 사회 적응 지원, 기업하기 좋은 지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조화로운 노사관계 정착과 성숙한 다문화사회 형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심시설을 구축함.

- 외국인근로자 기본자질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및 귀환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산업안전교육,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능력 개발의 물적 기반을 마련함.
- 지역 공공기관과 외국인지원 민간단체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상호보완적 발전을 추구함.
- 대구지역 외국인근로자의 다양한 문화욕구 해소와 편의 제공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종합지원 시설 건립
- 공적 서비스 수혜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생활의 질을 개선함.

○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

- 2008년 8월부터 7개월 간 임시 설치 상태로 운영함.
- 장기적으로 노동부 지원이 가능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2009년까지 건립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함.
- 운영비는 2008년 하반기의 경우 4억 7천 여 만원을 확보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일정 규모의 지원 가능함을 보장함.
- 센터 설립계획안으로는 기업친화형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주민통합형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이 제안됨.

### 3)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방향 모색

○ 기업친화형

■ 추진 방향

- 기업의 능동적 참여 유도를 위한 경영자 집단 역할 확대
-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통한 산업평화 달성
- 특성화 및 차별화 지향을 통해 센터 운영의 신모델 제시

■ 장단점 분석

- 장점 : 관용성 과시, 프로그램 효율성 극대화
- 단점 : 집객력의 한계, 인권보호 후퇴에 대한 우려

<표 III-1> 대구시 기업친화형 센터의 조직구성 및 인원계획

구분	계	센터장	1급	2급	3급	계약직
센터장	1	1	-	-	-	-
사무국장	1	-	1	-	-	-
운영·지원팀	4	-	-	1	3	-
상담통역팀	12	-	-	1	4	7
교육문화팀	6	-	-	1	3	2
계	24	1	1	3	10	9

○ 주민친화형

■ 추진 방향

- 적극적인 개방 : 주민의 지역문화 인프라로 활용
- 다문화 생산거점화 : 주민·외국인근로자·기업 간 문화 결합을 통한 공동체 형성
- 기관 간 공동협력 체계화 : 시민단체·기업·행정기관의 3자 공동협력 유도

■ 장단점 분석

- 장점 :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 자세, 활발한 교류 가능
- 단점 : 주민 인식 부족, 다문화거리 조성 지연

<표 III-2> 대구시 주민친화형 센터의 조직구성 및 인원계획

구분	계	센터장	1급	2급	3급	계약직
센터장	1	1	-	-	-	-
기획경영팀	4	-	1	1	2	-
상담·통역팀	11	-	-	1	3	7
교육팀	4	-	-	1	1	2
다문화지원팀	3	-	-	1	1	1
정보미디어팀	3	-	-	1	1	1
계	26	1	1	5	8	11

#### 4) 프로그램 운영 계획

##### ○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

- 해피 콜 센터(Happy 1 Call Center), 주말 법률상담소, 찾아가는 상담·통역서비스, 응급지원 '핫 라인 서비스' 운영

##### ○ 사회 적응능력 제고

- 한국어학당, 컴퓨터교실, 대구·경북 문화체험단 운영, 컬러풀 외국인 거리축제 개최, 결연사업 '후원가족 만들기 프로그램' 등 운영

### 라. 전라북도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방안<sup>10)</sup>

#### 1) 연구 목적

##### ○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을 강화하는 추세임.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민간 부문과 협력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확충 및 공간 확보, 그리고 관련 예산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함.

##### ○ 특히 호남권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문제가 인근 지역과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라북도지역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가 시급함.

- 중·장기적으로도 인구구조의 변화 및 그로 인한 기능 인력의 부족 현상이 예상되면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호남권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이 요구됨.

10) 이동기 외,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방안 연구 용역』(전북발전연구원, 2010)을 참조하여 정리함.

## 2) 전북지역 외국인근로자 지원의 특성과 한계

### ○ 정부 차원의 지원 부재

- 외국인 밀집 지역을 제외한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편임.
- 전북지역은 단편적 서비스 제공에 국한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취약한 편임.

### ○ 민간단체 활동 역량의 한계

- 기존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주로 민간단체 및 기관에 의존해 왔으나 인력, 재정, 하드웨어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음.
-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은 인권뿐만 아니라 체류역량 강화지원, 고용지원, 그리고 본국으로의 귀국지원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 전북지역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구심적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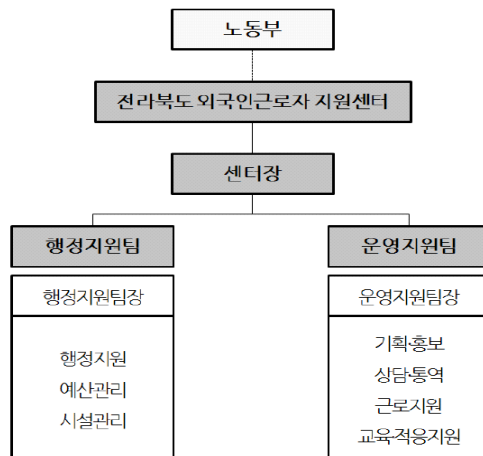
- 외국인근로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기관 및 단체들 간의 연계·협력 체계의 부족과 통합적 관리 및 조정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로 서비스 중복과 연계성 부족의 문제가 나타남.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관련 업무의 통합·조정과 민간기관들의 자원 및 서비스 역량을 보다 체계화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의 성과를 제고해야 함.

### ○ 정부 차원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필요

- 전북지역은 정부 차원의 지원 및 관심부족, 민간단체 및 기관들의 역량 한계로 인한 서비스 중복 및 전문성 결여, 국가적 외국 인력 정책 방향성과의 괴리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임.
- 전라북도는 정부 차원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센터의 설립을 통해 정부 차원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기대함.

### 3)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방안

- 전북지역의 외국인 현황을 보면 2009년 기준, 외국인근로자는 전체 7,597명이며, 이 중에 남성이 5,829명이고 여성이 1,768명임.
  -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군산시 1,713명, 전주시 1,097명, 익산시 1,329명, 남원시 313명, 김제시 645명의 순으로 나타남.
  - 체류자격별로는 전문인력 967명, 단순기능인력 6,252명 등임.
  - 취업 현황은 883개 업체에 7,597명이 취업해 있으며, 산업연수생은 3,543명, 기타 근로자는 4,054명임.
- 설립 필요성
  - 전북지역은 잠재 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김제자유무역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풍력산업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단지 등의 국책사업이 예정 또는 추진됨.
  - 이에 외국인근로자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으며, 그 중의 하나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큼.
- 설립 방향
  - 공공재로서 형평성, 기 추진사업의 수용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운영인력의 전문성, 장래 확장성 등이 설정됨.
- 센터의 조직 구성



[그림 Ⅲ-1]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조직도

- 이 센터는 센터장 1명, 행정지원팀 6명, 운영지원팀 12명 등 총 18명의 인력 확보를 제안하였음.

<표 III-3>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인력 및 업무분장

구분		인력 (18명)	주요업무
센터장		1	업무총괄 및 관리
행정 지원 팀 (6)	행정지원팀장	1	행정지원 업무총괄 및 관리
	행정지원	2	인사관리, 노무관리, 후생복지
	예산관리	1	재무, 회계, 급여, 사업예산 등
	시설관리	1	시설, 장비 등의 유지보수 관리
운영 지원 팀 (12)	운영지원팀장	1	운영지원 업무총괄 및 관리
	기획 및 홍보	2	상담, 교육 등의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신규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운영
	상담.통역	6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통역서비스, 고충처리상담 등
	근로지원	2	취업교육, 사업장내 애로 및 갈등 조정 등
	교육·적응지원	1	상시교육, 특별교육, 각종 문화행사 지원, 생활편의지원 프로그램 시행

- 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상담지원, 근로지원, 교육지원, 생활편의지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 이 센터 설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 지원 강화, 외국인 근로자 특성별 차별화된 지원 인프라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표 Ⅲ-4>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방안

상담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내방 상담 서비스</li> <li>· 현장 상담·통역 서비스</li> <li>· 법률 상담소 운영</li> <li>· 자원봉사자 관리</li> </ul>
근로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교육 서비스</li> <li>·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서비스</li> <li>· 귀국지원 프로그램</li> <li>· 민간단체 육성 지원</li> </ul>
교육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학당 운영</li> <li>· 컴퓨터 교육</li> <li>· 법률 교육</li> <li>· 특별 교육</li> </ul>
생활편의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진료 서비스</li> <li>· 한국 생활문화체험 서비스</li> <li>· 국가별 문화행사 지원</li> <li>· 세계인 축제 한마당 운영</li> </ul>

## 마. 선행 연구 분석 결과

- 우리사회는 내국인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외국인주민(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유입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권과 복지 측면 지원정책이 필요함.
- 선행 연구에는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와 외국인인력지원센터 설치 방안이 있음. 전자는 울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해당되며, 후자는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가 해당됨.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역별로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지역은 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지원센터에서도 담당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담당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음.
- 다른 지역의 외국인 지원정책 및 전담조직 설치 방향을 참고하고, 제주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외국인주민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함.
- 또한 외국인주민 관련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형별 현황과 실태 등 기초자료 조사가 필요하므로, 향후 사업자와 근로자 등 다양한 각도에서 구체적인 조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2. 국내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 사례

### 가.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sup>11)</sup>

#### 1) 안산시 등록 외국인 현황

- 안산시는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인구 740,502명이며, 외국인은 76,61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3%에 해당됨.
  - 안산시의 예산은 2조 6,522억원이며, 다문화지원본부의 예산은 66억원임. 이 중에 사업비는 51억원(국비 7.8억원, 도비 1.8억원, 시비 41.4억 원)이며, 인건비는 시비로 총 15억원임.
- 외국인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 및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으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III-2] 참조).
  - 2016년 10월 기준 안산시 거주 외국인은 총 75,965명이며, 이를 국적별로 구분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11) 연구진이 경기도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하고, 여러 시설들을 견학한 후 내부 자료(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를 참조하여 정리함.

### Ⅲ. 국내 외국인 지원조직의 유사사례 분석

인도네시아 1,497	캄보디아 742	몽골 431	미얀마 366	일본 333	미국 304	대만 123	말레이시아 26	중국 10,422	기타 1,313
태국 1,674	러시아 1,725	필리핀 1,966	남부아시아 2,663	베트남 3,596	중앙아시아 5,422	중국(한국계) 43,362			

[그림 Ⅲ-2] 안산시 거주 국적별 외국인 현황

-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형은 한국국적 미취득자(64,244명), 한국국적 취득자(7,026명), 외국인주민 자녀(4,695명) 등으로 구분됨(<표 Ⅲ-5> 참조).
- 한국국적 미취득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등임.
  - 한국국적 취득자는 혼인 귀화자, 기타 등임.
  - 외국인주민 자녀는 외국인 부모, 외국인·한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 등이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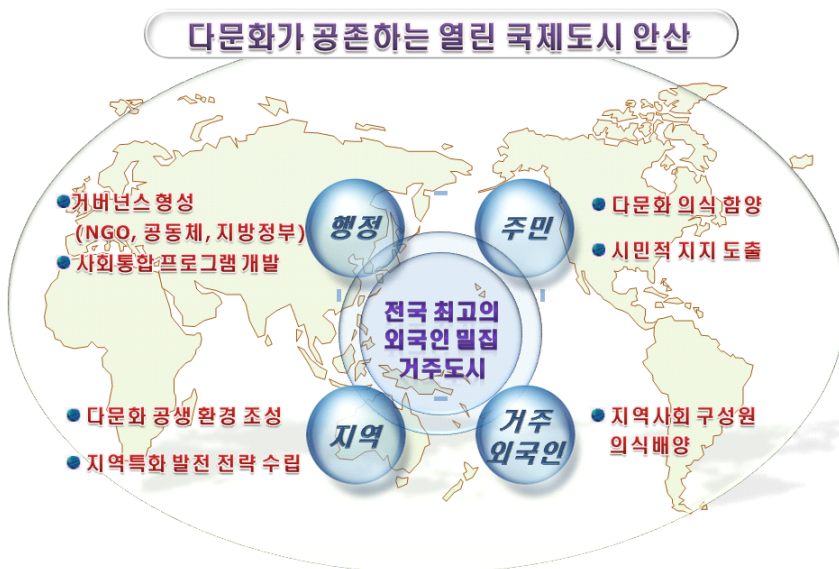
<표 Ⅲ-5> 안산시 거주 유형별 외국인 현황(2016)

한국국적 미취득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				합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소계	혼인 귀화 자	기타 사유	소계	외국인 부모	외국인 한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	소계	
31,101	4,613	776	13,262	14,492	64,244	3,860	3,166	7,026	493	3,993	209	4,695	75,965

- 안산시의 2016년 다문화 재학생은 2,935명이며, 초등학교 2,160명, 중학교 523명, 고등학교 252명 등의 분포를 보임(안산교육지원청 자료).
- 이주 아동·청소년은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총 5,976명이며, 0~4세 1,898명, 5~9세 1,105명, 10~14세 500명, 15~19세 554명, 20~24세 1,919명의 분포를 보임.

## 2) 다문화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개요

- 설립 배경 및 목표
  - 안산시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밀집 거주도시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주민에게도 안산 시민과 같은 동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외국인주민 지원 행정의 네트워크 중심기능 수행과 종합 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며,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목적을 둠.
- 다문화지원본부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국제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선정함.



[그림 III-3]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의 비전 및 전략

## ○ 설립 연혁

-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는 안산시 거주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시민과 외국인 주민이 더불어 잘사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설치 승인(2005. 02. 21.)을 받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소(2005. 05. 17.)하였으며, 조직 및 시설을 확대하고 있음.
- 1사업소 4담당(관리·민원·문화사업·복지지원담당)
- 2013년 5월 19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개관
- 2014년 3월 11일 안산다문화커뮤니티센터 개관
- 2016년 4월 20일 기존의 '다문화지원본부'로 조직을 개편함.
- 2과 6담당 25명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다문화정책과에는 다문화정책, 외국인인권, 다문화특구지원 담당이 속하며, 다문화지원과에는 다문화 복지, 지구촌문화, 다문화교육 담당이 배치됨.

## ○ 시설 현황








**▶ 시설현황**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원곡동)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구 주소:원곡동 991-1)

▶ 개소일 : 2008. 3. 23.

▶ 대지면적 : 2,534㎡

▶ 규모 : 지하 1층/지상3층, 연면적 1,828㎡, 부지면적 2,534㎡

구분	면적	주요시설
계	1,828㎡	지하1층 / 지상3층
지층	472.61㎡	다문화작은도서관, 기계/전기실, 강의실, 휴게실
1층	484.33㎡	원곡보건지소(무료진료센터), IBK은행(외환송금센터), 만남의 장소, 야외 소공연장
2층	493.64㎡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회의실, 정책과/지원과 사무실
3층	378.02㎡	문화의집
4층		옥상정원

**▶ 이용시간**

▶ 평일 : 09:00 ~ 22:00

▶ 토요일 및 공휴일 : 10:00 ~ 19:00

출처: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홈페이지(<http://global.iansan.net/>)

### 3) 조직 구성 및 운영

#### ○ 조직 현황

-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는 본부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의 관할 하에 '다문화정책과'와 '다문화지원과'가 업무를 분장하고 있음.
- '다문화정책과'는 다문화정책, 외국인인권, 다문화특구지원 등 3개의 담당(계)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문화지원과'는 다문화복지, 지구촌문화, 다문화교육 등 3개의 담당(계)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문화지원본부가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본부장의 총괄 하에 다문화정책과와 다문화지원과에서 4급 1명과 5급 2명 등 총 25명이 담당하며, 자세한 인원 구성은 <표 III-6>과 같음.

<표 III-6>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조직 및 인원 현황(2017)

(현원/정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직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정책담당	7(9)	1	1	2	2	-	1	-	(9)*
	외국인 인권담당	3		-	1	-	2	-	-	
	다문화 특구지원 담당	3		-	1	-	1	-	1	
	소계	13(9)/12	1/1	1/1	4/3	2/4	3/2	1/1	1/0	(9)
다문화 지원과	다문화 복지담당	6		1	1	2	2	-	-	
	지구촌 문화담당	3(1)		-	1	1	1	-	-	(1)**
	다문화 교육담당	3(1)		-	1	1	1	-	-	(1)***
	소계	12(2)/12		1/1	3/3	4/3	4/2	0/3	0/0	(2)
합계		25(11)/24	1/1	2/2	7/6	6/7	7/6	1/4	1/0	(11)

\* 전문위원 1명, 특별순찰대 8명

\*\* 태권도 임기제공무원 1명

\*\*\* 사회통합교육 공무원 1명

- 다문화지원본부는 조례에 의거, 3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주민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외국인주민의 인권과 생활편의 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Ⅲ-7>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 성 일	위원수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관협의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0조	2008. 05. 09.	18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2009. 11. 24.	15
안산시 외국인주민 협의회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7조	2015. 02. 01.	15

-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는 외국인주민의 인권, 복지, 교육 이외에도 다문화공동체 활성화, 다문화특화도시 육성, 다문화마을 특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 4)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운영 성과

- 안산시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동시에,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모범적인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로 평가되면서 <표 Ⅲ-10>과 같이 안산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 행렬이 지속되어 왔음.
-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안산시의 다문화 정책 추진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문 건수는 76건이며, 총 935명이 방문했음.

- 또한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가 운영하는 센터를 방문한 외국인주민의 수도 2015년 말 2만명에 이를 정도로 이용 빈도가 높은 편임.
- 이 조직의 국내·외 방문자수는 2011년과 2012년에 약 3,000명에 달했으며, 이후에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 2015년 기준 국외 방문자의 방문횟수는 7회, 방문자수는 46명임.
- 2015년 기준 국내 방문자의 방문횟수는 69회, 방문자수는 889명임.

<표 III-8> 국내·외 방문자 현황

구분		2008~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국외 방문자	방문횟수	49	14	10	10	12	7	102
	방문자수	479	126	73	123	35	46	882
국내 방문자	방문횟수	359	165	173	99	97	69	865
	방문자수	5,190	2,922	2,955	2,291	1,588	889	14,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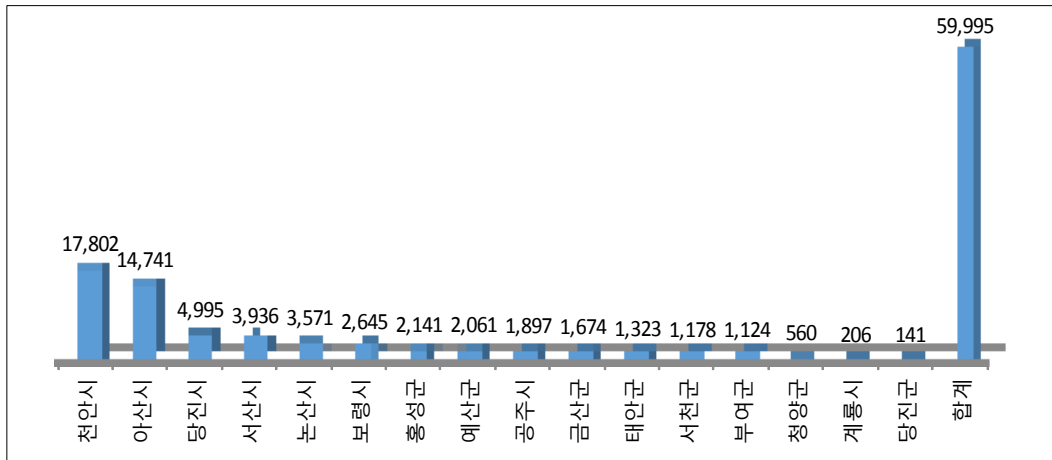
자료 : 경기도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내부자료

## 나. 충남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 아산시 다문화가족 현황

- 2017년 4월 말 현재 등록 외국인이 각 지역별로 거주하고 있는 현황에 따르면, 충남지역에만 59,995명이 거주하고 있음.<sup>12)</sup>
- 충남지역 등록외국인의 시·군별 분포 현황은 [그림 III-3]과 같음.
- 충남지역 등록외국인은 천안시가 가장 많은 17,802명(29.7%)이고, 그 다음으로 아산시가 14,741명으로 24.6%를 차지함.

12) 충남지역 등록외국인 수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등록 외국인 3,881명이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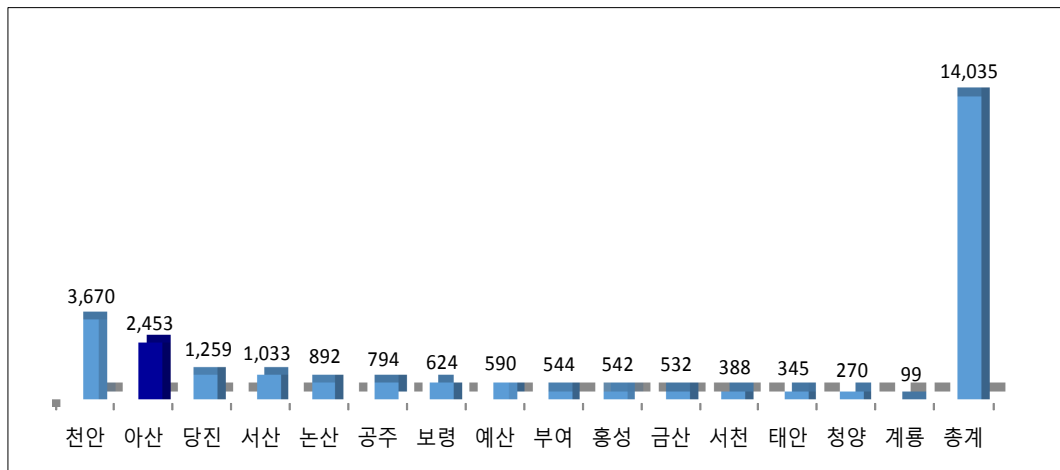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 17)

[그림 Ⅲ-3] 충남지역 등록외국인의 시·군별 분포 현황

- 충남 아산시에서는 충청남도 거점센터(여성가족부 지원)로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동 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충남 및 아산시의 다문화가족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sup>13)</sup>
- 충남지역 전체의 다문화가족은 14,035명이고, 아산시 총 인구 32만 명 중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6.3%나 될 정도로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임.
  - [그림 Ⅲ-4]와 같이 아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2,453명으로 17.5%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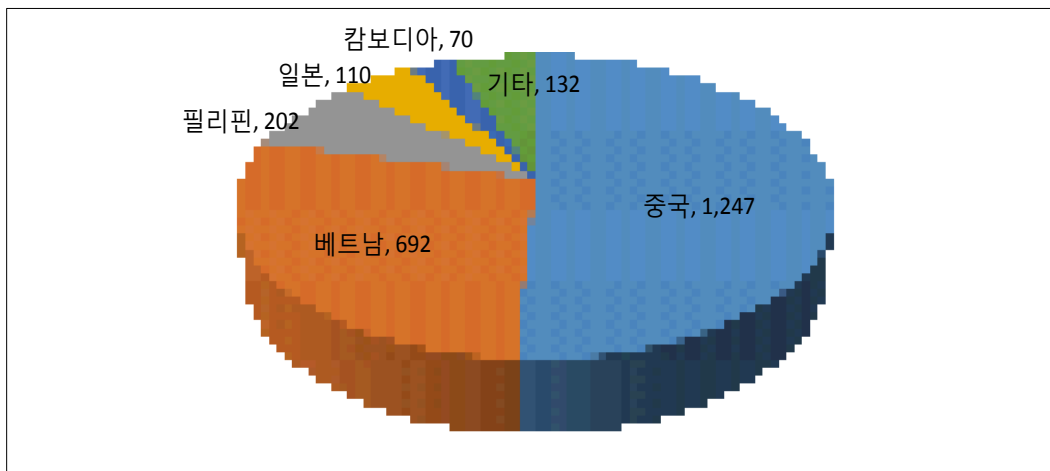
13) 다문화가족 현황은 행정안전부 2015년 11월 기준 통계자료이며, 아산시 여성가족과 내부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아산시 여성가족과,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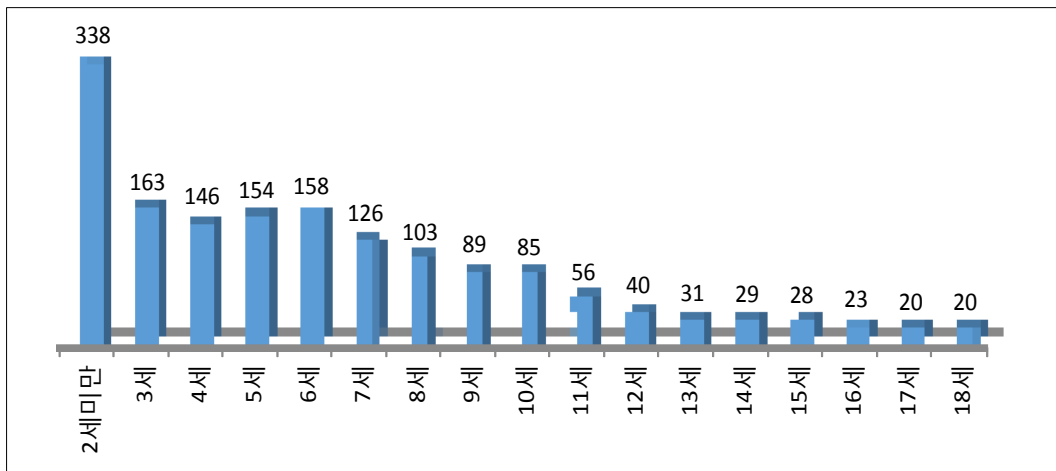
[그림 III-4] 충남지역 다문화가족 분포 현황

- 아산시의 다문화가족을 국적별로 구분하면 [그림 III-5]와 같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5] 충남지역 다문화가족의 국적별 분포 현황

- 아산시의 외국인 자녀는 총 1,609명이며 [그림 III-6]과 같이 2세 미만이 월등하게 많고, 그 다음으로 3세, 6세, 5세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6] 아산시 외국인 자녀 현황

##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요

### ○ 설립 목적<sup>14)</sup>

- 다문화가정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기반을 강화함.
-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형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높임.
- 약화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가족생활을 지원함.

### ○ 센터 개요

-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 위탁기간 : 2017. 01. 01.~2019. 12. 31. (3년간) / 3기
- 소재지
  - 다문화교육센터 : 아산시 시장길 29 (아산시민문화복지센터 4층)
  - 외국인배움터 :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1층)
  - 글로벌가족센터 : 아산시 시민로 467-15

14)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www.liveinkorea.kr/center/intro/introduce.do>)

○ 설립 연혁

- 2007. 07. 아산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정
- 2009. 06.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 2010. 02. 병합형 아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 2015. 10. 글로벌가족센터 개관식
- 2016. 01.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 변경
- 2017. 01.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채수탁운영(3년), 충남다문화거점센터 수탁운영(3년)
- 2017. 03. 다문화자녀 취업사관학교 선정

○ 센터 조직 현황(2017. 09. 20. 기준)

-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외협력, 운영관리, 조직관리 등을 담당
- 3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사업 추진
  - 제1센터: 시문문화복지센터
  - 제2센터: 외국인 배움터
  - 제3센터: 글로벌가족센터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15인), 인사위원회(5인), 충남다문화거점센터 운영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두고 있음.
- 센터 직원 현황(2017. 09. 20. 기준)
  - 센터의 직원 현황을 보면 센터장을 비롯한 상근직이 31명, 비상근직 29명, 파견직 82명으로 총 142명임.

<표 III-9>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현황

구분	상근직 (31명)											비상근직 (29)			파견직 (82)		합계
	센터장	실장	팀장	주인	사회복지사	어울림담당	언어지도사	동번역사	언어코치	동료상담원	취업사관	조리사	객원상담사	지도사및강사	아이돌보미	방문지도사	
인원	1	2	3	3	12	2	2	2	2	1	1	1	3	25	72	10	142

출처: 아산시 여성가족과(2017)

○ 사업의 초점<sup>15)</sup>

- 아산시는 다문화가족과 아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임.
- 이 센터에서는 초기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중장기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취·창업 지원, 다문화자녀와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언어·학습 지원, 다문화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다문화가족 모두 행복한 나눔 공동체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sup>16)</sup>

사업명	주요 내용
통합센터 기본사업	가족관계(부모역할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가족교육), 가족돌봄(가족역량강화지원, 상담, 자녀성장 등), 가족생활(초기정착 지원, 일가양립, 통번역),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봉사단, 문화, 자조모임, 공동육아나눔터, 네트워크, 취업교육 및 취업연계)
다문화 별도사업	한국어교육, 사례관리, 집배모니터링, 언어발달지원
다문화 어울림사업	다문화이해교육, 자녀성장지원사업, 취업교육 및 취업연계 등
글로벌 아동·청소년	가족지원, 기초교육, 문화지원, 정서지원, 지역연계 등
건강가정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행복드림사업, 북한이탈 상담 치유사업
지역특성화	베트남지원사업, 신창면 맞춤형 다문화 프로젝트

15)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www.liveinkorea.kr/center/intro/introduce.do>)

16) 이하 사업 내용은 아산시 여성가족과(2017) 및 아산시 다문화지원팀장 인터뷰에 기초하여 작성함.

○ 사업비

- 2017년 기준으로 사업비는 보조금 1,642,000천원과 법인전입금 150,000천원으로 구성됨.
- 보조금은 국비 863,000천원, 도비 235,000천원, 시비 544,000천원으로 구성됨.

<표 III-10>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및 예산실적  
(2014~2017)

구 분	2014	2015	2016	2017(계획)
예산(백만원)*	1,492	1,439	1,452	1,642
사업수	149	165	173	146
연인원(명)	46,502	54,833	56,695	82,391

\* 정부보조금 예산기준

참고: 2014~15년 통합센터 시범운영

출처: 아산시 여성가족과(2017)

○ 센터의 세부 시설 현황

- 교육문화센터(1센터, 204.74m<sup>2</sup>)

	구분	내용
	소재지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4층, 5층
	시설구성	4층 : 이중언어교실, 센터장실, 사무실 5층 : 소교육실, 대교육실, 언어발달실
	진행내용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사업 - 교육·문화, 취창업 관련 주요 업무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산의 중심지, 대중교통, 접근성 용이</li> <li>• 건물 자체의 인지도가 높음</li> <li>• 지역유관기관 네트워크 유리</li> </ul>

• 외국인배움터 (2센터: 114m<sup>2</sup>)

	구분	내용
	소재지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1층
	시설구성	교육실2, 상담실1, 사무실1
	진행내용	충남거점사업, 한국어교육, 상담, 중도입국자녀교육문화프로그램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 타 시군에서의 접근 용이 (장항선, 수도권 전철 온양온천역 건물)</li> <li>•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상시 진행</li> </ul>

• 글로벌가족센터 (3센터, 2015. 10. 27. 개관: 850.58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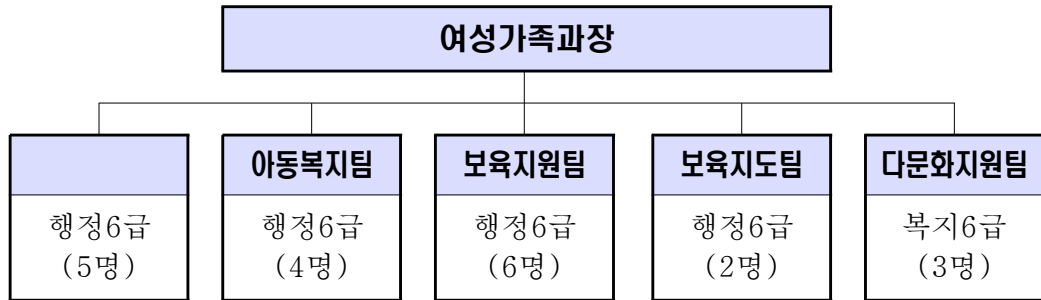
	구분	내용
	소재지	아산시 시민로 467-15
	시설구성	1층 : 공동육아나눔터 2층 : 어반포레스트카페, 쿠킹클래스, 사무실 3층 : 상담실, 아동지원프로그램실, 언어발달실
	진행내용	공동육아나눔터, 개인 및 가족상담 중도입국자녀프로그램, 언어발달지도 어반포레스트카페 운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육아나눔터, 카페 신설</li> <li>•근접한아파트 단지다수, 이용자증가 기대</li> <li>•상담실 다수 확보로 상시 상담 진행</li> </ul>

### 3) 아산시 여성가족과 조직 구성 및 운영

○ 아산시의 행정조직 현황

-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팀, 아동복지팀, 보육지원팀, 보육지도팀, 다문화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음([그림 III-7] 참조).

-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은 팀 단위로 배치되어 있음.



[그림 III-7] 아산시 여성가족과의 조직 현황

- 아산시 다문화지원팀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는 <표 III-11>과 같음.
  -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조직에 위탁하고, 그에 따른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다문화지원팀은 다문화가정 지원, 외국인주민 지원, 사할린 동포 관련 업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

<표 III-11> 아산시 다문화지원팀 주요 업무

직위(급)	주요 담당 업무
팀 장 (복지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다문화가족 종합계획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li> <li>·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li> <li>· 외국인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li> <li>· 거주외국인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li> </ul>
복지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li> <li>· 다문화가정 실태 및 현황조사</li> <li>· 다문화가족 대상 각종 지원사업</li> <li>·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운영</li> <li>·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및 종사자 관리</li> <li>·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운영</li> <li>· 외국인배움터 운영지원</li> <li>* 「아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li> </ul>

직위(급)	주요 담당 업무
복지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중개업 지도 및 점검</li> <li>· 다문화어울림사업 운영</li> <li>· 글로벌인재육성사업 운영지원</li> <li>·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지원사업</li> <li>·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운영</li> <li>· 북한이탈주민 상담치유센터 운영</li> <li>·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li> <li>· 통일부 하나넷 전산 시스템 운영관리</li> <li>* 「아산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출처: 충남 아산시 여성가족과 현황(내부자료, 2017년 7월 1일 기준)

#### 4) 주요 추진 사업

##### (1) 통합센터 기본사업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사업명	사업내용
가족관계	다문화 부부교육, 인권교육, 행복올타리, 아버지교육, 부부교육, 취학전 아동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가족돌봄	가족상담, 다문화가족상담, 토요스쿨, 아우름봉사단, 나눔봉사단 아자투데이, 다재다능,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가족생활	조기적응프로그램, 검정고시, 초기정착교육, 기업봉사와 다문화여성 한국 초기정착 프로그램 및 봉사활동,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일가정양립지원, 무료진료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나눔봉사단, 모두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날, 아버지모임, 가족프로그램, 부부의날, 홍보 및 네트워크, 사업보고대회, 다문화여성 취업처연계, 고용센터연계 컴퓨터 교육,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패키지,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 공동육아나눔터



## (2) 다문화 별도사업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문교육 통·번역 및 정보제공, 언어발달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주요 사업에는 한국어교육, 사례관리, 집배모니터링,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이 있음.

## (3) 다문화 어울림 사업

- 결혼이민자 가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인 한국 생활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 주요 사업에는 통통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족 취창업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자녀 글로벌 인재양성, 대표과제, 한국문화 적응, 현장체험, 한국어 교육, 지역네트워크, 홍보운영 등이 있음.

## (4) 건강가정지원 사업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 주요사업에는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행복드림사업, 북한이탈상담 심리치유 사업 등이 있음.

## (5) 글로벌아동·청소년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과 자녀에게 복지와 교육,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다문화 자녀 역량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성장
- 주요사업에는 가족지원, 기초교육, 문화지원, 정서지원, 지역연계 등이 있음.

## (6) 지역특성화 사업

- 삼성전자온양캠퍼스 지원으로 베트남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아산시 외국인 밀집지역에 네트워크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내실 있는 사업 진행으로 지역 맞춤형 다문화 모델 구축 초석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사업에는 베트남지원 사업 논 프로젝트, 신창면 맞춤형 다문화 프로젝트, 다문화가정 거점 교육사업(시비 지원사업) 등이 있음.

## (7) 중점 사업

- 취업사관학교
  - 사업기간 : 2017. 03. ~ 12.
  - 사업대상 :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30명 이내  
(다문화청소년 80%, 일반 청소년 20%, 고등학교 졸업 이하)
  - 장소 : 글로벌가족센터, 위드제과제빵학원
  - 내용
    - 예비학교 4주 운영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 제과제빵 훈련 과정 (555시간)
    - 심리정서, 특화프로그램(기능경진대회, 현장직업체험)
  -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158,800천원
  - 추진현황
    - 인원 : 중도입국 청소년 14명, 북한이탈 1명, 일반청소년 2명 (총 17명)

<표 III-12> 취업사관학교 진행내용

프로그램	내 용	진행기간	참여인원
예비학교	나의 꿈과 진로그리기 소통, 진로, 직업 교육 미디어 교육(미래 그리기) 전문용어 교육 등	3/20~4/14 (월~금 / 4주)	13/120
직업능력개발 훈련 1수준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4/17~4/28 (주3회)	13/24 (04.18.기준)

○ 다문화 협동조합 글로벌 쿡방

- 사업기간 : 2017. 01. ~ 12.
- 사업대상 : 조합원 중 다문화여성 15명
- 장소 : 아산요리전문학원, 우수사례 협동조합, 위드제과제빵학원
- 내용
  - 협동조합 설립교육, 협동조합 우수사례 벤치마킹
  - 한식조리기능사 자격과정, 제빵기능사 자격과정
-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50,000천원
- 추진현황
  - 인원 : 다문화여성 15명

<표 III-13> 다문화 협동조합 글로벌 쿡방 진행내용

프로그램	내 용	진행기간	참여인원
다문화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벤치마킹 “글로벌쿡방”	다문화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우수사례 협동조합 벤치마킹	1/10~4/12 (주1회, 7회)	11 / 46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과정 “한식마스터”	다국적 음식점을 다문화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식조리기능사 자격 취득과정	4/4~7/11 (주2회, 36회)	15 / 65

○ 아산시 신창면 맞춤형 다문화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17. 04. ~ 12.
- 사업대상 : 신창면 거주 유·아동 다문화여성
- 사 업 비 : 약 166,190천원
- 지 원 : 삼성전자온양캠퍼스

<표 Ⅲ-14> 아산시 신창면 맞춤형 다문화 프로젝트의 사업내용

기관명	대 상	사 업 내 용	장소
아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여성 30명	-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 - 한국문화 체험	순천향 대학교
	다문화아동 및 중도입국자녀 5세~7세 70명	- 언어발달 진단 후 언어 치료	어린이집 초등학교
	신창초 중도입국자녀 20명	- 한국어 수준별 기초 학습	신창 초등학교
아산시부 종합 사회복지관	신창초 다문화자녀 및 요보호 일반아동 20명	- 방과후 활동 및 나눔 교실	신창 초등학교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신창면 우범지역	- 신창면 세이프존 만들기	

## (8) 주요 성과

### ○ 글로벌가족센터 개관

개관일	2015년 10월 27일
건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매입 : 중부재단</li> <li>• 건물건축 : 중부재단, 삼성전자 온양캠퍼스</li> <li>• 소요예산 : 14억 6천</li> </ul>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공간 확대(공동육아나눔터, 중도입국청소년 사업, 언어 발달실, 상담실 등)</li> <li>• 다문화여성 취업 인큐베이터 장 마련(어반포레스트 카페 운영)</li> <li>• 센터 홍보효과 극대화</li> </ul>

○ 아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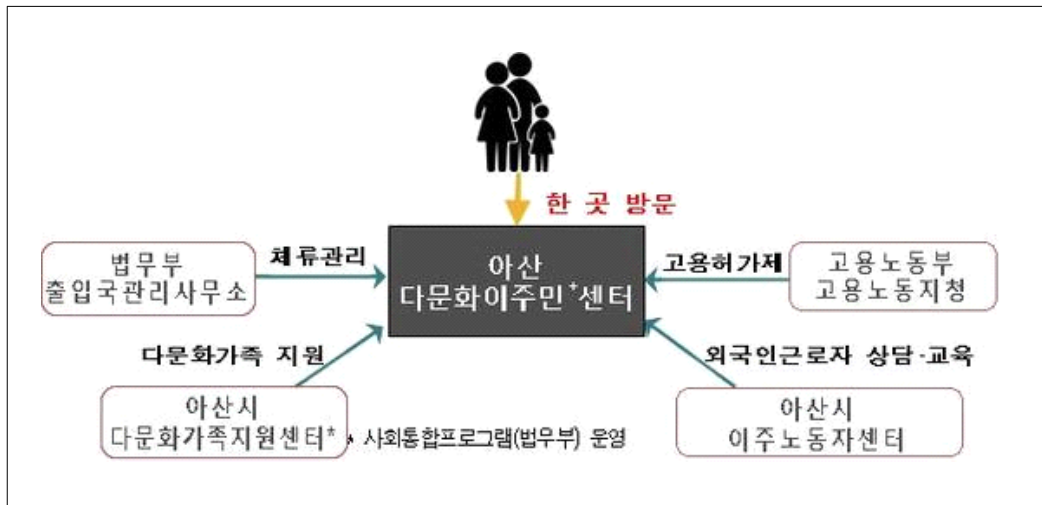
개요	주요 내용
개소일	2017년 9월 8일 (2017년 7월 10일 운영)
위치	아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內)
시설 규모	<p>총 480㎡, 5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 법무부, 고용노동부 통합민원실(154.85㎡)</li> <li>• 2층 : 상담실(58.5㎡), 이주노동자센터(29㎡)</li> <li>• 4~5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237㎡)</li> </ul>
설립 취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대상 서비스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각 센터 공간 통합 또는 서비스 연계로 수요자 중심의 윈스톱 전달체계 마련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관리사무소(1층) : 체류허가 및 기간연장,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li> <li>• 고용노동지청(1층)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취업기간 연장 등</li> <li>• 아산이주노동자센터(2층) : 고용허가제관련 상담 및 생활정보 안내 등</li> <li>•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4층) :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 서비스 등</li> </ul>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업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와 정착지원 서비스를 통합제공</li> <li>• 다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증가</li> </ul>

## 5) 특징과 평가

○ 충남 아산시는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체류허가와 기간연장 등과 같은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개소했음.

- 동 센터는 [그림 III-8]과 같이, 외국인정책 핵심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아산시와 공동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센터임.
- 동 센터는 기존 기관에 기능을 추가해 하나의 공간에 다양한 기관이 입주해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 모델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의 기능이 있음.



출처: 뉴스1, 2017년 9월 8일자.

[그림 Ⅲ-8] 아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구축 모형

- 충남 아산시의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기존에 분산 관리되어 오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임.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정책이 대상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음.
- 또한 이용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비판도 있었음.
- 동 센터의 개소에 따라 한국어교육과 상담, 통번역 등 외국인들의 적응지원 서비스와 체류관리, 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가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심축이 조성됨.
-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안산시와 양주시 등 10개 지역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시범 설치하고 운영성가를 바탕으로 더욱 확대할 방침임.

### 3. 국내 사례의 주요 시사점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다문화 담당,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등에서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 따라 담당부서 명칭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여성가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지원정책이 주로 다문화정책 중심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임.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유입되면서 고용과 노동 담당부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 외국인 대상 지원정책의 이원화에 따른 불편함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 정책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일원화하는 시도가 보임.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외국인주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함.
  - 경기도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이 약 3만명에 이른 시점에서 외국인 전담지원조직 설립을 준비하였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주민이 2만명을 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외국인주민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한 시점임.
-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 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주민 지원 전담조직은 과 단위 조직이 되어야 하고,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와 그 외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 단위 조직이 포함되어야 함.

- 향후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행정조직의 통합·운영이 필요함.
  - 외국인 지원정책 담당부서가 하나로 지정되어야 중·장기 지원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운영 계획이 가능함.
  - 또한 정책 추진 결과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보완 정책이 가능함.
- 따라서 경기도 안산시와 충남 아산시의 외국인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을 참고하여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IV.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정책의 현황 및 지원조직 사례 분석

### 1. 외국인 지원정책 관련 법률과 조례 검토

#### 가. 관련 법률 검토

-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을 지원하는 법률에는 「출입국관리법」(1983, 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8, 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2, 제정),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제정), 「난민법」(2012, 제정) 등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재중동포의 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음.
- 외국인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국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법무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운영 부처가 다름.
- 외국인정책 관련 정부부처가 다양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음.

#### (1)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289호, 1963. 03. 05. 제정)에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1조)이 포함되어 있음.
-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있음.

- 외국인의 체류에는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 외국인 고용의 제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의무 등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015호, 1999. 09. 02. 제정)의 제정 목적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제1조)에 두었음.
- 이 법률의 정의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의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건강보험 등의 지원을 보장해 주고 있음.

##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6967호, 2003. 08. 16. 제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제1조)을 목적으로 제정됨.
- 이 법률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등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주도록 구성되어 있음.

##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8442호, 2007. 05. 17. 제정)은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 적응과 환경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

## (5)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제8937호, 2008. 03. 21. 제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함을 제도화했음.
- 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초 법률임.

## (6) 「난민법」

- 「난민법」(제11298호, 2012. 02. 10. 제정)에서는 외국인 중에 난민의 지위를 얻는 데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이 법률에는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난민 인정자 등의 처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나. 관련 조례 검토

- 정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2007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2008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2011 제정) 등을 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조례의 주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외국인 정책 담당 부서가 다른데, 이는 정부부처의 다양화에 기인함.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통합 방안 마련이 필요함.

### (1)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제237호, 2007. 05. 09. 제정)에서는 제주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해 주고, 외국인을 위한 활동 지원 등을 명문화하였음.
- 조례의 목적은 “거주외국인 등의 차별 방지와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에 있으며, 제주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있음.
- 이 조례에 의하면 거주 외국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 정의함.
- 또한 거주 외국인 등이란 “거주외국인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자녀”를 가리킴.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
- 또한 거주 외국인 등의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계인의 날을 포함한 세계인 주간을 정하여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전파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56호, 2008. 04. 02. 제정)에서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음.
- 이 조례에는 다문화가족의 정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기본소양 교육,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아동의 보육,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다문화가족의 지원 분야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 조례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취하는 일체의 제도 또는 조치”(제3조)를 뜻함.

### (3)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제753호, 2011. 06. 29.) 제정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에 의하면 외국인주민 등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무를 가짐(제4조)
  - 체류자격 등 자신의 법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인권을 향유할 권리
  -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 의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
  - 모든 주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담당변호사 제도 운영, 운영센터 지정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다. 관련 법률과 조례 검토 결과 시사점

- 정부에서는 외국인들의 유형을 고려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분 보장과 보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장과 산업체 성격에 따라 인권보장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자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관련단체에서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음.
  - 이 협약은 199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03년에 발효되었으며,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둔 포괄적 국제인권조약으로 2017년 기준 50개국이 비준되어 있음.
  - 이 협약은 전문과 9부 93조를 구성되어 있음. 1~6조는 협약이 정한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범위, 7~35조는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등 체류 지위와 자격에 상관없이(차별 없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생명권과 자유, 집단 추방으로부터의 보호와 적절한 노동조건 등), 36~56조는 신고된 또는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기타의 권리, 57~63조는 특별한 유형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한 규정, 64~78조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건전하고 공평하며 인도적이며 합법적인 조건의 증진과 협약 이행 관련 규정, 79~93조는 다른 협약과의 관계와 효력 등을 포함하고 있음.
  - 1990년 이 협약 체결을 기념하는 날인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임. 즉 유엔은 각국 이주노동자와 이주한 가족의 인권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2000년 4월 제정하였음.
- 정부의 외국인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전담지원조직 신설을 의무화하고, 관련 지

원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지원정책 담당 부처의 통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국인 지원정책 담당 부서의 통합과 조직의 위상 강화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주도적으로 외국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근로자 업무를 추가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담당과'로 조직 격상이 필요함.

## 2. 제주 지역의 외국인 지원정책 현황

### 가. 제주 거주 외국인 현황

- 우리나라가 세계화와 개방화를 표방하면서 외국인들이 다양한 목적(취업, 사업, 여행, 혼인 등)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거주 하게 됨. 그 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음.

#### 1) 제주 거주 등록외국인 현황

- 제주 거주 외국인 등록 인구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표 IV-1> 참조).
- 제주지역 전체 외국인 등록 인구수는 2010년에 7,343명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19,593명으로 늘어나 지난 7년 동안 16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법무부(2017. 06.)의 통계 월보에 따르면 20,705명으로 이는 2016년에 비해 5.7% 증가한 것임.
  - 2017년 6월 기준으로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수는 20,705명이고, 그 가운데 제주시는 13,344명, 서귀포시는 7,361명으로 나타남.

-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남자 외국인이 여자 외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도 12말 기준으로 남자 외국인이 여자보다 1,997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외국인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서귀포시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주시에는 12,66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귀포시에는 6,933명이 거주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 동안 증가율은 서귀포시(222.8%)가 제주시(143.7%) 보다 79.%p 높게 나타남.
- 제주 거주 외국인은 2014년까지는 매년 거의 20%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전년 대비 8.9%로 낮아졌다가 2016년도에 다시 15%대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표 IV-1> 제주지역 외국인의 등록인구 현황(2016. 12. 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전년 대비 증가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0년	7,343	3,781	3,562	5,195	2,606	2,589	2,148	1,175	973	5.7
2011년	8,499	4,371	4,128	5,925	2,934	2,991	2,574	1,437	1,137	15.7
2012년	10,406	5,533	4,873	7,119	3,615	3,504	3,287	1,918	1,369	22.4
2013년	12,656	6,798	5,858	8,518	4,326	4,192	4,138	2,472	1,666	21.6
2014년	15,568	8,324	7,244	10,671	5,390	5,281	4,897	2,934	1,963	23.0
2015년	16,960	10,795	8,798	10,902	5,845	5,057	6,058	3,681	2,377	8.9
2016년	19,593	10,795	8,798	12,660	6,697	5,963	6,933	4,098	2,835	15.5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각 연도.



## 2) 제주 거주 외국인의 국적별 · 유형별 현황

- <표 IV-2>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별 · 유형별 현황을 보여 주는데, 2016년 11월 15일 기준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327명(6.8%)이고, 미취득자는 15,146명(77.6%)으로 나타남. 외국인주민 자녀에는 국적 취득자와 미취득자가 섞여 있음.
  - 한국국적 취득자 가운데 혼인귀화자는 857명이고, 외국인주민 자녀들도 3,051명에 이름.
- 한국국적 취득자들은 대부분 혼인귀화자인데, 결혼이민자(여성)인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일정한 심사를 거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한국국적 미취득자들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가 6,383명(32.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2,119명(10.9%), 외국국적 동포(7.5%), 유학생 1,052명(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 거주 외국인(한국국적 취득자와 미취득자 포함)은 크게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외에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이 있음.
  - 제주 거주 외국인 중에는 동북아시아 국가 출신이 거의 절반(46.2%)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그 중에 중국인이 4,930명(25.3%)으로 가장 많고, 한국계 중국인(소위 조선족)이 2,965명(15.2%), 일본인이 438명(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을 보면, 베트남인이 3,296명(16.9%)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인 1,466명(7.5%), 필리핀인 1,147명(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등 남부아시아 국가 출신의 제주 거주 외국인은 1,164명(6.0%)이고,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은 158명(0.8%)으로 나타남.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온 외국인은 158명(0.8%)으로 적음.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온 외국인은 모두 881명(4.5%)이고, 러시아 출신 외국인은 54명(0.3%)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 온 제주 거주 외국인은 805명(4.1%)으로 나타남. 제주 거주 미

국민을 포함하여 영국 혹은 캐나다에서 온 외국인들은 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교사, 원어민 교사, 영어강사 등의 직업에 속한 경우가 많음.

- 제주 거주 외국인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대체로 서귀포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주시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음.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은 오히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 더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서귀포시지역에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해 있어서 여기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대체로 이들 영어권 국가 출신으로 보임.

- 특히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 국가 출신 외국인(중국인,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대개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영어권 출신 국가의 외국인들은 주로 영어교사, 원어민 교사, 영어강사 등의 취업을 위해 제주에 거주하는 경향이 많음.

<표 IV-2> 제주지역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 (2016. 11. 15. 기준)<sup>17)</sup>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한국국적 미취득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소계	혼인 귀화자	기타 사유	
합 계	19,524	15,146	6,383	2,119	1,052	1,471	4,121	1,327	857	470	3,051
동북아	소계	9,011	6,927	1,838	751	946	1,053	2,339	861	510	1,223
	중국	4,930	4,161	1,137	375	867	0	1,782	248	162	86
	중국(한국계)	2,965	2,036	583	177	***	1,043	232	529	320	209
	대만	400	261	9	41	***	0	210	65	22	43
	일본	438	213	***	140	22	10	39	18	5	13
	몽골	278	256	107	18	55	0	76	***	***	0

17)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현황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라 통계청이 2016년 11월 15일에 발표한 자료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구 분		합 계	한국국적 미취득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 인 주민 자녀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소계	혼인 귀화 자	기타 사유	
동 남 아	소계	7,490	5,604	3,241	1,086	29	0	1,248	384	324	60	1,502
	베트남	3,296	2,109	916	654	7	0	532	276	227	49	911
	필리핀	1,147	614	136	315	5	0	158	81	74	7	452
	태 국	738	716	222	18	***	0	474	***	***	***	19
	인도네시아	1,466	1,462	1,415	19	***	0	28	***	***	0	***
	캄보디아	536	410	303	68	6	0	33	22	20	***	104
	미 양 마	198	197	182	***	5	0	9	0	0	0	***
	말레이시아	18	15	***	***	***	0	7	0	0	0	***
	기 타	91	81	65	8	***	0	7	***	0	***	9
남부아시아		1,164	1,070	790	108	60	0	112	15	11	***	79
중앙아시아		158	106	53	28	***	***	20	7	***	***	45
미 국		805	691	203	52	***	262	170	35	***	33	79
러 시 아		79	61	8	14	5	12	22	7	***	5	11
기 타		817	687	250	80	7	140	210	18	***	14	112

주 : \*\*\* 표시는 5명 미만인 경우

출처 : 통계청(2016. 11. 15.), 「인구주택총조사」.

### 3) 제주지역 내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 <표 IV-3>은 제주지역 내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 가운데 거주 자격(F-2비자) 소지 외국인이 4,698명(22.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전문취업(E-9비자) 외국인이 3,306명(16.0%), 특정활동(E-7비자) 외국인 2,599명(12.6%), 결혼이민(F-6비자) 외국인 1,947명(9.4%), 선원취업 1,834명(8.9%), 그리고 방문동거(F-1비자) 외국인 1,530명(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lt;표 IV-3&gt; 제주지역 내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2017. 06. 기준)

(단위 : 명, %)

구 분	비자 유형	외국인 수	비율
그 외	-	52	0.3
종교	D-6	30	0.1
주재	D-7	43	0.2
기타	-	58	0.3
구직	D-1	99	0.5
기타	G-1	118	0.6
기업투자	D-8	125	0.6
예술홍행	E-6	234	1.1
회화	E-2	279	1.3
일반연수	D-4	323	1.6
동반	F-3	336	1.6
방문취업	H-2	761	3.7
유학	D-2	1,059	5.1
영주	F-5	1,274	6.2
방문동거	F-1	1,530	7.4
선원취업	E-9	1,834	8.9
결혼이민	F6	1,947	9.4
특정활동	E7	2,599	12.6
비전문취업	E9	3,306	16.0
거주	F-2	4,698	22.7
합계	-	20,705	100.0

출처 : 법무부(2017. 06.),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통계자료」.

#### 4) 제주 거주 외국인 국적별 세대수 현황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적별 세대수 현황을 보면(<표 IV-4> 참조), 전체 외국인 세대수는 3,939개이고, 그 가운데 베트남인 세대수가 1,063개(27.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인 세대수 735개(18.7%), 한국계 중국인 세대수 669개(17.0%), 필리핀 세대수 445개(11.3%), 그리고 일본인 세대수 274개(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 거주 외국인 세대수는 국적별 외국인수와 관련성을 갖고 있고, 최근 제주지역의 중국인 투자, 관광 및 교육(영어교육도시 자녀 교육) 등으로 중국인(한국계 포함) 세대수가 많은 것으로 보임.

<표 IV-4> 제주지역 외국인 국적별 세대수 현황

(단위 : 세대수)

구분	총계	중 국	중 국 ( 한 국 계 )	대 만	인 본	몽 골	베 트 남	필 리 핀	태 국	인 도 네 시 아	캄 보 디 아	미 얀 마	말 레이 시아	미 국	러 시 아	남 부 아 시 아	중 앙 아 시 아	기 타
총 계	3,939	735	669	99	274	23	1,063	445	22	21	107	***	5	120	21	136	48	149
제주시	2,774	555	509	75	207	9	707	264	17	16	69	***	***	76	17	113	33	112
서귀포시	1,165	180	160	24	67	14	356	181	5	5	38	0	***	44	***	23	15	43

주 : \*\*\* 표시는 5명 미만인 경우

출처 : 통계청(2016. 11. 15.), 「인구주택총조사」.

## 5)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 국적별 자녀 현황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적별 자녀수 현황을 보면(표 IV-5. 참고), 전체 외국인주민 자녀수는 3,051명이고, 그 가운데 베트남인 자녀수가 911명(29.9%)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중국인 자녀수 521명(17.1%), 필리핀인 자녀수 452명(14.8%), 한국계 중국인 자녀수 400명(11.3%), 그리고 일본인 자녀수 207명(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자녀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각별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임.

- 물론 외국인주민 자녀수 증가는 제주지역의 저출산 해소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지만, 다른 한편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언어, 차별, 부적응 등)에 직면할 수 있음.
-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다각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하고, 동시에 제주도민들의 다문화 이해와 나눔·배려의 상생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도 노력해야 할 것임.

<표 IV-5>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국적별 자녀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중국	중국(한국계)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미시시피	인도네시아	남부아시아	중영아시아	기타
총 계	3,051	521	400	74	207	21	911	452	19	***	104	***	***	79	11	79	45	121
제주시	2,144	401	303	59	151	7	611	269	13	***	69	***	***	52	10	73	35	85
서귀포시	907	120	97	15	56	14	300	183	6	0	35	0	***	27	***	6	10	34

주 : \*\*\* 표시는 5명 미만인 경우

출처 : 통계청(2016. 11. 15.), 「인구주택총조사」.

## 6)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현황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표 IV-6. 참고), 전체 외국인주민의 자녀수는 3,051명이고 그 가운데 남자 자녀는 1,578명, 여자 자녀는 1,478명임.
- 남자 자녀가 여자 자녀보다 상대적으로 많음.
- 외국인주민 자녀들 가운데 0~4세 영유아 아동이 1,371명(44.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9세 아동은 1,114명(36.5%), 10~14세 어린이는 374명(12.3%), 그리고 15~18세 청소년은 192명(6.3%) 순으로 나타남.

- 제주 거주 외국인 자녀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그 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영유아와 아동을 키우는 외국인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반영함.
- 따라서 외국인을 부모를 둔 영유아와 아동에서부터 청소년(중고교 재학)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특성, 가족, 거주지역, 부모의 생활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표 IV-6>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연령별 자녀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구분	합계	남	여
총 합계	3,051	1,578	1,478				
<b>소계 (0~4세)</b>	<b>1,371</b>	<b>701</b>	<b>670</b>	<b>소계 (10~14세)</b>	<b>374</b>	<b>179</b>	<b>195</b>
0세	174	85	89	10세	102	50	52
1세	277	145	132	11세	76	45	31
2세	299	147	152	12세	82	37	45
3세	313	157	156	13세	62	25	37
4세	308	167	141	14세	52	22	30
<b>소계 (5~9세)</b>	<b>1,114</b>	<b>576</b>	<b>538</b>	<b>소계 (15~18세)</b>	<b>192</b>	<b>86</b>	<b>106</b>
5세	289	151	138	15세	49	23	26
6세	251	127	124	16세	49	24	25
7세	240	124	116	17세	46	23	23
8세	194	104	90	18세	48	16	32
9세	140	70	70				

주 : \*\*\* 표시는 5명 미만인 경우

출처 : 통계청(2016. 11. 15.), 「인구주택총조사」.

## 7) 제주 거주 외국인 부모 유형별 자녀 현황

- <표 IV-7>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유형에 따른 자녀 분포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녀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42명으로 1.4%에 불과하고, 대개 외국인-한국인 부모를 둔 자녀가 2,819명(92.4%)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인 부모(귀화 외국인)를 둔 자녀수는 190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 외국인-한국인 부모를 둔 자녀가 많은 것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가 자녀를 둔 경우가 많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경우가 많음.

<표 IV-7> 제주지역 외국인 부모 유형별 자녀 현황

(단위 : 명)

구분	소 계			외국인 부모			외국인-한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3,051	1,578	1,473	42	20	22	2,819	1,458	1,361	190	100	90
제주시	2,144	1,106	1,038	39	18	21	1,957	1,009	948	148	79	69
서귀포시	907	472	435	3	2	1	862	449	413	42	21	21

출처 : 통계청(2016. 11. 15.), 「인구주택총조사」.

## 8) 제주 거주 외국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 시도별 현황

- <표 IV-8>은 전국의 외국인주민수와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국의 외국인주민수는 1,711,013명이고,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는 238,161명으로 나타남.



<표 IV-8> 제주지역 외국인주민과 결혼이민자 등 시도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2015. 11. 1)	외국인 주민수	인구대비 비율(%)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인구대비 비율(%)
<b>합 계</b>	<b>51,069,375</b>	<b>1,711,013</b>	<b>3.4</b>	<b>238,161</b>	<b>0.47</b>
서울	9,904,312	408,083	4.1	48,012	0.48
부산	3,448,737	58,080	1.7	9,970	0.29
대구	2,466,052	38,899	1.6	6,901	0.28
인천	2,890,451	89,515	3.1	14,633	0.51
광주	1,502,881	29,131	1.9	5,065	0.34
대전	1,538,394	25,886	1.7	4,970	0.32
울산	1,166,615	36,953	3.2	5,028	0.43
세종	204,088	5,570	2.7	785	0.38
경기	12,479,061	549,503	4.4	67,447	0.54
강원	1,518,040	27,253	1.8	5,851	0.39
충북	1,589,347	52,073	3.3	7,900	0.50
충남	2,107,802	88,189	4.2	12,159	0.58
전북	1,834,114	44,184	2.4	9,303	0.51
전남	1,799,044	50,864	2.8	10,462	0.58
경북	2,680,294	74,919	2.8	11,567	0.43
경남	3,334,524	112,387	3.4	15,132	0.45
제주	605,619	19,524	3.2	2,976	0.49
제주시	451,758	13,600	3.0	2,060	0.45
서귀포시	153,861	5,924	3.9	916	0.59

출처 : 통계청(2016. 11. 15.), 「인구주택총조사」.

- 제주지역의 외국인주민수는 19,524명으로 인구 대비 3.2%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국에 비해 0.2%p 적고, 그 구성 비율은 전국에서 7위(울산시와 공동)를 차지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는 2,976명으로 인구 대비 0.49%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국에 비해 0.02%p 높고, 그 구성 비율은 전국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9) 제주지역의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 제주지역의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보면(<표 IV-9> 참조), 노동인력이 부족하고, 제주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선호하지 않는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 또한 고용주들이 인건비 절약과 경영 수익 창출에 크게 관심 갖는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농축산 및 어업 분야(각각 504개소)이고 여기에 외국인근로자 1,943명이 종사하고 있음.
  - 다음으로 제조업 분야 290개소 사업장에 949명의 외국인이 일하고 있으며, 건설업(12개 사업장, 83명 고용)과 서비스업(70개 사업장, 95명 고용)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외국인이 일하고 있음.

<표 IV-9> 제주지역 업종별 외국인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사업장수	외국인 근로자수	비율
서비스업	70	95	0.5
건설업	12	83	2.8
어업	504	963	32.0
농축산업	504	980	32.2
제조업	290	949	32.5
합 계	1,380	3,070	100.0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내부자료(2017. 07.).

##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지원정책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과 사업들은 주로 다문화가족에 집중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해 오고 있음.
-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 근거는 국가 법률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2008. 0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2011. 06.),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2011. 11.),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2012. 01.) 등에 기초하고 있음.
- 행정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지원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2행정시,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2015~2018)」을 수립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제2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목표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에 두고 있음.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분야는 가족분야(조기정착 및 안정, 관계증진), 자녀분야(정서안정, 정체성 확립, 교육기회 확대), 사회경제분야(경제역량 및 사회역량 강화), 인식제고 분야(상호이해 및 교류, 다문화시민성 함양)으로 분류됨.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 사업들은 <표 IV-7>에 나타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2017년 다문화 지원정책 사업은 전체 30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552백만원(자부담 7,410천원 포함)임.
  - 다문화 지원정책 사업은 크게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가족 역

량강화, 중도입국 자녀 교육프로그램, 다문화 이해교육,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다문화 인식제고 분야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

<표 IV-1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업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분야(사업)	보조금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 수행기관(단체)
계	사업총액 : 556,053천원 (보조금 : 548,643천원 / 자부담 : 7,410천원)		
“Together Jeju 다문화 페스티벌”	30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뉴스제주
외국인주민 한가위 한마당 운영	15	각종 놀이 프로그램, 한가위 음식나눔	외국인평화공동체
다문화대상 생활수기 공모전	20	시상식 및 생활수기 발표 녹화방송	KCTV제주방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30	다문화 자녀 언어평가 및 맞춤식 언어교육	제주시다문화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통합지원	100	다문화인식개선 토론회, 다문화 자녀 글로벌 리더 과정 (각국 대사 초청 토크콘서트 등)	제주매일
다문화가정 제주 바로 알기	17	제주의 언어, 역사, 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주도민일보(신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주간 행사	10	제10회 제주 다민족문화제 개최	제주이주민센터
거주외국인 제주문화 이해교육(보조율 90%)	18	거주외국인 대상 한국문화학교 운영	제주이주민센터(2)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27.825	제주문화관광통역해설사 양성, 옷 수선사 기술교육, 생활요리지도사	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회
	10	다문화 창의·인성강사 양성과정	서귀포시다문화센터
	27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13.678	바리스타, 토탈공예사업 지도사, 정보기술자격(ITO) 자격증 자격취득과정	동부종합사회복지관
	11.95	결혼이민자 미용2급 자격준비 교육과정 운영	대한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9.5	결혼이민자 제과·제빵 기술교육	제주이주민센터

분야(사업)	보조금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 수행기관(단체)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20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직 필수과목 운영	제주대 산학협력단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설맞이 다문화가정 전통문화체험	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회
	30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KCTV제주방송
	5	이주여성 제주역사문화탐방	미디어제주
	10	다문화 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꿈틀꿈틀 인형극장	제주이주민센터
	10	서부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글교실 중급반	서부다문화가족센터
	10	다문화가족 문화역사언어 교육	국제가정문화원
	10	다문화가족 한국어 및 제주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회
	20	원거리지역 찾아가는 다문화인식 개선 교육	공모 추진 중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내부자료(2017. 07. 30.).

<표 IV-10. 계속>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업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분야(사업)	보조금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 수행기관(단체)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 (보조율 90%)	9	해피캠핑, 해피패밀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9	다문화가족 자녀 심리 상담·치료 및 부모교육	제주아동심리상담센터
	9.9	다문화가족 자조활동 역량강화	다문화가정제주특별 자치도협회(1.1)
	9	서부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 화요리교실	서부다문화가족센터
	11.79	다문화가족 자기효능감 향상 위한 역량강화	외국인평화공동체
중도입국 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20	중도입국자녀 특기적성 향상 프로 그램	국제가정문화원
	20	“Together, High-five”	제주시다문화센터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내부자료(2017. 07. 30.).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분야는 다문화 인식제고와 사회통합 등의 사업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43.2%를 차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예산 지원규모는 각각 18.0%를 차지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에 지원된 예산 비율은 8.6%이고, 중도입국 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7.2%, 그리고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에 3.6%를 차지함.
- 이와 더불어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시는 국비와 지방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음(<표 IV-11, 표 IV-12> 참조).
-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다문화가족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음. 국비 지원이 전체 예산의 77.6%(1,003백만여원)를 차지함.

&lt;표 IV-11&gt; 제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업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 (천원)	사업내용	사업수행 기관 (단체)
행 정 시 총 계		1,294,547		
제주시	제주시 소계	823,592		
	국비지원사업 소계	633,6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국비)	163,134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제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29,151	센터간 네트워크 형성 및 도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28,500	정보제공, 상담, 위기사례 개입	
	방문교육사업	184,752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제공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48,750	이중언어 수업 및 교실 지원	
	자녀언어발달지원	78,058	언어평가 및 교육, 부모상담 제공	

구 분	사 업 명	예산 (천원)	사업내용	사업수행 기관 (단체)		
자 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64,125	초기 정착단계 통·번역서비스 제공			
	한국어교육 운영	22,162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15,000	부모-자녀관계 향상, 자녀 사회성 발달, 자녀 미래설계, 위기사례 지원			
	자체사업 소개	189,960	제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960				1인당 매월 170~180천원 지급
	방문교육지도사 교통비 지원	12,000				왕복 1회당 3,100원 추가지원
	다문화가족 캠프 및 하계 수련회	5,000				다문화가족 관계개선 캠프 운영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문학특강	15,000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의 활동프로그램 운영
	결혼이주여성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지원	10,000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교육 운영
	다문화체험교육 ‘우리나라를 소개합니다’	8,000				갈등예방을 위한 문화체험 교육
	다문화가족과 함께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 사업	10,000				제주 역사·문화 바로알기, 환경교실 운영 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9,000	부모관계 향상, 언어·문화교육 및 문화탐방 등(3,000천원 공모중)	제주글로벌센터 영락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15,000	한국어교육 및 자녀교육	서부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단체 사업비 보조	50,000	자녀교육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자격증 취득과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주글로벌센터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25,000	다문화이해교육 및 체험행사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등), 연극을 통한 인식개선 (13,500천원 공모중)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사)제주문화예술공동체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내부자료(2017. 07. 30.).

<표 IV-12> 서귀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업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 (천원)	사업내용	사업수행 기관 (단체)
서 귀 포 시	합 계	470,955		
	국 비 지 원	국비지원사업 소계	370,24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30,046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방문교육서비스	92,376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 등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20,000	정보제공, 상담, 위기사례 개입
		결혼이민자 멘토링	3,000	1:1 멘토링 서비스 지원
		(집합)한국어 교육	22,162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59,915	언어평가 및 교육, 부모상담 제공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21,375	이중언어 수업 및 교실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21,375	초기 정착단계 통·번역서비스 제공
	자 체	자체사업 소계	100,706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26,900	한국어교육, 자녀학습, 운전 면허 취득 지원, 작명 서비스 지원 등
		다문화인식 개선 프로그램	14,000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2,610	1인당 매월 170~180천원 지급
		방문교육지도사 교통비 지원	6,696	왕복 1회당 3,100원 추가지원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10,000	레크리에이션, 공연(서귀포 시민회관)
		이주민정착지원사업	20,500	통번역서비스 및 국적체류 관련 정보제공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내부자료(2017. 07. 30.).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업에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과 행정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 유형에 차이가 있음.
  - 행정시에서 국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에 집중되어 있음.
  - 행정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주로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인문학 특강,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 2)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근로자는 2016년 말 기준 6,383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 19,524명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주로 경제정책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법적 지원 근거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제15조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제주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사업은 주로 상담센터와 쉼터 운영 사업과 외국인근로자 편의지원 사업임.
  - 이 외에도 외국인가족페스티벌과 여름캠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표 IV-13>은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와 쉼터 등의 연도별 실적을 보여줌. 제주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상담센터와 쉼터 운영에 2013년 이후 매년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지만, 50백만원이 지원되어 26개국 출신의 외국인근로자 1,428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추진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쉼터’도 2013년 이후 매년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 왔고, 2017년에는 50백만원 예산 지원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표 IV-13>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및 쉼터 연도별 지원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건수, 명)

구 분	예산 및 실적	2013	2014	2015	2016	2017
상담센터	예산	12	32	32	50	50
	실적	312건 (14개국)	547건 (16개국)	1,154건 (16개국)	2,037건 (17개국)	1,428건 (26개국)
쉼터	예산	16	26	26	30	50
	실적	82명 (10개국)	124명 (10개국)	127명 (10개국)	137명 (10개국)	-
외국인가족 페스티벌	예산	-	5,000	-	민간단체 후원	-
	실적	-	500명 (13개국)	-	500명 (15개국)	-
여름캠프	예산	JCI 후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공모사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공모사업	-	-
	실적	65명 (7개국)	77명 (8개국)	120명 (10개국)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내부자료(2017. 07. 30.).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행사 프로그램은 외국인가족페스티벌과 여름캠프인데 주로 민간단체가 공모하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여름캠프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운영이 중단됨.

○ 외국인근로자의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 5월 17일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우리은행, 그리고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 기관별로 외국인주민의 편의지원에 협조하기로 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우리은행 내 편의시설 공간 리모델링과 유지 보수 등 건물 이용에 필요한 시설 지원 예정임.

-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는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과 지역사회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우리은행은 제주지점 3층 공간(396㎡)을 제주이주민센터 사무실로 무상

임대해 주고, 외환송금센터, 출국만기보험금 업무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관련 업무를 지원할 계획임.

### 3)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외국인선원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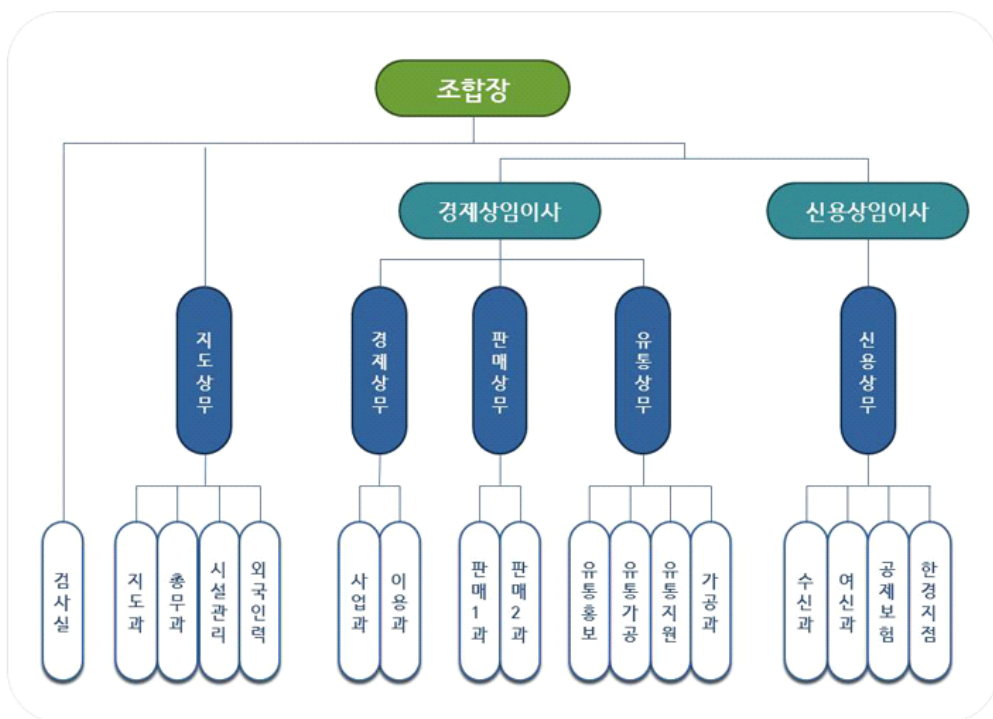
#### (1) 제주지역 외국인선원의 특성

- 외국인선원들은 고용허가제(E-9비자)와 외국인선원제(E-10비자)를 통해서 입국하고 있음.
  - 외국인선원제도와 고용허가제도는 법적근거, 유관기관, 고용절차, 관련법률, 입출국 지원, 등 체류기간 최장 4년 10개월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운영상 차이점이 있음.
-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한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선원)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동티모르, 캄보디아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7년 7월 기준 504개의 사업장에 963명이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시하는 고용허용 업종에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은 20톤 미만 선박, 양식장, 소금채취업 등에 한정됨.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선원은 선박 1척당 2명만 고용이 가능하므로, 만약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이 발생할 경우 재배정을 받기까지는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에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는 외국인선원 대상 취업교육과 고충상담, 행정업무 대행 등을 담당함.
- 외국인선원제도(E-10비자)를 이용하여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우리나라 송입(送入)업체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해당국가의 송출(送出)기관 협조 하에 면접, 각종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 등을 시행함.
  - 이와 같은 자격 기준을 통과하면 승선 실습 등 약 2개월 간 실전 교육을 이수하는 등 고용허가제도에 비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짐.

- 외국인선원제도(E-10비자)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2016년 기준)는 약 10,000명 정도이며, 제주지역에는 약 1,000명 정도 있음.
- 한림지역 450명, 서귀포시지역 200명, 성산포지역 150명, 추자도지역 120명, 제주시지역 100명, 모슬포지역 50명 등이 있음.

## (2) 어업인종합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한림수협은 전국 수협 최초로 2015년 외국인근로자 전담부서인 외국인력지원과를 신설하여 외국인 선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그림 IV-1] 참조).
- 한림수협에서는 외국인 선원 복지증진정책의 일환으로 방한복 지원, 외국인선원 위안의 밤 등을 추진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의 공감·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그림 IV-1] 한림수협 조직도

- 현재 한림수협 소속 외국인선원이 가장 많으므로, 이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에서는 최초로 ‘어업인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외국인 선원들이 증가하면서 선주와 선원 간에 인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 갈등을 해소하고 외국인 및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건립 목적이 있음.
  - 현재 외국인을 고용한 선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교육(구타 방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어업인종합지원센터는 2018년 착공하여 2019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스포츠센터, 물리치료실, 전문상담실 운영, 공연장, 쉼터, 교육장, 외국인 휴게실 배치 등 다목적 시설을 갖추게 될 것임.
- 이 시설이 건립되면 해녀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임.
  - 외국인복지센터는 지상 3층(9,917㎡ ; 3,000천평), 총 예산 170억(국비40%, 지방비40%, 자비20%, 자체 36억) 규모의 시설로 운영 예정임.

## 다.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조직 사례 분석

### 1) 공공 지원조직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공기관인 행정(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9개 부서에서 외국인에 대한 여러 지원 업무들을 하고 있음(<표 IV-15>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관련 지원 업무는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업무,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교사, 외국인자문위원회 운영, 재외도민 교육 등에 관한 것임.

&lt;표 IV-15&gt; 외국인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별 주요 업무 내용

관련부서	업무
여성가족과 (가족친화계)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경제정책과 (노사협력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외국인 근로자 지원업무 전반(상담센터, 컴퓨터 운영, 시설리모델링 지원 등)</li> <li>·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 업무</li> </ul>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근무지원(제주항 외국인 무사증 검색 지원)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계)	외국인 투자유치 총괄계획 수립, 투자유치 홍보 업무, 국외 투자유치설명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국어 서비스 제공,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해양산업과 (해운항만물류과)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관리
보건건강위생과 (위생관리계)	외국인 일반숙박시설, 음식점 이용 점검 등
기획조정실 (국제자유도시계)	제주미래비전 외국인자문위원회 운영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국제화교육 강화 및 지원, 외국어 상용화에 관한 사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	외국인 업무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u.go.kr>, 2017. 08. 기준).

## 2) 민간 지원조직

- 한국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대개 사회적 약자로서 생활하는 제주 거주 외국인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지원은 주로 배려, 나눔 그리고 박애 정신을 가진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시행됨.
- 제주 거주 외국인 지원조직은 물론 행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의 지원을 받지만 위탁 운영 형태가 대부분임.

- 제주지역의 외국인 관련 민간지원조직에는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와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가 있음.

## □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sup>18)</sup>

### ① 설립 목적

-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자를 위한 교육, 상담, 의료지원, 국제협력 사업 등의 활동으로 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제주사회의 적응을 돕고 우리나라와 제주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②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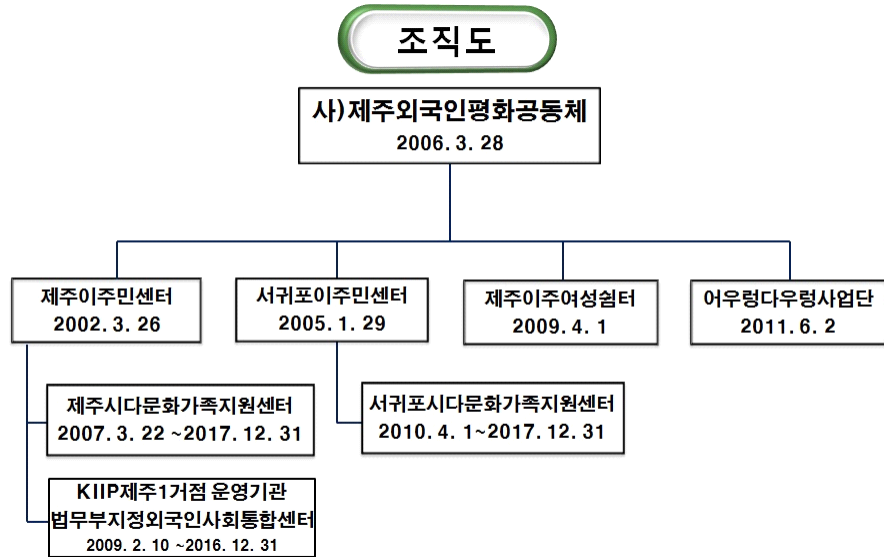
- 2000년 8월 23일 제주기독교청년협의회 부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의 설립으로 출범함.
-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가 2002년 3월 26일 정식 창립되었고, 2003년 7월 30일에 제주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됨.
- 2006년 10월 25일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를 모체로 <사단법인 제주외국인 평화공동체>가 정식 설립됨.
  -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의 부설기관으로는 제주이주민센터(구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의 명칭 변경, 2008. 02.), 서귀포이주민센터, 설만한 물가, 어우렁다우렁사업단 등이 있음.
- 제주이주민센터는 제주시로부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아(2007. 03. 22.~2017. 12. 31.) 정부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서귀포이주민센터도 서귀포시로부터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아(2010. 04. 01.~2017. 12. 31.) 정부 위탁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음.

---

18)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에 대한 내용은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의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③ 조직체계도

○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부설기관은 [그림 IV-2]와 같음.



[그림 IV-2] 사)외국인평화공동체 조직도

④ 주요 사업 내용

○ 문화사업

- 외국인근로자 한가위 한마당(2000년 ~ 현재, 추석명절 위로행사)
- 외국인가족페스티벌(2003년 ~ 현재, 설명절 위로행사)
- 제주다민족문화제(2006년 ~ 현재, 세계인의 날 행사)
- 다문화가족을 위한 꿈틀 꿈틀 인형극장(2013)

○ 긴급구호 지원 사업

- 신아시아 협력 프로젝트
- 스리랑카 쓰나미지역 의료진료 및 놀이치료 활동 지원 /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모금 사업, 몽골, 캄보디아 평화봉사단 파견, 동일본대지진 피해 고통 나눔 모금 운동



- 필리핀 하이옌 태풍 피해 긴급 구호 지원(2013년 필리핀 타클로반)
- 네팔 대지진 피해 긴급 구호 지원 사업(2015년 신두팔초크 4개 학교 파견 지원)
- 기타 사업으로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는 홍보사업(스마트 홍보, 살꿈세 소식지 발행)과 수익사업(다문화가정 자녀 위한 사랑나눔 자선음악회, 제주이주민을 위한 자선음악회)을 추진하고 있음.

⑤ 부설기관의 주요 운영사업

○ 제주시 이주민센터(2002. 03. 26. 설립)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 인권 상담 센터 운영 / 피해 이주노동자 쉼터 운영(무료 숙식 제공 등)</li> <li>● 이주민 대상 무료진료 병원 네트워크 사업</li> <li>● 교육사업 : 운영, 노동법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인력제도, 법, 교육 등</li> <li>● 문화사업 : 외국인 가족 페스티벌, 이주민과 함께 하는 한가위 한마당, 이주노동자 여름 캠프, MAYDAY 행사, 전도이주민한국어말하기 대회 등</li> <li>● 수탁사업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 기관(2009~ ) 제주시지정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2007~) (지정일 : 2007~2017, 센터장 : 김정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센터(소지역) 운영(2014~)</li> </ul>
------	--

○ 서귀포 이주민센터 (2005. 01. 29. 설립)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근로자 상담 / 이주여성 상담</li> <li>● 교육사업 : 한국어교실 운영, 노동법 및 외국인 근로자 관련 인력제도, 법 교육 등</li> <li>● 문화사업 : 외국인 가족 페스티벌 및 이주민과 함께 하는 한가위 한마당 연계</li> <li>● 수탁사업 : 서귀포시지정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정일 2010~현재)</li> </ul>
------	---

○ 제주이주여성쉼터 ‘실만한 물가’(2009. 04. 01. 설립)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사업 : 관련기관 홍보 가정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폭력피해 지원 시설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li> <li>• 긴급지원사업 :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 발생피해자 숙식 및 의료비, 법무비용 등 지원</li> <li>• 입소자 및 가족상담 : 개인면담 및 가족상담, 각종 생활정보, 의료, 법률, 취업정보 제공</li> <li>• 심리정서지원 : 집단상담, 성장캠프(춤테라피), 한국어교실, 성교육, 주말농장, 음악교실 등</li> <li>• 문화사업 : 유적지 및 관광명소 방문</li> </ul>
------	--

□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sup>19)</sup>

① 설립 목적

- 다문화 사회의 한 계층인 이주 외국인(결혼이민자와 가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형제애를 바탕으로 이주 외국인들의 제주 도민에 대한, 제주 도민들의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통해 모든 이들이 전인적이고 평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 제주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권리 보장, 심신의 안정과 한국사회 내에서 이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② 주요 연혁

- 천주교제주교구가 2004년 2월 15일부터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게 됨.
- <제주외국인쉼터>는 2007년 6월 10일 개소하였음.
  - 제주외국인쉼터는 2004년 3월 7일 이주 외국인들을 위한 라파엘클리닉(무료)을 개원하고, 제주 거주 이주 외국인들이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

19)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에 대한 내용은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의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설립 토대를 갖추.

- 2007년 8월에 이주사목 관련 봉사자들과 이주 외국인들을 위한 휴양시설 (만남의집 ; 애월읍 하귀리 소재)을 마련함.
- <외국인쉼터>는 2015년 7월 1일로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름.

### ③ 예산 현황

- 2016년도 센터 예산 총액은 75백여만원이며, 그 중에 보조금 3백만원, 자체 수입이 72백여만원임.
- 센터 운영 예산의 96%가 자체 조달되고 있고, 4% 예산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고 있음.

### ④ 주요 운영사업

-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는 이주 외국인들 간의 만남을 위한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인권변호사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로 법률적 지원 서비스 지원체계도 갖추고 있음.
- 또한 이주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2017년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자 함.
- 외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 사업
  - 외국인 차별, 인권보호, 의사소통, 체불임금, 퇴직금 등과 같은 문제들을 상시적으로 상담 및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 대상의 상담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음.
- 외국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 활동 사업
  - 무료진료소 라파엘클리닉 운영
  - 한국어교실 운영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가톨릭스카우트 활동
  - 문화행사(설날에 떡국 나눔 및 놀이체험, 베트남 공동체 설날에 서귀포성당 하논카페 운영, 성탄절에 이주외국인을 위한 Multi-Cultural Concert)

- 야외행사(이민의 날 체육대회, 가톨릭스카우트 연합 캠핑, 이주노동자 위한 물놀이, 다문화가정 위한 물놀이, 가족캠핑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채롭게 추진하고 있음.

## 라.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정책의 한계점

### 1) 외국인 지원정책 사업의 한계점

- 제주지역에서 외국인을 위한 지원정책 사업이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음.
-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지원정책이나 사업들은 개별 부서(여성가족정책과, 경제정책과, 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등)들에 의해서 각각 추진되어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체계적·종합적 외국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 설치가 요망됨.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관련 여러 조례(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조례들이 중앙정부의 외국인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어 제주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 데 미흡한 편임.
- 셋째, 제주지역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 사업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의 외국인 지원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다문화가족 예외) 수립 없이 조례 제시 사항 또는 정부 지원사업의 한계 내에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그치고 있음.
- 넷째, 제주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이 특정 대상자(특히 결혼이주여성)에 한정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우수장

사가 부족한 실정임.

- 다섯째, 제주지역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정책과 행정서비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가 중요함. 이에 비해 외국인들이 제주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받는 데 필요한 사회적 인식과 홍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로부터 외국인 지원정책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를 자주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외국인 지원정책사업(교육, 일자리, 상담, 비자 등) 정보 접근성이 높지만 그렇지 못한 외국인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임.
- 여섯째, 외국인 지원정책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인력과 예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등) 또는 제주지역 내 여러 NGO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미흡한 편임.
  - 외국인 지원정책 사업들이 주로 공모 과정을 거쳐 지원을 받은 후에 각각의 사업 주체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위탁사업을 받아 추진해 온 민간단체에 관례적으로 사업이 배정되어 추진하는 데 머무는 경향이 있음.
- 일곱째, 제주 거주 외국인 지원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모니터링하거나 정책사업의 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함.
  - 매년 추진되는 다양한 외국인 지원정책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모니터링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부재하여 계획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점이 있음.
- 끝으로, 외국인주민 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거의 11개에 이르고 있지만 외국인 지원 담당 직원들에 대한 특별 직무교육(외국인 이해 등)이 부재한 상태임.
-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 지원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원 담당 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2) 민간 지원조직 운영의 한계점

-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범위와 목적의 한계 내에서 외국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둘째, 제주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민간지원조직 내 전문 연구 인력의 부재로 교육과 사업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음.
- 셋째, 민간지원조직은 예산 부족으로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할 수 없고, 제주의 다양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넷째,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에 힘쓰는 민간단체(또는 기관)들이 있지만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금융기관, 자원봉사단체, 각종 사회단체, 청소년 및 대학생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들과 협력 네트워크가 미흡한 상태임.
- 다섯째, 민간지원조직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지만 외국인 참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여섯째, 제주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민간단체(또는 기관)들은 행정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사업의 실적 제고에 치중하다보면 사업의 정책적 실효성 제고와 질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3. 제주지역의 외국인 대상 실증조사 결과 및 해석

#### 가.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주 거주 만족도, 제주 적응 및 생활, 행정지원서비스 그리고 개인적 특성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제주지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2) 조사 방법

###### (1) 조사 설계 및 실시

- 모집단 :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
- 표본추출방법 : 임의표집
- 표본 크기 : 57부
- 자료수집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 조사대상 지역 : 제주 전지역
- 조사 기간 : 2017년 7월 8일 ~ 8월 20일

###### (2) 조사 방법

-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가 사용되었으며, 면접조사원이 자료를 수집하였음.
  - 조사대상자가 직접 설문 응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의 도움을 받아 1:1 면접조사를 하였음.
-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현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만 20세 이상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했음.<sup>20)</sup>

- 다만, 이 연구 취지에 맞게 외국인들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자의 표본 선정은 2017년 7월 현재 외국인 지원사업들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음.
- 외국인주민 최종 조사면접 대상자의 표집방법은 임의표집하였음.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행정시의 이주센터 이용자 포함)와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조사 동의와 한국어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 표출하여 최종 조사대상 표본수(57명)가 적음.
- (사)외국인평화공동체를 이용하는 외국인근로자 30명, 결혼이주여성 11명, 그리고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근로자 6명, 결혼이주여성 1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데 임의표집에 의존하였음.
- 위에서 제시된 임의표집은 이들 기관(혹은 단체) 관계자와 면담에 기초하였음.
- 또한 조사대상 외국인에 대한 직접 설문 응답 시에는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해당 외국인의 언어에 익숙한 외국인의 도움을 받았음.

### (3) 자료 분석

-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그리고 기술적 설명(Descriptive explanation)을 실시하였음.
-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서 조사대상 외국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외국인의 제주 거주 만족도, 제주 적응과 생활, 행정지원서비스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 등의 변인들이 포함됨.

---

20) 이 조사에서 조사대상 외국인은 외국인 지원 민간지원 단체를 이용하는 외국인주민에 한정하였음. 다양한 형태의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있으나, 거주지역과 집 외부 출입을 하지 않거나 혹은 집에서만 주로 일상생활을 보내는 외국인에 대한 접근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동시에 그런 외국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데 따른 조사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도 고려하였음.



## 나. 제주 거주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이 조사의 표본크기는 57명으로, 세부 응답자 특성별 완료 표본 구성은 아래와 같음(<표 IV-15> 참고).
- 조사대상자 연령대는 20~30대가 82.4%를 차지하여, 대다수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이 젊은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음.
- 조사대상자의 출신국가 가운데 베트남이 26.3%, 다음으로 필리핀 19.3%, 중국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거주기간을 보면, 3년 미만이 35.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10년 미만 26.3%, 3~5년 미만 2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리로 10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도 12.3%를 차지하고 있음.
- 조사대상 외국인들 대다수(82.5%)가 제주시 동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직업분포를 보면, 근로직종(단순근로자)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36.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12.3%를 차지하고 있음. 나머지는 자영업, 전업주부 등의 직업을 갖고 있음.
- 그리고 조사대상 외국인의 학력 분포는 대학교 재학 이상 학력을 갖춘 경우는 42.1%로 가장 많고, 다음 고등학교 졸업 31.6%, 그리고 중학교 졸업 이하 24.6%를 차지하고 있음.

&lt;표 IV-16&gt;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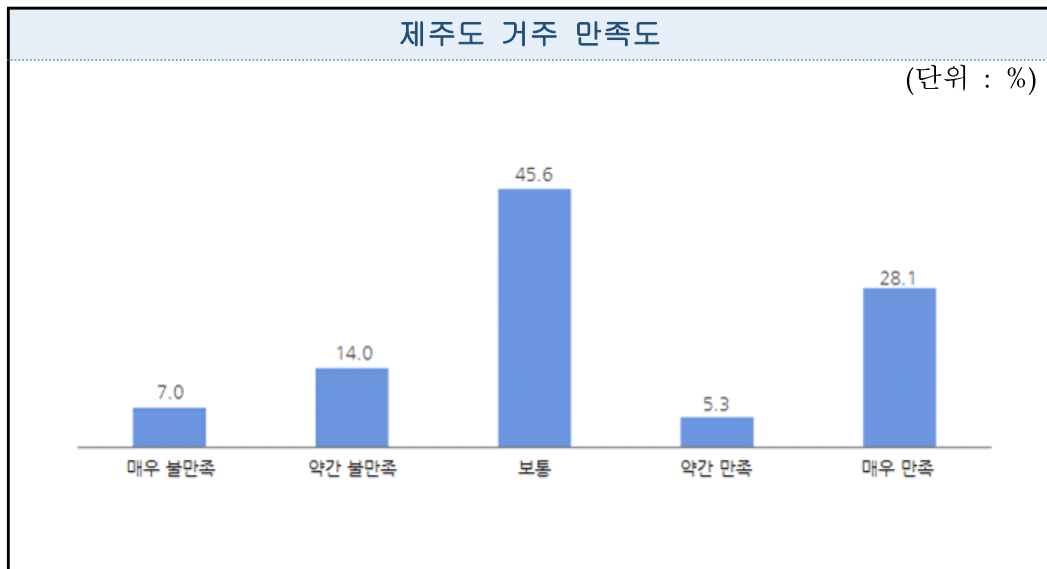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비중
[전 체]		57	100.0
성별	남자	27	47.4
	여자	30	52.6
연령	20 대	26	45.6
	30 대	21	36.8
	40 대 이상	9	15.8
	모름/무응답	1	1.8
출신 국가	네팔	6	10.5
	베트남	15	26.3
	인도네시아	5	8.8
	중국	9	15.8
	캄보디아	4	7.0
	태국	5	8.8
	필리핀	11	19.3
	기타/무응답	2	3.5
거주 기간	3 년 미만	20	35.1
	3-5 년 미만	14	24.6
	5-10 년 미만	15	26.3
	10 년 이상	7	12.3
	모름/무응답	1	1.8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82.5
	서귀포시 동지역	1	1.8
	제주시 읍·면지역	8	14.0
	서귀포시 읍·면지역	1	1.8
직업	농·축·수산업	15	26.3
	자영업	3	5.3
	화이트칼라	7	12.3
	블루칼라	21	36.8
	전업주부	3	5.3
	기타/무직	5	8.8
	무응답	3	5.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24.6
	고등학교 졸업	18	31.6
	대학교 재학 이상	24	42.1
	모름/무응답	1	1.8

## 2) 제주 거주 만족도

### (1) 제주도 거주 만족도

- 제주도 거주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보통' 응답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 응답이 28.1%로 두 번째로 높았음.
- 계층별 분석에서 '만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중국(66.7%), 3-5년 미만(57.1%), 자영업(100.0%), 화이트칼라(57.1%), 전업주부(66.7%)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3] 제주도 거주 만족도

<표 IV-17> 제주도 거주 만족도

(단위: 명, %, 점)

		사례 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100 점 평균
								불만족	보통	만족	
[전 체]		57	7.0	14.0	45.6	5.3	28.1	21.1	45.6	33.3	58.3
성별	남자	27	14.8	18.5	48.1	3.7	14.8	33.3	48.1	18.5	46.3
	여자	30	0.0	10.0	43.3	6.7	40.0	10.0	43.3	46.7	69.2
연령	20 대	26	11.5	7.7	53.8	3.8	23.1	19.2	53.8	26.9	54.8
	30 대	21	4.8	19.0	28.6	9.5	38.1	23.8	28.6	47.6	64.3
	40 대 이상	9	0.0	22.2	55.6	0.0	22.2	22.2	55.6	22.2	55.6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50.0
출신국가	네팔	6	33.3	16.7	50.0	0.0	0.0	50.0	50.0	0.0	29.2
	베트남	15	0.0	26.7	33.3	6.7	33.3	26.7	33.3	40.0	61.7
	인도네시아	5	0.0	0.0	60.0	20.0	20.0	0.0	60.0	40.0	65.0
	중국	9	0.0	11.1	22.2	0.0	66.7	11.1	22.2	66.7	80.6
	캄보디아	4	0.0	25.0	75.0	0.0	0.0	25.0	75.0	0.0	43.8
	태국	5	0.0	0.0	60.0	0.0	40.0	0.0	60.0	40.0	70.0
	필리핀	11	18.2	9.1	54.5	9.1	9.1	27.3	54.5	18.2	45.5
	기타/무응답	2	0.0	0.0	50.0	0.0	50.0	0.0	50.0	50.0	75.0
거주기간	3년 미만	20	10.0	15.0	55.0	0.0	20.0	25.0	55.0	20.0	51.3
	3-5년 미만	14	7.1	14.3	21.4	7.1	50.0	21.4	21.4	57.1	69.6
	5-10년 미만	15	0.0	6.7	53.3	6.7	33.3	6.7	53.3	40.0	66.7
	10년 이상	7	14.3	28.6	42.9	14.3	0.0	42.9	42.9	14.3	39.3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5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6.4	17.0	42.6	4.3	29.8	23.4	42.6	34.0	58.5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0.0	0.0	0.0	0.0	100.0	0.0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0.0	0.0	75.0	0.0	25.0	0.0	75.0	25.0	62.5
	읍·면지역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75.0
직업	농·축·수산업	15	0.0	26.7	60.0	6.7	6.7	26.7	60.0	13.3	48.3
	자영업	3	0.0	0.0	0.0	0.0	100.0	0.0	0.0	100.0	100.0
	화이트칼라	7	0.0	28.6	14.3	0.0	57.1	28.6	14.3	57.1	71.4
	블루칼라	21	19.0	9.5	47.6	0.0	23.8	28.6	47.6	23.8	50.0
	전업주부	3	0.0	0.0	33.3	0.0	66.7	0.0	33.3	66.7	83.3
	기타/무직	5	0.0	0.0	60.0	40.0	0.0	0.0	60.0	40.0	60.0
	무응답	3	0.0	0.0	66.7	0.0	33.3	0.0	66.7	33.3	66.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0.0	35.7	42.9	7.1	14.3	35.7	42.9	21.4	50.0
	고등학교 졸업	18	0.0	0.0	55.6	11.1	33.3	0.0	55.6	44.4	69.4
	대학교 재학 이상	24	16.7	12.5	37.5	0.0	33.3	29.2	37.5	33.3	55.2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50.0

## (2) 제주도 거주 불만족 이유

- 제주도 거주 불만족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서’ 및 ‘육지(제주도외 지역)에 가는 게 불편해서’ 응답이 33.3%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55.6%), 30대(80.0%), 필리핀(66.7%), 3-5년 미만(100%), 대학교 재학 이상(57.1%),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60.0%), 네팔(100%), 3년 미만(40.0%), 블루칼라(50.0%), 대학교 재학 이상(57.1%)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4] 제주도 거주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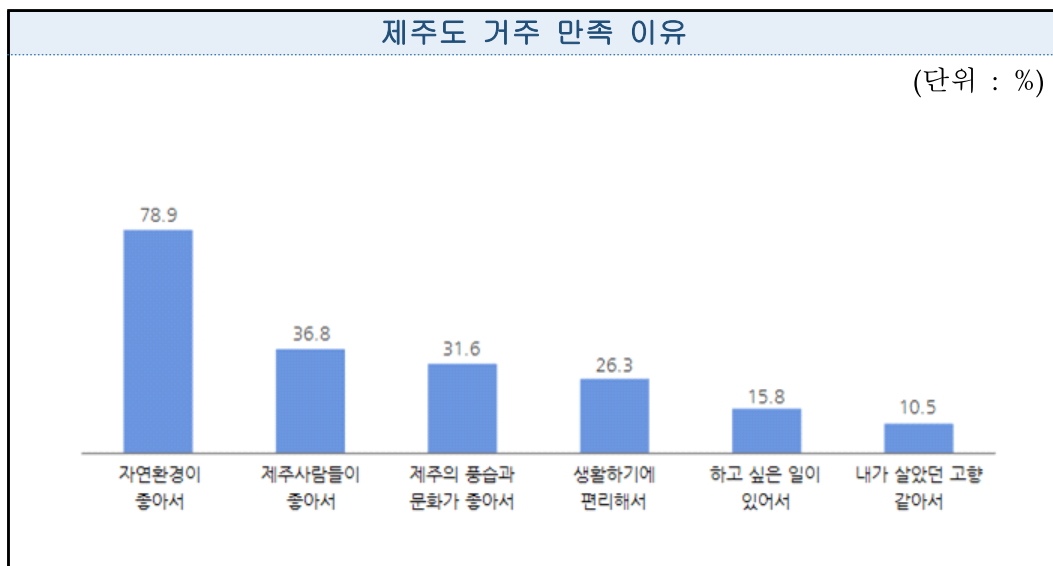
<표 IV-18> 제주도 거주 불만족 이유

(단위: 명, %)

		수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서	육지(제 주도와 지역)에 가는게 불편 해서	제주의 언어, 풍습과 문화에 적응이 힘들어서	주거 시설이 좋지 않아서	자녀 양육 및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서	문화 차이	택시 기사가 가끔 바가지를 씩운다
[전 체]		12	50.0	33.3	33.3	25.0	16.7	8.3	8.3	8.3
성별	남자	9	55.6	33.3	44.4	33.3	22.2	0.0	0.0	11.1
	여자	3	33.3	33.3	0.0	0.0	0.0	33.3	33.3	0.0
연령	20 대	5	40.0	60.0	60.0	20.0	20.0	0.0	0.0	0.0
	30 대	5	80.0	0.0	20.0	40.0	0.0	20.0	20.0	0.0
	40 대 이상	2	0.0	50.0	0.0	0.0	50.0	0.0	0.0	50.0
출신국가	네팔	3	33.3	100.0	33.3	0.0	33.3	0.0	0.0	0.0
	베트남	4	50.0	0.0	25.0	75.0	0.0	25.0	0.0	0.0
	중국	1	100.0	0.0	0.0	0.0	0.0	0.0	100.0	0.0
	캄보디아	1	0.0	0.0	0.0	0.0	100.0	0.0	0.0	100.0
	필리핀	3	66.7	33.3	66.7	0.0	0.0	0.0	0.0	0.0
거주기간	3 년 미만	5	40.0	40.0	60.0	40.0	20.0	0.0	0.0	0.0
	3-5 년 미만	3	100.0	33.3	0.0	33.3	0.0	0.0	33.3	0.0
	5-10 년 미만	1	0.0	0.0	0.0	0.0	100.0	0.0	0.0	100.0
	10 년 이상	3	33.3	33.3	33.3	0.0	0.0	33.3	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11	45.5	36.4	27.3	27.3	18.2	9.1	9.1	9.1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0.0	100.0	0.0	0.0	0.0	0.0	0.0
직업	농·축·수산업	4	50.0	0.0	25.0	75.0	25.0	0.0	0.0	25.0
	화이트칼라	2	50.0	50.0	0.0	0.0	0.0	0.0	50.0	0.0
	블루칼라	6	50.0	50.0	50.0	0.0	16.7	16.7	0.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	40.0	0.0	20.0	60.0	20.0	20.0	0.0	20.0
	대학교 재학 이상	7	57.1	57.1	42.9	0.0	14.3	0.0	14.3	0.0

### (3) 제주도 거주 만족 이유

- 제주도 거주 만족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자연환경이 좋아서' 응답이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사람들이 좋아서' 응답이 36.8%, '제주의 풍습과 문화가 좋아서' 응답이 31.6%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자연환경이 좋아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85.7%), 중국(100%), 3-5년 미만(87.5%), 제주시 동지역(87.5%), 자영업(100%), 화이트칼라(100%), 고등학교 졸업(87.5%), 대학교 재학 이상(87.5%), '제주 사람들이 좋아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42.9%), 30대(50.0%), 중국(50.0%), 5-10년 미만(50.0%), 자영업(66.7%), 중학교 졸업 이하(66.7%)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5] 제주도 거주 만족 이유

&lt;표 IV-19&gt; 제주도 거주 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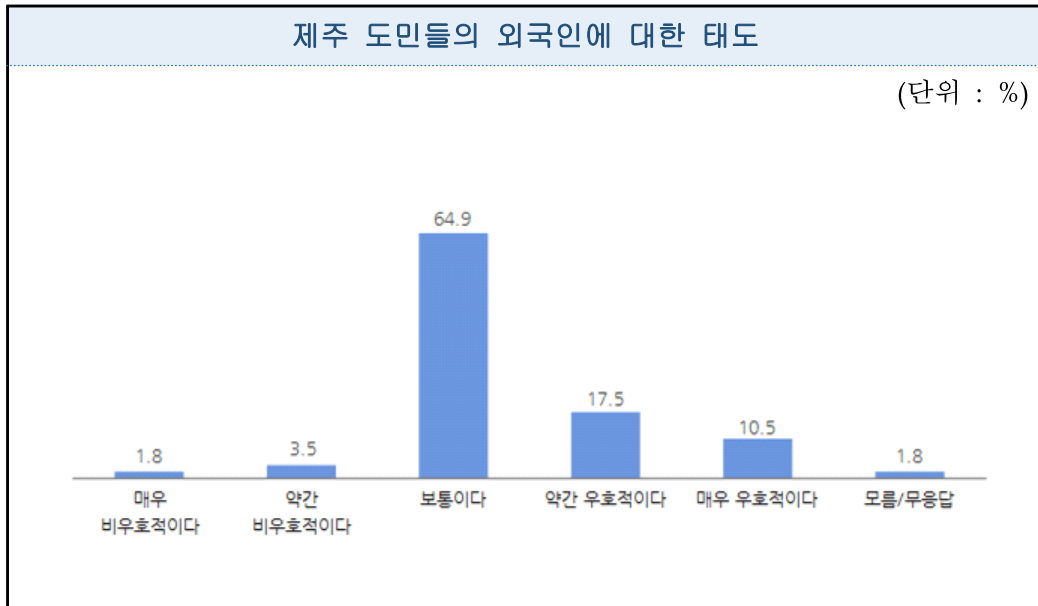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자연 환경이 좋아서	제주 사람들이 좋아서	제주의 풍습과 문화가 좋아서	생활 하기에 편리해서	하고싶은 일이 있어서	내가 살았던 고향 같아서
[전 체]		19	78.9	36.8	31.6	26.3	15.8	10.5
성별	남자	5	60.0	20.0	60.0	20.0	20.0	20.0
	여자	14	85.7	42.9	21.4	28.6	14.3	7.1
연령	20 대	7	71.4	14.3	57.1	42.9	14.3	0.0
	30 대	10	80.0	50.0	20.0	20.0	20.0	10.0
	40 대 이상	2	100.0	50.0	0.0	0.0	0.0	50.0
출신국가	베트남	6	66.7	33.3	50.0	33.3	0.0	16.7
	인도네시아	2	50.0	0.0	100.0	0.0	50.0	0.0
	중국	6	100.0	50.0	0.0	33.3	16.7	0.0
	태국	2	50.0	50.0	50.0	50.0	0.0	0.0
	필리핀	2	100.0	50.0	0.0	0.0	50.0	0.0
	기타/무응답	1	100.0	0.0	0.0	0.0	0.0	100.0
거주기간	3년 미만	4	75.0	25.0	50.0	50.0	0.0	0.0
	3-5년 미만	8	87.5	37.5	12.5	25.0	25.0	12.5
	5-10년 미만	6	66.7	50.0	50.0	16.7	16.7	0.0
	10년 이상	1	100.0	0.0	0.0	0.0	0.0	10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16	87.5	37.5	25.0	25.0	12.5	12.5
	제주시 읍·면지역	2	50.0	50.0	50.0	50.0	0.0	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	0.0	0.0	100.0	0.0	100.0	0.0
직업	농·축·수산업	2	50.0	50.0	50.0	0.0	50.0	0.0
	자영업	3	100.0	66.7	0.0	0.0	0.0	33.3
	화이트칼라	4	100.0	25.0	0.0	50.0	25.0	0.0
	블루칼라	5	60.0	40.0	60.0	40.0	0.0	0.0
	전업주부	2	50.0	50.0	50.0	50.0	0.0	0.0
	기타/무직	2	100.0	0.0	0.0	0.0	50.0	5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	33.3	66.7	66.7	0.0	33.3	0.0
	고등학교 졸업	8	87.5	25.0	37.5	25.0	12.5	12.5
	대학교 재학 이상	8	87.5	37.5	12.5	37.5	12.5	12.5



#### (4) 제주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 제주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 ‘보통이다’ 응답이 64.9%로 가장 높았으며, ‘우호적’ 응답이 28.0%(약간 17.5% + 매우 10.5%)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우호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네팔(50.0%), 베트남(40.0%), 중국(66.7%), 화이트칼라(57.1%), 고등학교 졸업(38.9%)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6] 제주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lt;표 IV-20&gt; 제주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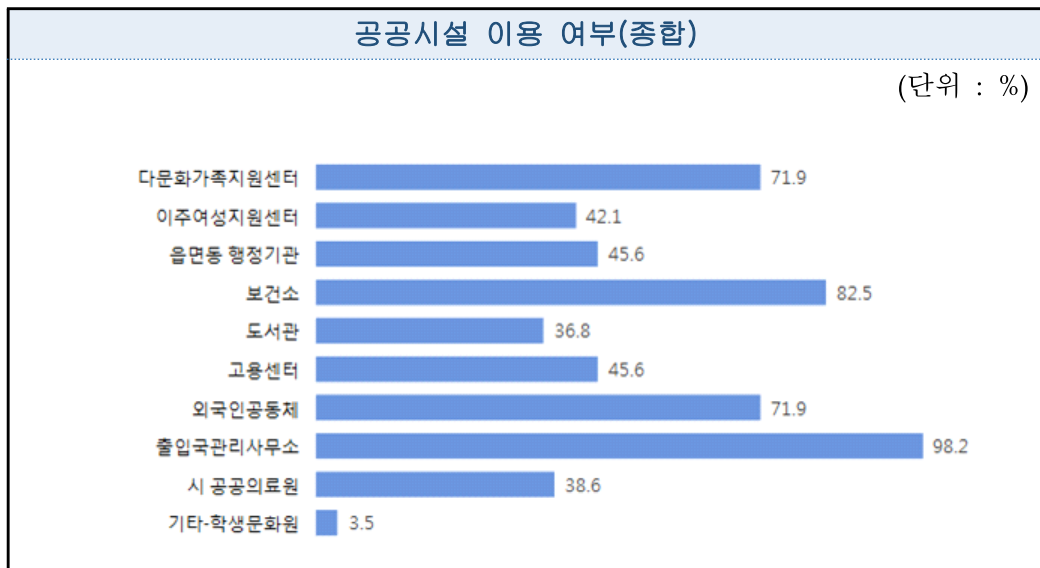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사례 수	매우 비우호적이다	약간 비우호적이다	보통이다	약간 우호적이다	매우 우호적이다	모름/무응답	종합평가				100 점 평균
									비우호적	보통	우호적	모름/무응답	
[전 체]		57	1.8	3.5	64.9	17.5	10.5	1.8	5.3	64.9	28.1	1.8	58.0
성별	남자	27	0.0	3.7	70.4	18.5	7.4	0.0	3.7	70.4	25.9	0.0	57.4
	여자	30	3.3	3.3	60.0	16.7	13.3	3.3	6.7	60.0	30.0	3.3	58.6
연령	20 대	26	0.0	3.8	57.7	26.9	11.5	0.0	3.8	57.7	38.5	0.0	61.5
	30 대	21	0.0	0.0	71.4	9.5	14.3	4.8	0.0	71.4	23.8	4.8	60.0
	40 대 이상	9	11.1	11.1	66.7	11.1	0.0	0.0	22.2	66.7	11.1	0.0	44.4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50.0
출신국가	네팔	6	0.0	16.7	33.3	50.0	0.0	0.0	16.7	33.3	50.0	0.0	58.3
	베트남	15	0.0	0.0	60.0	20.0	20.0	0.0	0.0	60.0	40.0	0.0	65.0
	인도네시아	5	0.0	0.0	80.0	0.0	20.0	0.0	0.0	80.0	20.0	0.0	60.0
	중국	9	11.1	0.0	22.2	44.4	22.2	0.0	11.1	22.2	66.7	0.0	66.7
	캄보디아	4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50.0
	태국	5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50.0
	필리핀	11	0.0	0.0	90.9	0.0	0.0	9.1	0.0	90.9	0.0	9.1	50.0
	기타/무응답	2	0.0	50.0	50.0	0.0	0.0	0.0	50.0	50.0	0.0	0.0	37.5
거주기간	3년 미만	20	0.0	0.0	65.0	20.0	15.0	0.0	0.0	65.0	35.0	0.0	62.5
	3-5년 미만	14	0.0	14.3	42.9	35.7	0.0	7.1	14.3	42.9	35.7	7.1	55.8
	5-10년 미만	15	0.0	0.0	80.0	6.7	13.3	0.0	0.0	80.0	20.0	0.0	58.3
	10년 이상	7	14.3	0.0	71.4	0.0	14.3	0.0	14.3	71.4	14.3	0.0	5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50.0
거주지역	동지역	47	2.1	4.3	61.7	17.0	12.8	2.1	6.4	61.7	29.8	2.1	58.7
	서귀포시 동지역	1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50.0
	제주시 읍면지역	8	0.0	0.0	75.0	25.0	0.0	0.0	0.0	75.0	25.0	0.0	56.3
	읍면지역	1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50.0
직업	농·축·수산업	15	0.0	0.0	80.0	13.3	6.7	0.0	0.0	80.0	20.0	0.0	56.7
	자영업	3	0.0	33.3	33.3	33.3	0.0	0.0	33.3	33.3	33.3	0.0	50.0
	화이트칼라	7	0.0	0.0	42.9	42.9	14.3	0.0	0.0	42.9	57.1	0.0	67.9
	블루칼라	21	0.0	4.8	66.7	19.0	9.5	0.0	4.8	66.7	28.6	0.0	58.3
	전업주부	3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50.0
	기타/무직	5	20.0	0.0	40.0	0.0	20.0	20.0	20.0	40.0	20.0	20.0	50.0
	무응답	3	0.0	0.0	66.7	0.0	33.3	0.0	0.0	66.7	33.3	0.0	66.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0.0	0.0	92.9	7.1	0.0	0.0	0.0	92.9	7.1	0.0	51.8
	고등학교 졸업	18	5.6	0.0	50.0	16.7	22.2	5.6	5.6	50.0	38.9	5.6	63.2
	대학교 재학 이상	24	0.0	8.3	58.3	25.0	8.3	0.0	8.3	58.3	33.3	0.0	58.3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50.0

### 3) 제주 생활

#### (1) 공공시설 이용 여부(종합)

- 공공시설 이용 여부(종합)에 대한 조사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응답이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소' 응답이 8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공동체' 응답이 71.9%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보건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90.5%), 40대 이상(88.9%), 인도네시아(100%), 태국(100%), 3-5년 미만(92.9%), 5-10년 미만(93.3%), 자영업(100%), 전업주부(100%), 기타/무직(100%), 고등학교 졸업(88.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83.3%), 30대(81.0%), 40대 이상(77.8%), 네팔(100%), 중국(100%), 3-5년 미만(92.9%), 10년 이상(100%), 자영업(100%), 화이트칼라(100%), 전업주부(100%), 기타/무직(80.0%), 대학교 재학 이상(83.3%)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7] 공공시설 이용 여부(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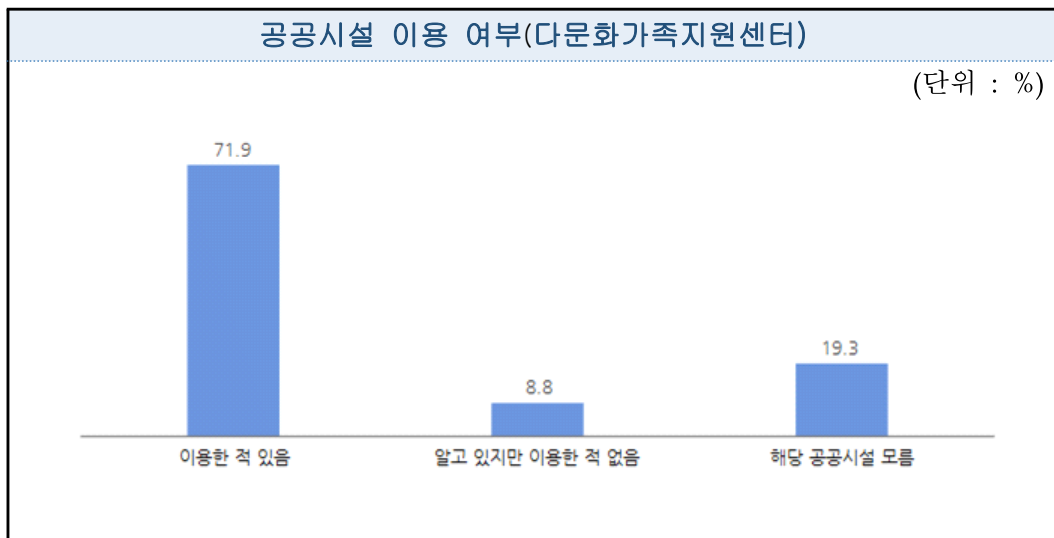
<표 IV-21> 공공시설 이용 여부(종합)

(단위: 명, %)

		사례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이주 여성 지원 센터	읍면동 행정 기관	보건소	도서관	고용 센터	외국인 공동체	출입국 관리 사무소	시 공공 의료원	기타- 학생 문화원
[전 체]		57	71.9	42.1	45.6	82.5	36.8	45.6	71.9	98.2	38.6	3.5
성별	남자	27	59.3	29.6	22.2	77.8	14.8	48.1	74.1	100.0	25.9	7.4
	여자	30	83.3	53.3	66.7	86.7	56.7	43.3	70.0	96.7	50.0	0.0
연령	20 대	26	61.5	42.3	26.9	73.1	19.2	34.6	76.9	96.2	26.9	7.7
	30 대	21	81.0	47.6	66.7	90.5	52.4	47.6	71.4	100.0	47.6	0.0
	40 대 이상	9	77.8	22.2	55.6	88.9	44.4	66.7	55.6	100.0	44.4	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출신국가	네팔	6	100.0	33.3	33.3	50.0	0.0	0.0	100.0	100.0	16.7	33.3
	베트남	15	60.0	60.0	66.7	86.7	20.0	33.3	93.3	100.0	26.7	0.0
	인도네시아	5	60.0	40.0	0.0	100.0	40.0	80.0	60.0	100.0	60.0	0.0
	중국	9	100.0	22.2	55.6	77.8	88.9	44.4	55.6	88.9	66.7	0.0
	캄보디아	4	50.0	25.0	25.0	75.0	25.0	50.0	75.0	100.0	25.0	0.0
	태국	5	60.0	40.0	60.0	100.0	40.0	80.0	20.0	100.0	0.0	0.0
	필리핀	11	63.6	36.4	36.4	81.8	27.3	45.5	63.6	100.0	54.5	0.0
	기타/무응답	2	100.0	100.0	5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0.0
거주기간	3 년 미만	20	45.0	35.0	20.0	65.0	10.0	40.0	75.0	95.0	20.0	10.0
	3-5 년 미만	14	92.9	35.7	57.1	92.9	57.1	28.6	71.4	100.0	35.7	0.0
	5-10 년 미만	15	73.3	46.7	53.3	93.3	46.7	53.3	66.7	100.0	40.0	0.0
	10 년 이상	7	100.0	57.1	71.4	85.7	42.9	71.4	71.4	100.0	85.7	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76.6	44.7	53.2	83.0	40.4	46.8	72.3	97.9	36.2	4.3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100.0	0.0	100.0	0.0	0.0	100.0	100.0	10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37.5	12.5	12.5	75.0	12.5	37.5	62.5	100.0	37.5	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	100.0	10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46.7	6.7	26.7	80.0	6.7	53.3	60.0	100.0	26.7	0.0
	자영업	3	100.0	66.7	100.0	100.0	100.0	66.7	100.0	100.0	66.7	0.0
	화이트칼라	7	100.0	57.1	57.1	85.7	100.0	71.4	71.4	85.7	71.4	0.0
	블루칼라	21	71.4	52.4	38.1	71.4	19.0	28.6	81.0	100.0	38.1	9.5
	전업주부	3	100.0	66.7	100.0	100.0	66.7	33.3	66.7	100.0	33.3	0.0
	기타/무직	5	80.0	40.0	60.0	100.0	60.0	40.0	60.0	100.0	20.0	0.0
	무응답	3	66.7	66.7	33.3	100.0	33.3	66.7	66.7	100.0	33.3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71.4	50.0	42.9	85.7	35.7	50.0	71.4	100.0	35.7	0.0
	고등학교 졸업	18	61.1	27.8	44.4	88.9	33.3	55.6	72.2	100.0	44.4	0.0
	대학교 재학 이상	24	83.3	45.8	50.0	75.0	41.7	37.5	70.8	95.8	37.5	8.3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100.0	0.0	0.0	100.0	100.0	0.0	0.0

### ① 공공시설 이용 여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공공시설 이용 여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한 적 있음’ 응답이 71.9%로 가장 높았으며, ‘해당 공공시설 모름’ 응답이 19.3%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이용한 적 있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83.3%), 30대(81.0%), 40대 이상(77.8%), 네팔(100%), 중국(100%), 3-5년 미만(92.9%), 10년 이상(100%), 자영업(100%), 화이트칼라(100%), 전업주부(100%), 기타/무직(80.0%), 대학교 재학 이상(83.3%)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8] 공공시설 이용 여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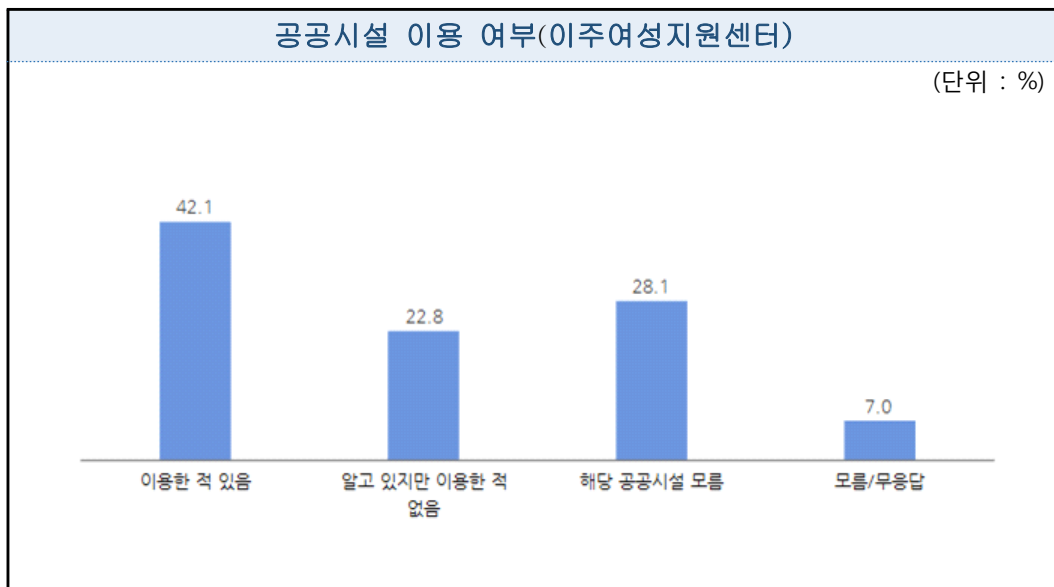
<표 IV-22> 공공시설 이용 여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 명, %)

		사례수	이용한 적 있음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해당 공공시설 모름
[전 체]		57	71.9	8.8	19.3
성별	남자	27	59.3	18.5	22.2
	여자	30	83.3	0.0	16.7
연령	20 대	26	61.5	7.7	30.8
	30 대	21	81.0	4.8	14.3
	40 대 이상	9	77.8	22.2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출신국가	네팔	6	100.0	0.0	0.0
	베트남	15	60.0	6.7	33.3
	인도네시아	5	60.0	0.0	40.0
	중국	9	100.0	0.0	0.0
	캄보디아	4	50.0	0.0	50.0
	태국	5	60.0	40.0	0.0
	필리핀	11	63.6	18.2	18.2
	기타/무응답	2	100.0	0.0	0.0
거주기간	3 년 미만	20	45.0	15.0	40.0
	3-5 년 미만	14	92.9	0.0	7.1
	5-10 년 미만	15	73.3	13.3	13.3
	10 년 이상	7	100.0	0.0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76.6	4.3	19.1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37.5	37.5	25.0
	서귀포시 읍·면지역	1	100.0	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46.7	33.3	20.0
	자영업	3	100.0	0.0	0.0
	화이트칼라	7	100.0	0.0	0.0
	블루칼라	21	71.4	0.0	28.6
	전업주부	3	100.0	0.0	0.0
	기타/무직	5	80.0	0.0	20.0
	무응답	3	66.7	0.0	33.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71.4	7.1	21.4
	고등학교 졸업	18	61.1	16.7	22.2
	대학교 재학 이상	24	83.3	4.2	12.5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 ② 공공시설 이용 여부(이주여성지원센터)

- 공공시설 이용 여부(이주여성지원센터)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한 적 있음’ 응답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이 22.8%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이용한 적 있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53.3%), 30대(47.6%), 베트남(60.0%), 10년 이상(57.1%), 자영업(66.7%), 화이트칼라(57.1%), 블루칼라(52.4%), 전업주부(66.7%), 중학교 졸업 이하(50.0%),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33.3%), 30대(28.6%), 40대 이상(33.3%), 중국(44.4%), 태국(60.0%), 3-5년 미만(35.7%), 5-10년 미만(33.3%), 화이트칼라(42.9%), 전업주부(33.3%), 기타/무직(40.0%), 대학교 재학 이상(29.2%)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9] 공공시설 이용 여부(이주여성지원센터)

<표 IV-23> 공공시설 이용 여부(이주여성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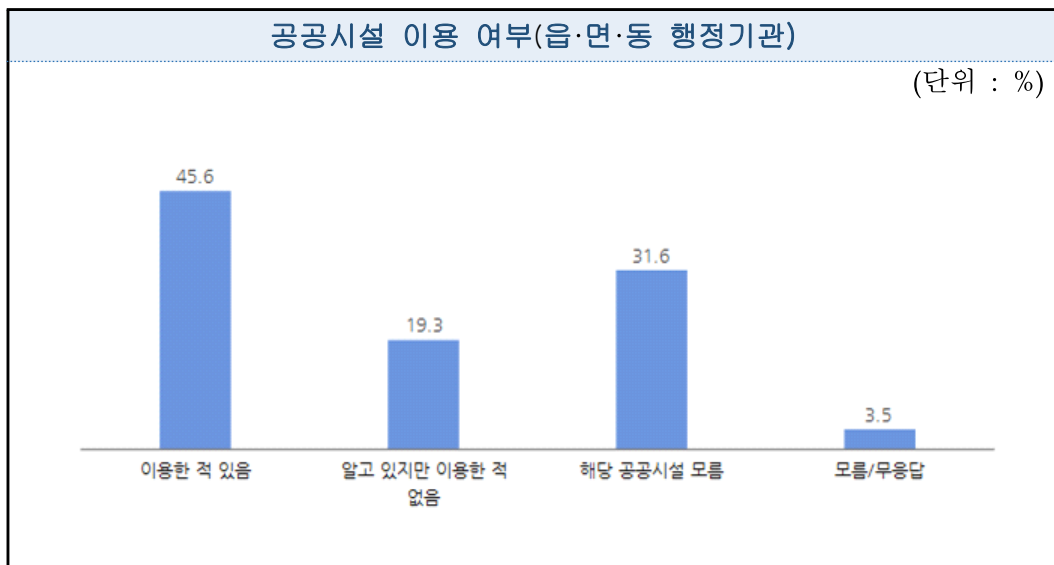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이용한 적 있음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해당공공시설 모름	모름/ 무응답
[전 체]		57	42.1	22.8	28.1	7.0
성별	남자	27	29.6	11.1	44.4	14.8
	여자	30	53.3	33.3	13.3	0.0
연령	20 대	26	42.3	15.4	38.5	3.8
	30 대	21	47.6	28.6	14.3	9.5
	40 대 이상	9	22.2	33.3	33.3	11.1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출신국가	네팔	6	33.3	16.7	50.0	0.0
	베트남	15	60.0	6.7	20.0	13.3
	인도네시아	5	40.0	20.0	40.0	0.0
	중국	9	22.2	44.4	33.3	0.0
	캄보디아	4	25.0	0.0	50.0	25.0
	태국	5	40.0	60.0	0.0	0.0
	필리핀	11	36.4	27.3	27.3	9.1
	기타/무응답	2	100.0	0.0	0.0	0.0
거주기간	3 년 미만	20	35.0	10.0	45.0	10.0
	3-5 년 미만	14	35.7	35.7	21.4	7.1
	5-10 년 미만	15	46.7	33.3	13.3	6.7
	10 년 이상	7	57.1	14.3	28.6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44.7	25.5	23.4	6.4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0.0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12.5	12.5	62.5	12.5
	서귀포시 읍·면지역	1	100.0	0.0	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6.7	26.7	40.0	26.7
	자영업	3	66.7	0.0	33.3	0.0
	화이트칼라	7	57.1	42.9	0.0	0.0
	블루칼라	21	52.4	9.5	38.1	0.0
	전업주부	3	66.7	33.3	0.0	0.0
	기타/무직	5	40.0	40.0	20.0	0.0
	무응답	3	66.7	33.3	0.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50.0	14.3	14.3	21.4
	고등학교 졸업	18	27.8	22.2	44.4	5.6
	대학교 재학 이상	24	45.8	29.2	25.0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 ③ 공공시설 이용 여부(읍·면·동 행정기관)

- 공공시설 이용 여부(읍·면·동 행정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한 적 있음’ 응답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이 19.3%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이용한 적 있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66.7%), 30대(66.7%), 40대 이상(55.6%), 베트남(66.7%), 중국(55.6%), 태국(60.0%), 3-5년 미만(57.1%), 5-10년 미만(53.3%), 10년 이상(71.4%), 제주시 동지역(53.2%), 자영업(100%), 화이트칼라(57.1%), 전업주부(100%), 기타/무직(60.0%),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인도네시아(40.0%), 캄보디아(25.0%), 태국(40.0%), 5-10년 미만(33.3%), 농·축·수산업(26.7%), 화이트칼라(28.6%), 중학교 졸업 이하(42.9%)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10] 공공시설 이용 여부(읍·면·동 행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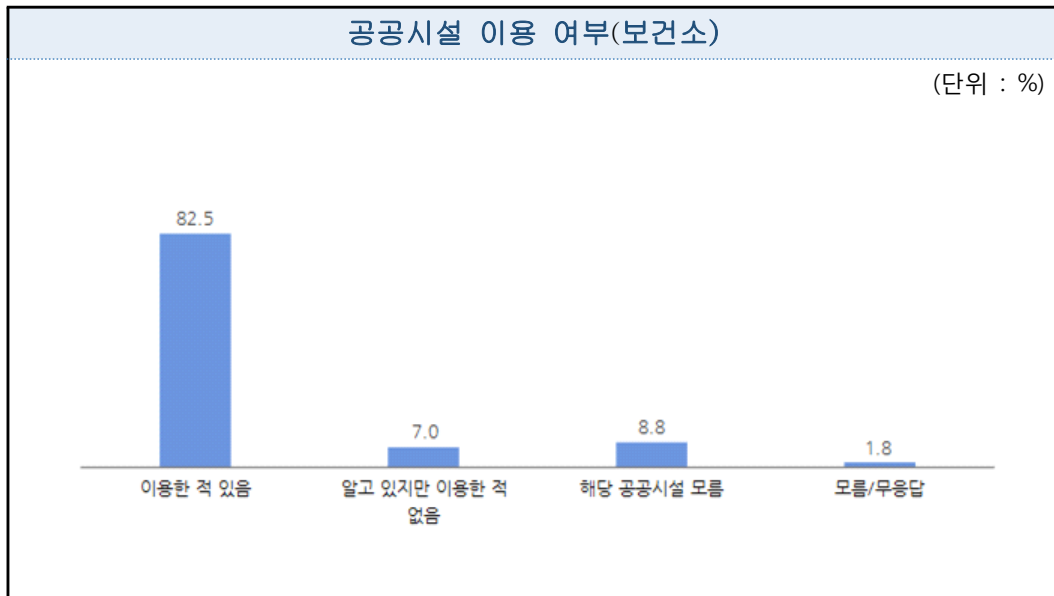
<표 IV-24> 공공시설 이용 여부(읍·면·동 행정기관)

(단위: 명, %)

		사례수	이용한 적 있음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해당공공시설 모름	모름/ 무응답
[전 체]		57	45.6	19.3	31.6	3.5
성별	남자	27	22.2	22.2	51.9	3.7
	여자	30	66.7	16.7	13.3	3.3
연령	20 대	26	26.9	19.2	50.0	3.8
	30 대	21	66.7	14.3	19.0	0.0
	40 대 이상	9	55.6	22.2	11.1	11.1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출신국가	네팔	6	33.3	0.0	66.7	0.0
	베트남	15	66.7	20.0	13.3	0.0
	인도네시아	5	0.0	40.0	40.0	20.0
	중국	9	55.6	22.2	22.2	0.0
	캄보디아	4	25.0	25.0	25.0	25.0
	태국	5	60.0	40.0	0.0	0.0
	필리핀	11	36.4	0.0	63.6	0.0
	기타/무응답	2	50.0	50.0	0.0	0.0
거주기간	3 년 미만	20	20.0	15.0	60.0	5.0
	3-5 년 미만	14	57.1	21.4	21.4	0.0
	5-10 년 미만	15	53.3	33.3	6.7	6.7
	10 년 이상	7	71.4	0.0	28.6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53.2	19.1	23.4	4.3
	서귀포시 동지역	1	0.0	0.0	10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12.5	12.5	75.0	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	0.0	100.0	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26.7	26.7	40.0	6.7
	자영업	3	100.0	0.0	0.0	0.0
	화이트칼라	7	57.1	28.6	14.3	0.0
	블루칼라	21	38.1	14.3	47.6	0.0
	전업주부	3	100.0	0.0	0.0	0.0
	기타/무직	5	60.0	20.0	20.0	0.0
	무응답	3	33.3	33.3	0.0	33.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42.9	42.9	7.1	7.1
	고등학교 졸업	18	44.4	11.1	38.9	5.6
	대학교 재학 이상	24	50.0	8.3	41.7	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 ④ 공공시설 이용 여부(보건소)

- 공공시설 이용 여부(보건소)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한 적 있음' 응답이 82.5%, '해당 공공시설 모름' 8.8%,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7.0% 순으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이용한 적 있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90.5%), 40대 이상(88.9%), 인도네시아(100%), 태국(100%), 3-5년 미만(92.9%), 5-10년 미만(93.3%), 자영업(100%), 전업주부(100%), 기타/무직(100%), 고등학교 졸업(88.9%)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11] 공공시설 이용 여부(보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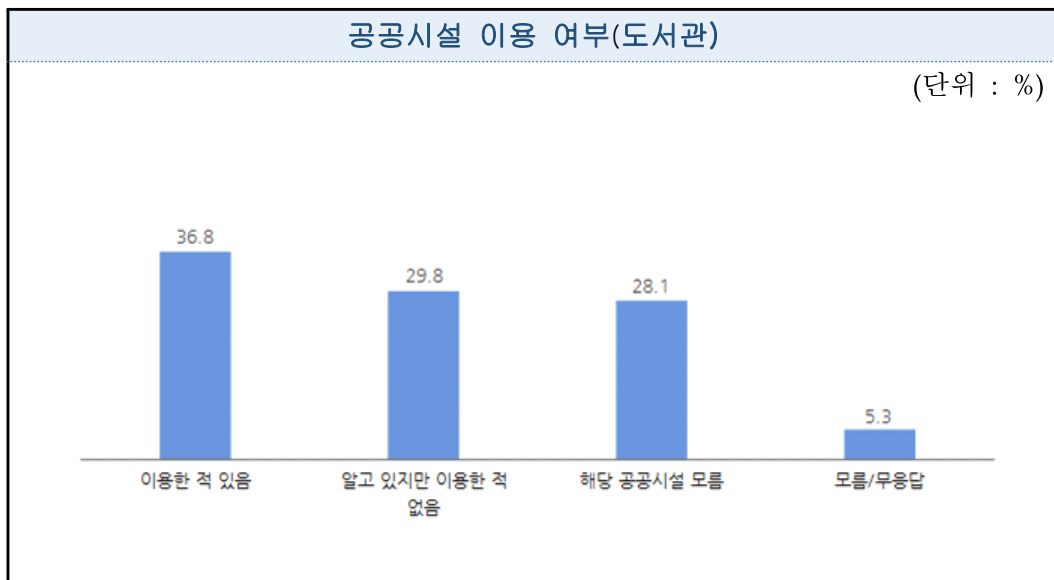
<표 IV-25> 공공시설 이용 여부(보건소)

(단위: 명, %)

		사례수	이용한 적 있음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해당 공공시설 모름	모름/ 무응답
[전 체]		57	82.5	7.0	8.8	1.8
성별	남자	27	77.8	11.1	11.1	0.0
	여자	30	86.7	3.3	6.7	3.3
연령	20 대	26	73.1	11.5	15.4	0.0
	30 대	21	90.5	4.8	4.8	0.0
	40 대 이상	9	88.9	0.0	0.0	11.1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출신국가	네팔	6	50.0	33.3	16.7	0.0
	베트남	15	86.7	13.3	0.0	0.0
	인도네시아	5	100.0	0.0	0.0	0.0
	중국	9	77.8	0.0	11.1	11.1
	캄보디아	4	75.0	0.0	25.0	0.0
	태국	5	100.0	0.0	0.0	0.0
	필리핀	11	81.8	0.0	18.2	0.0
	기타/무응답	2	100.0	0.0	0.0	0.0
거주기간	3 년 미만	20	65.0	20.0	15.0	0.0
	3-5 년 미만	14	92.9	0.0	7.1	0.0
	5-10 년 미만	15	93.3	0.0	6.7	0.0
	10 년 이상	7	85.7	0.0	0.0	14.3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83.0	8.5	6.4	2.1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0.0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75.0	0.0	25.0	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	100.0	0.0	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80.0	6.7	13.3	0.0
	자영업	3	100.0	0.0	0.0	0.0
	화이트칼라	7	85.7	0.0	14.3	0.0
	블루칼라	21	71.4	14.3	9.5	4.8
	전업주부	3	100.0	0.0	0.0	0.0
	기타/무직	5	100.0	0.0	0.0	0.0
	무응답	3	100.0	0.0	0.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85.7	7.1	7.1	0.0
	고등학교 졸업	18	88.9	5.6	0.0	5.6
	대학교 재학 이상	24	75.0	8.3	16.7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 ⑤ 공공시설 이용 여부(도서관)

- 공공시설 이용 여부(도서관)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한 적 있음’ 응답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이 29.8%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이용한 적 있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56.7%), 30대(52.4%), 40대 이상(44.4%), 중국(88.9%), 3-5년 미만(57.1%), 5-10년 미만(46.7%), 10년 이상(42.9%), 자영업(100%), 화이트칼라(100%), 전업주부(66.7%), 기타/무직(60.0%),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44.4%), 40대 이상(44.4%), 네팔(83.3%), 캄보디아(50.0%), 태국(40.0%), 필리핀(36.4%), 3년 미만(40.0%), 농·축·수산업(46.7%), 블루칼라(38.1%)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12] 공공시설 이용 여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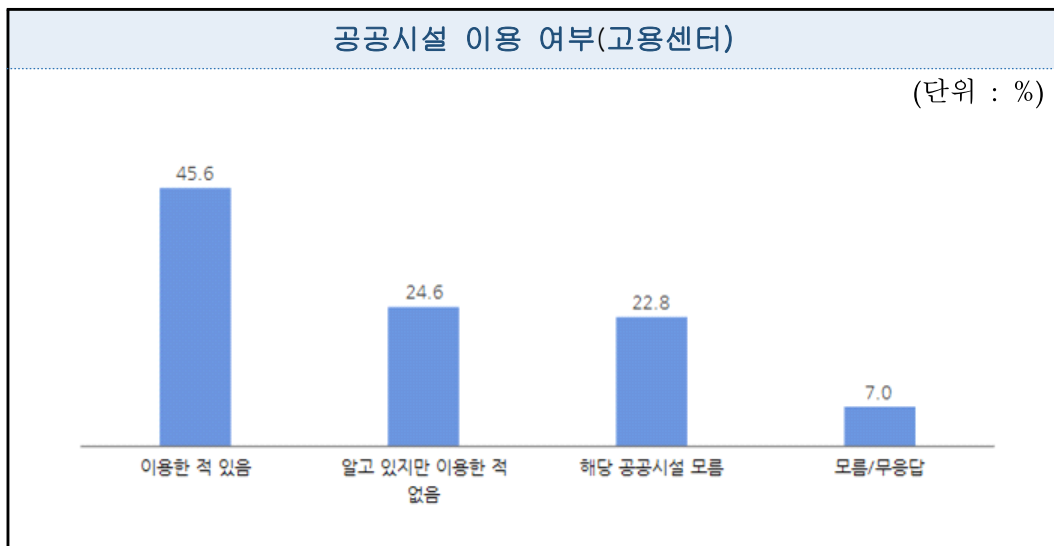
&lt;표 IV-26&gt; 공공시설 이용 여부(도서관)

(단위: 명, %)

		사례수	이용한 적 있음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해당 공공시설 모름	모름/ 무응답
[전 체]		57	36.8	29.8	28.1	5.3
성별	남자	27	14.8	44.4	33.3	7.4
	여자	30	56.7	16.7	23.3	3.3
연령	20 대	26	19.2	34.6	46.2	0.0
	30 대	21	52.4	19.0	14.3	14.3
	40 대 이상	9	44.4	44.4	11.1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출신국가	네팔	6	0.0	83.3	16.7	0.0
	베트남	15	20.0	20.0	40.0	20.0
	인도네시아	5	40.0	20.0	40.0	0.0
	중국	9	88.9	0.0	11.1	0.0
	캄보디아	4	25.0	50.0	25.0	0.0
	태국	5	40.0	40.0	20.0	0.0
	필리핀	11	27.3	36.4	36.4	0.0
	기타/무응답	2	100.0	0.0	0.0	0.0
거주기간	3 년 미만	20	10.0	40.0	45.0	5.0
	3-5 년 미만	14	57.1	14.3	21.4	7.1
	5-10 년 미만	15	46.7	33.3	20.0	0.0
	10 년 이상	7	42.9	28.6	14.3	14.3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40.4	29.8	23.4	6.4
	서귀포시 동지역	1	0.0	100.0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12.5	25.0	62.5	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	100.0	0.0	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6.7	46.7	33.3	13.3
	자영업	3	100.0	0.0	0.0	0.0
	화이트칼라	7	100.0	0.0	0.0	0.0
	블루칼라	21	19.0	38.1	38.1	4.8
	전업주부	3	66.7	0.0	33.3	0.0
	기타/무직	5	60.0	20.0	20.0	0.0
	무응답	3	33.3	33.3	33.3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35.7	28.6	14.3	21.4
	고등학교 졸업	18	33.3	27.8	38.9	0.0
	대학교 재학 이상	24	41.7	33.3	25.0	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 ⑥ 공공시설 이용 여부(고용센터)

- 공공시설 이용 여부(고용센터)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한 적 있음’ 응답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이 24.6%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이용한 적 있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대 이상(66.7%), 인도네시아(80.0%), 태국(80.0%), 5-10년 미만(53.3%), 10년 이상(71.4%), 농·축·수산업(53.3%), 자영업(66.7%), 화이트칼라(71.4%), 고등학교 졸업(55.6%),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34.6%), 네팔(83.3%), 필리핀(36.4%), 3년 미만(30.0%), 블루칼라(38.1%), 전업주부(33.3%), 기타/무직(40.0%), 대학교 재학 이상(37.5%)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13 ] 공공시설 이용 여부(고용센터)

<표 IV-27> 공공시설 이용 여부(고용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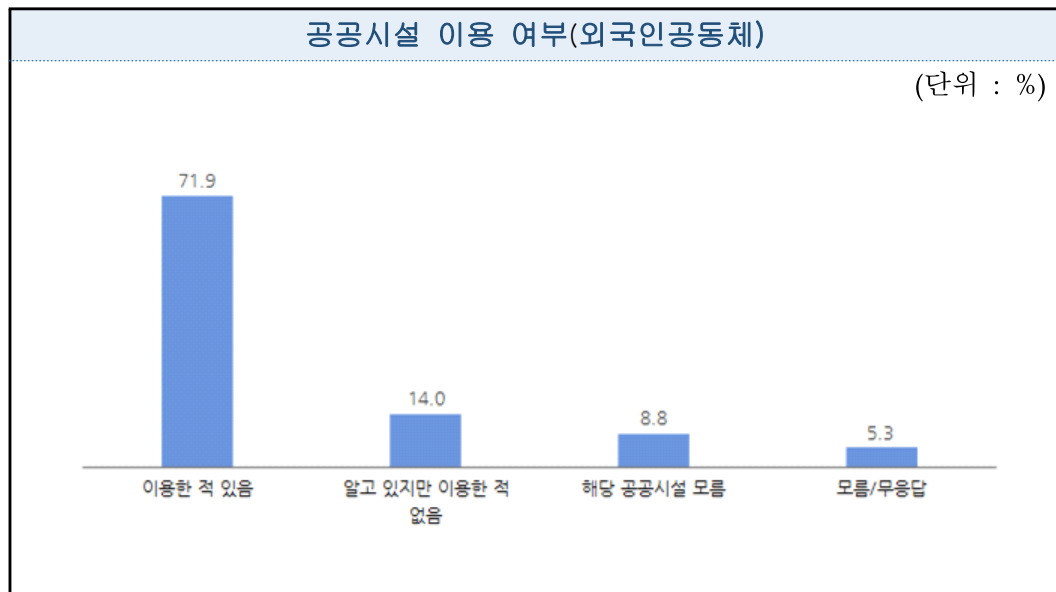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이용한 적 있음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해당공공시설 모름	모름/ 무응답
[전 체]		57	45.6	24.6	22.8	7.0
성별	남자	27	48.1	25.9	18.5	7.4
	여자	30	43.3	23.3	26.7	6.7
연령	20 대	26	34.6	34.6	30.8	0.0
	30 대	21	47.6	23.8	14.3	14.3
	40 대 이상	9	66.7	0.0	22.2	11.1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출신국가	네팔	6	0.0	83.3	16.7	0.0
	베트남	15	33.3	13.3	33.3	20.0
	인도네시아	5	80.0	0.0	20.0	0.0
	중국	9	44.4	22.2	22.2	11.1
	캄보디아	4	50.0	25.0	25.0	0.0
	태국	5	80.0	0.0	20.0	0.0
	필리핀	11	45.5	36.4	18.2	0.0
	기타/무응답	2	100.0	0.0	0.0	0.0
거주기간	3 년 미만	20	40.0	30.0	25.0	5.0
	3-5 년 미만	14	28.6	28.6	35.7	7.1
	5-10 년 미만	15	53.3	26.7	20.0	0.0
	10 년 이상	7	71.4	0.0	0.0	28.6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46.8	23.4	21.3	8.5
	서귀포시 동지역	1	0.0	100.0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37.5	25.0	37.5	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	100.0	0.0	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53.3	13.3	20.0	13.3
	자영업	3	66.7	0.0	33.3	0.0
	화이트칼라	7	71.4	14.3	14.3	0.0
	블루칼라	21	28.6	38.1	23.8	9.5
	전업주부	3	33.3	33.3	33.3	0.0
	기타/무직	5	40.0	40.0	20.0	0.0
	무응답	3	66.7	0.0	33.3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50.0	14.3	14.3	21.4
	고등학교 졸업	18	55.6	16.7	22.2	5.6
	대학교 재학 이상	24	37.5	37.5	25.0	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⑦ 공공시설 이용 여부(외국인공동체)

- 공공시설 이용 여부(외국인공동체)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한 적 있음' 응답이 71.9%,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14.0%, '해당 공공시설 모름' 8.8%의 순으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이용한 적 있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네팔(100%), 베트남(93.3%), 자영업(100%), 블루칼라(81.0%)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14] 공공시설 이용 여부(외국인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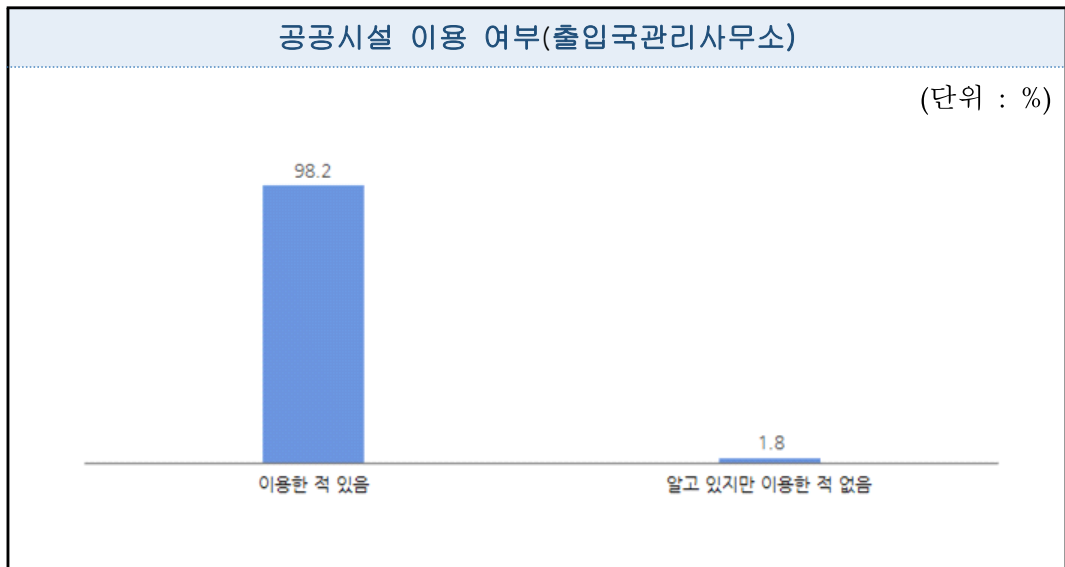
<표 IV-28> 공공시설 이용 여부(외국인공동체)

(단위: 명, %)

		사례수	이용한 적 있음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해당공공시설 모름	모름/ 무응답
[전 체]		57	71.9	14.0	8.8	5.3
성별	남자	27	74.1	11.1	11.1	3.7
	여자	30	70.0	16.7	6.7	6.7
연령	20 대	26	76.9	7.7	11.5	3.8
	30 대	21	71.4	14.3	9.5	4.8
	40 대 이상	9	55.6	33.3	0.0	11.1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출신국가	네팔	6	100.0	0.0	0.0	0.0
	베트남	15	93.3	0.0	0.0	6.7
	인도네시아	5	60.0	20.0	0.0	20.0
	중국	9	55.6	44.4	0.0	0.0
	캄보디아	4	75.0	0.0	0.0	25.0
	태국	5	20.0	40.0	40.0	0.0
	필리핀	11	63.6	9.1	27.3	0.0
	기타/무응답	2	100.0	0.0	0.0	0.0
거주기간	3 년 미만	20	75.0	5.0	15.0	5.0
	3-5 년 미만	14	71.4	14.3	14.3	0.0
	5-10 년 미만	15	66.7	26.7	0.0	6.7
	10 년 이상	7	71.4	14.3	0.0	14.3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72.3	14.9	6.4	6.4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0.0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62.5	12.5	25.0	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	100.0	0.0	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60.0	13.3	20.0	6.7
	자영업	3	100.0	0.0	0.0	0.0
	화이트칼라	7	71.4	28.6	0.0	0.0
	블루칼라	21	81.0	9.5	4.8	4.8
	전업주부	3	66.7	0.0	33.3	0.0
	기타/무직	5	60.0	40.0	0.0	0.0
	무응답	3	66.7	0.0	0.0	33.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71.4	14.3	0.0	14.3
	고등학교 졸업	18	72.2	16.7	5.6	5.6
	대학교 재학 이상	24	70.8	12.5	16.7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⑧ 공공시설 이용 여부(출입국관리사무소)

- 공공시설 이용 여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한 적 있음’ 응답이 98.2%로 대부분으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응답이 높은 계층이 확인되지 않음.



[그림 IV-15] 공공시설 이용 여부(출입국관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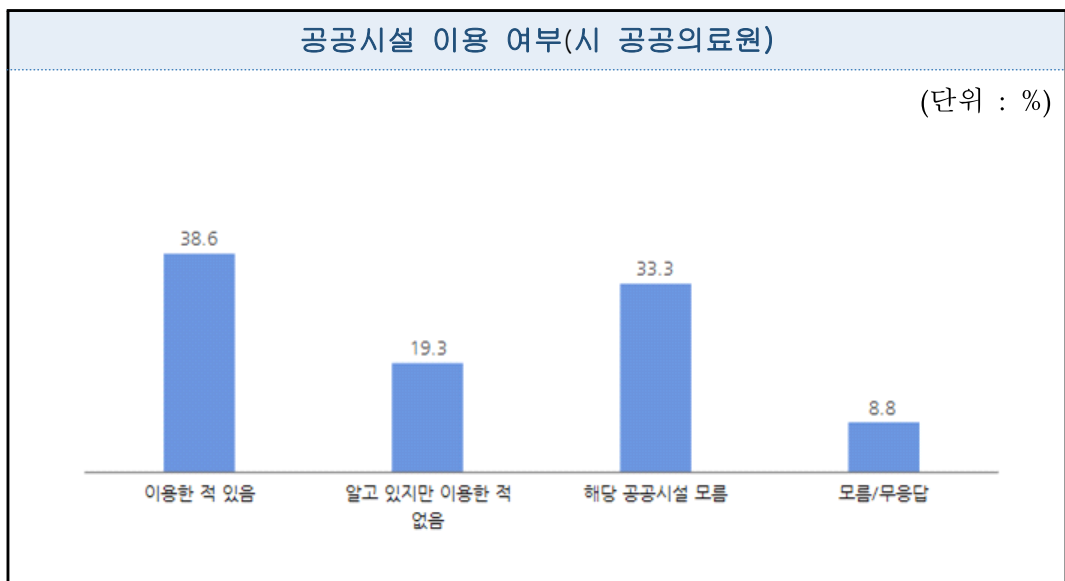
&lt;표 IV-29&gt; 공공시설 이용 여부(출입국관리사무소)

(단위: 명, %)

		사례수	이용한 적 있음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전 체]		57	98.2	1.8
성별	남자	27	100.0	0.0
	여자	30	96.7	3.3
연령	20 대	26	96.2	3.8
	30 대	21	100.0	0.0
	40 대 이상	9	100.0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출신 국가	네팔	6	100.0	0.0
	베트남	15	100.0	0.0
	인도네시아	5	100.0	0.0
	중국	9	88.9	11.1
	캄보디아	4	100.0	0.0
	태국	5	100.0	0.0
	필리핀	11	100.0	0.0
	기타/무응답	2	100.0	0.0
거주 기간	3 년 미만	20	95.0	5.0
	3-5 년 미만	14	100.0	0.0
	5-10 년 미만	15	100.0	0.0
	10 년 이상	7	100.0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97.9	2.1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100.0	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	10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100.0	0.0
	자영업	3	100.0	0.0
	화이트칼라	7	85.7	14.3
	블루칼라	21	100.0	0.0
	전업주부	3	100.0	0.0
	기타/무직	5	100.0	0.0
	무응답	3	100.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100.0	0.0
	고등학교 졸업	18	100.0	0.0
	대학교 재학 이상	24	95.8	4.2
	모름/무응답	1	100.0	0.0

### ⑨ 공공시설 이용 여부(시 공공의료원)

- 공공시설 이용 여부(시 공공의료원)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한 적 있음’ 응답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이 19.3%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이용한 적 있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50.0%), 30대(47.6%), 40대 이상(44.4%), 인도네시아(60.0%), 중국(66.7%), 필리핀(54.5%), 10년 이상(85.7%), 자영업(66.7%), 화이트칼라(71.4%), 고등학교 졸업(44.4%),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네팔(33.3%), 태국(60.0%), 5-10년 미만(40.0%), 농·축·수산업(26.7%), 화이트칼라(28.6%), 전업주부(33.3%)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16] 공공시설 이용 여부(시 공공의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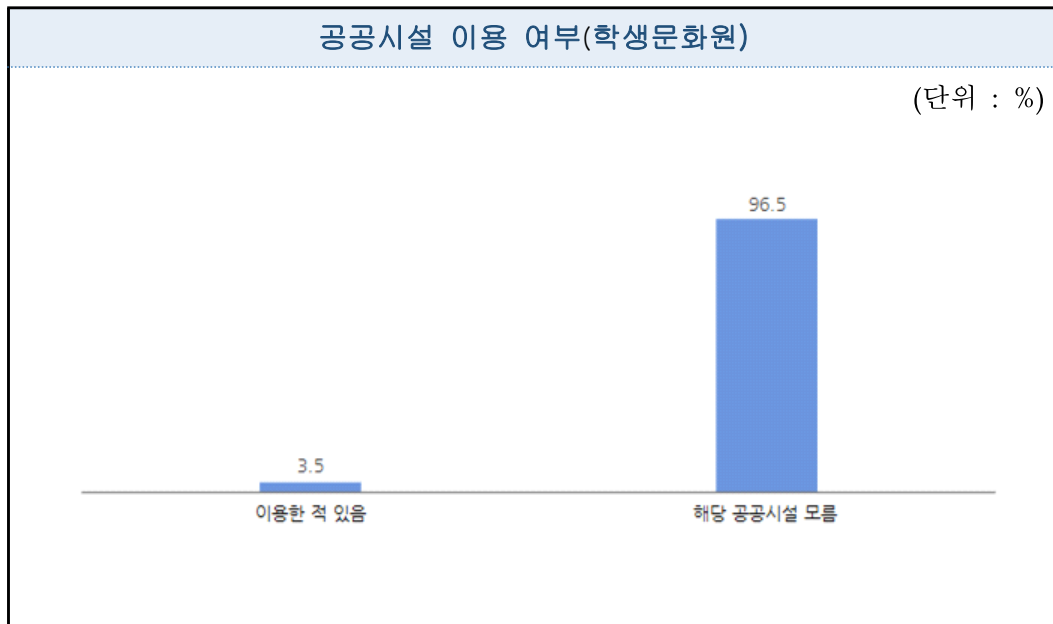
&lt;표 IV-30&gt; 공공시설 이용 여부(시 공공의료원)

(단위: 명, %)

		사례수	이용한 적 있음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해당공공시설 모름	모름/ 무응답
[전 체]		57	38.6	19.3	33.3	8.8
성별	남자	27	25.9	22.2	37.0	14.8
	여자	30	50.0	16.7	30.0	3.3
연령	20 대	26	26.9	23.1	46.2	3.8
	30 대	21	47.6	14.3	28.6	9.5
	40 대 이상	9	44.4	22.2	11.1	22.2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출신 국가	네팔	6	16.7	33.3	50.0	0.0
	베트남	15	26.7	20.0	40.0	13.3
	인도네시아	5	60.0	20.0	0.0	20.0
	중국	9	66.7	22.2	11.1	0.0
	캄보디아	4	25.0	0.0	50.0	25.0
	태국	5	0.0	60.0	40.0	0.0
	필리핀	11	54.5	0.0	45.5	0.0
	기타/무응답	2	50.0	0.0	0.0	50.0
거주 기간	3 년 미만	20	20.0	15.0	55.0	10.0
	3-5 년 미만	14	35.7	14.3	35.7	14.3
	5-10 년 미만	15	40.0	40.0	13.3	6.7
	10 년 이상	7	85.7	0.0	14.3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36.2	21.3	31.9	10.6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0.0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37.5	12.5	50.0	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	100.0	0.0	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26.7	26.7	26.7	20.0
	자영업	3	66.7	0.0	0.0	33.3
	화이트칼라	7	71.4	28.6	0.0	0.0
	블루칼라	21	38.1	14.3	47.6	0.0
	전업주부	3	33.3	33.3	33.3	0.0
	기타/무직	5	20.0	20.0	60.0	0.0
	무응답	3	33.3	0.0	33.3	33.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35.7	21.4	21.4	21.4
	고등학교 졸업	18	44.4	16.7	33.3	5.6
	대학교 재학 이상	24	37.5	20.8	37.5	4.2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⑩ 공공시설 이용 여부(학생문화원)

- 공공시설 이용 여부(학생문화원)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공공시설 모름' 응답이 96.5%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응답이 높은 계층이 확인되지 않음.



[그림 IV-17] 공공시설 이용 여부(학생문화원)

&lt;표 IV-31&gt; 공공시설 이용 여부(학생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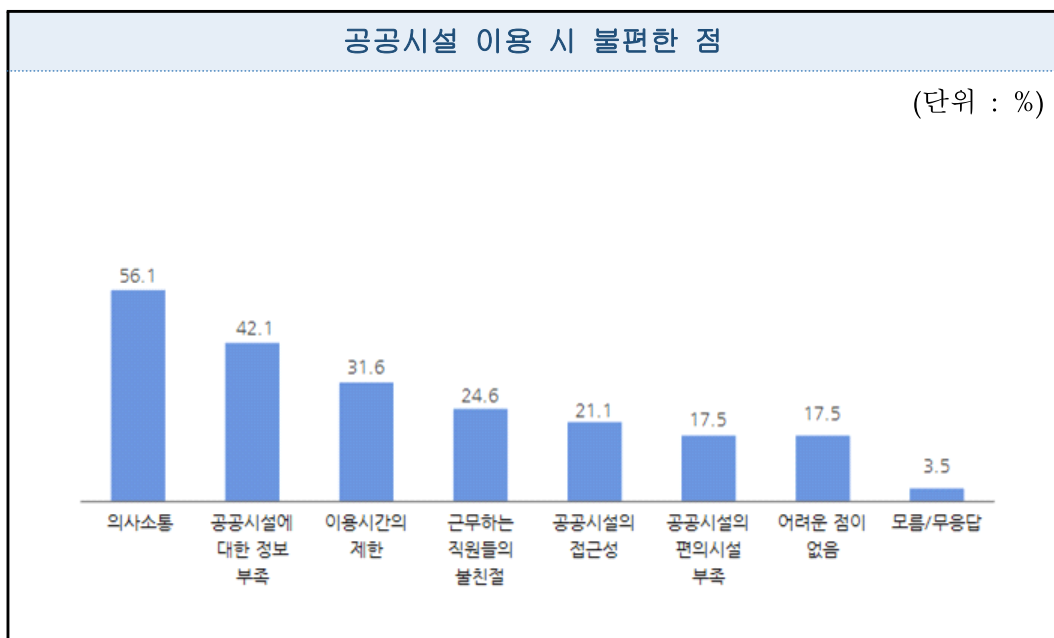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이용한 적 있음	해당 공공시설 모름
[전 체]		57	3.5	96.5
성별	남자	27	7.4	92.6
	여자	30	0.0	100.0
연령	20 대	26	7.7	92.3
	30 대	21	0.0	100.0
	40 대 이상	9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출신 국가	네팔	6	33.3	66.7
	베트남	15	0.0	100.0
	인도네시아	5	0.0	100.0
	중국	9	0.0	100.0
	캄보디아	4	0.0	100.0
	태국	5	0.0	100.0
	필리핀	11	0.0	100.0
	기타/무응답	2	0.0	100.0
거주 기간	3 년 미만	20	10.0	90.0
	3-5 년 미만	14	0.0	100.0
	5-10 년 미만	15	0.0	100.0
	10 년 이상	7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4.3	95.7
	서귀포시 동지역	1	0.0	100.0
	제주시 읍·면지역	8	0.0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	0.0	100.0
직업	농·축·수산업	15	0.0	100.0
	자영업	3	0.0	100.0
	화이트칼라	7	0.0	100.0
	블루칼라	21	9.5	90.5
	전업주부	3	0.0	100.0
	기타/무직	5	0.0	100.0
	무응답	3	0.0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0.0	100.0
	고등학교 졸업	18	0.0	100.0
	대학교 재학 이상	24	8.3	91.7
	모름/무응답	1	0.0	100.0



## (2) 공공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 공공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한 조사 결과, ‘의사소통’ 응답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응답이 42.1%, ‘이용시간의 제한’ 응답이 31.6%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의사소통’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61.9%), 베트남(86.7%), 필리핀(81.8%), 제주시 읍·면지역(62.5%), 자영업(66.7%), 블루칼라(66.7%), 전업주부(66.7%), 고등학교 졸업(66.7%),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60.0%), 40대 이상(55.6%), 베트남(53.3%), 중국(55.6%), 필리핀(81.8%), 3-5년 미만(50.0%), 10년 이상(57.1%), 제주시 읍·면지역(50.0%), 자영업(66.7%), 기타/무직(60.0%), 고등학교 졸업(61.1%)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18] 공공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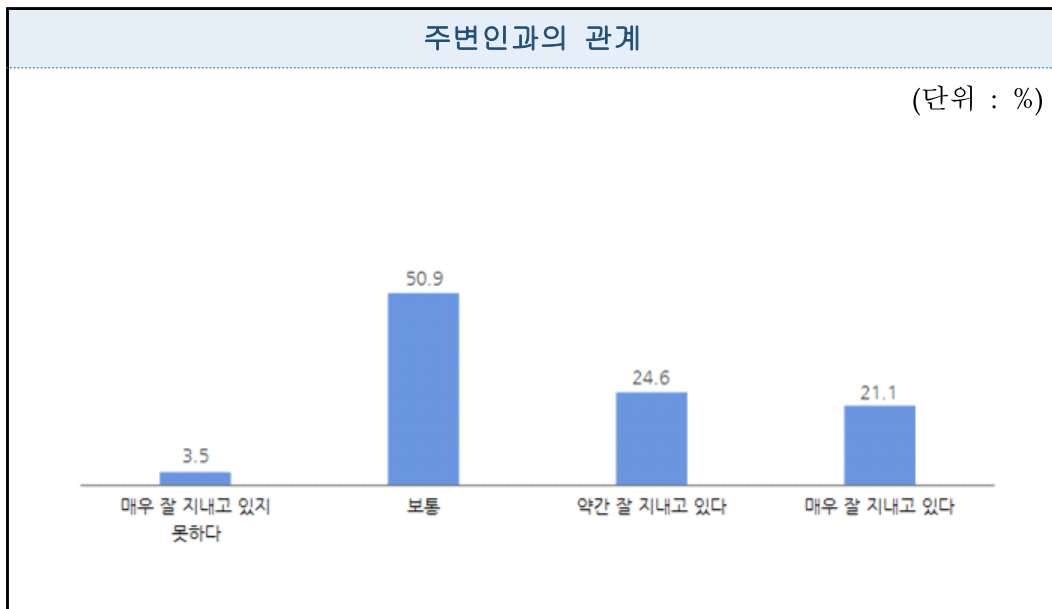
&lt;표 IV-32&gt; 공공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단위: 명, %)

		사례 수	의사 소통	공공 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이용 시간의 제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친절	공공 시설의 접근성	공공 시설의 편의 시설 부족	어려운 점이 없음	모름/무응답
[전 체]		57	56.1	42.1	31.6	24.6	21.1	17.5	17.5	3.5
성별	남자	27	55.6	22.2	25.9	14.8	14.8	11.1	18.5	0.0
	여자	30	56.7	60.0	36.7	33.3	26.7	23.3	16.7	6.7
연령	20 대	26	57.7	38.5	42.3	30.8	34.6	26.9	15.4	3.8
	30 대	21	61.9	42.9	19.0	14.3	14.3	14.3	19.0	4.8
	40 대 이상	9	33.3	55.6	33.3	33.3	0.0	0.0	22.2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0.0
출신국가	네팔	6	33.3	16.7	33.3	16.7	16.7	16.7	50.0	0.0
	베트남	15	86.7	53.3	40.0	46.7	53.3	33.3	13.3	0.0
	인도네시아	5	20.0	0.0	20.0	20.0	20.0	20.0	0.0	20.0
	중국	9	44.4	55.6	33.3	33.3	11.1	11.1	11.1	0.0
	캄보디아	4	25.0	0.0	0.0	0.0	0.0	25.0	50.0	0.0
	태국	5	20.0	20.0	0.0	40.0	0.0	0.0	20.0	20.0
	필리핀	11	81.8	81.8	54.5	0.0	9.1	9.1	0.0	0.0
	기타/무응답	2	50.0	0.0	0.0	0.0	0.0	0.0	50.0	0.0
거주기간	3년 미만	20	60.0	35.0	30.0	20.0	20.0	30.0	15.0	5.0
	3-5년 미만	14	57.1	50.0	35.7	28.6	21.4	14.3	14.3	7.1
	5-10년 미만	15	53.3	40.0	26.7	33.3	33.3	13.3	20.0	0.0
	10년 이상	7	57.1	57.1	42.9	14.3	0.0	0.0	14.3	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55.3	42.6	29.8	25.5	19.1	19.1	21.3	4.3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0.0	0.0	0.0	0.0	0.0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62.5	50.0	37.5	25.0	25.0	12.5	0.0	0.0
	읍·면지역	1	0.0	0.0	100.0	0.0	100.0	0.0	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53.3	33.3	26.7	13.3	6.7	13.3	13.3	0.0
	자영업	3	66.7	66.7	0.0	0.0	33.3	33.3	33.3	0.0
	화이트칼라	7	14.3	42.9	14.3	28.6	14.3	14.3	28.6	0.0
	블루칼라	21	66.7	42.9	42.9	28.6	33.3	19.0	14.3	4.8
	전업주부	3	66.7	33.3	0.0	33.3	0.0	0.0	33.3	0.0
	기타/무직	5	60.0	60.0	60.0	40.0	20.0	20.0	20.0	0.0
	무응답	3	66.7	33.3	33.3	33.3	33.3	33.3	0.0	33.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57.1	14.3	14.3	21.4	21.4	21.4	21.4	0.0
	고등학교 졸업	18	66.7	61.1	44.4	33.3	27.8	16.7	5.6	5.6
	대학교 재학 이상	24	45.8	41.7	29.2	16.7	12.5	12.5	25.0	4.2
	모름/무응답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 (3) 주변인과의 관계

- 주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 '보통' 응답이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약간 잘 지내고 있다' 응답이 24.6%, '매우 잘 지내고 있다' 응답이 21.1%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보통'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59.3%), 20대(57.7%), 인도네시아(60.0%), 캄보디아(100%), 필리핀(81.8%), 3년 미만(65.0%), 제주시 읍·면지역(62.5%), 자영업(66.7%), 기타/무직(60.0%), 중학교 졸업 이하(57.1%), '약간 잘 지내고 있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네팔(66.7%), 중국(33.3%), 3-5년 미만(42.9%), 10년 이상(42.9%), 블루칼라(33.3%),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19] 주변인과의 관계

<표 IV-33> 주변인과의 관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잘 지내고 있 지 못하다	보통	약간 잘 지내고 있 다	매우 잘 지내고 있 다	종합평가		
							잘 지내지 못하다	보통	잘 지내고 있다
[전 체]		57	3.5	50.9	24.6	21.1	3.5	50.9	45.6
성별		27	0.0	59.3	25.9	14.8	0.0	59.3	40.7
	여자	30	6.7	43.3	23.3	26.7	6.7	43.3	50.0
연령	20 대	26	0.0	57.7	26.9	15.4	0.0	57.7	42.3
	30 대	21	4.8	42.9	23.8	28.6	4.8	42.9	52.4
	40 대 이상	9	11.1	44.4	22.2	22.2	11.1	44.4	44.4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0.0
출신국가	네팔	6	0.0	33.3	66.7	0.0	0.0	33.3	66.7
	베트남	15	6.7	46.7	26.7	20.0	6.7	46.7	46.7
	인도네시아	5	0.0	60.0	20.0	20.0	0.0	60.0	40.0
	중국	9	11.1	11.1	33.3	44.4	11.1	11.1	77.8
	캄보디아	4	0.0	100.0	0.0	0.0	0.0	100.0	0.0
	태국	5	0.0	20.0	0.0	80.0	0.0	20.0	80.0
	필리핀	11	0.0	81.8	18.2	0.0	0.0	81.8	18.2
	기타/무응답	2	0.0	100.0	0.0	0.0	0.0	100.0	0.0
거주기간	3년 미만	20	0.0	65.0	25.0	10.0	0.0	65.0	35.0
	3-5년 미만	14	7.1	28.6	42.9	21.4	7.1	28.6	64.3
	5-10년 미만	15	6.7	53.3	0.0	40.0	6.7	53.3	40.0
	10년 이상	7	0.0	42.9	42.9	14.3	0.0	42.9	57.1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4.3	48.9	25.5	21.3	4.3	48.9	46.8
	서귀포시 동지역	1	0.0	100.0	0.0	0.0	0.0	10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0.0	62.5	25.0	12.5	0.0	62.5	37.5
	서귀포시 읍면지역	1	0.0	0.0	0.0	100.0	0.0	0.0	100.0
직업	농·축·수산업	15	0.0	53.3	20.0	26.7	0.0	53.3	46.7
	자영업	3	33.3	66.7	0.0	0.0	33.3	66.7	0.0
	화이트칼라	7	0.0	28.6	28.6	42.9	0.0	28.6	71.4
	블루칼라	21	0.0	52.4	33.3	14.3	0.0	52.4	47.6
	전업주부	3	33.3	33.3	0.0	33.3	33.3	33.3	33.3
	기타/무직	5	0.0	60.0	20.0	20.0	0.0	60.0	40.0
	무응답	3	0.0	66.7	33.3	0.0	0.0	66.7	33.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7.1	57.1	21.4	14.3	7.1	57.1	35.7
	고등학교 졸업	18	5.6	44.4	27.8	22.2	5.6	44.4	50.0
	대학교 재학 이상	24	0.0	50.0	25.0	25.0	0.0	50.0	5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0.0

#### (4) 한국 생활 시 애로사항

- 한국 생활 시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언어 소통의 어려움’ 응답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응답이 42.1%, ‘낮은 임금’ 응답이 29.8%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언어 소통의 어려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74.1%), 30대(71.4%), 베트남(73.3%), 인도네시아(80.0%), 캄보디아(75.0%), 필리핀(100%), 3년 미만(70.0%), 5-10년 미만(80.0%), 제주시 읍·면지역(100%), 농·축·수산업(100%), 중학교 졸업 이하(71.4%), 고등학교 졸업(72.2%),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대 이상(66.7%), 베트남(53.3%), 필리핀(72.7%), 3-5년 미만(50.0%), 10년 이상(57.1%), 농·축·수산업(53.3%), 자영업(100%), 기타/무직(60.0%)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20] 한국 생활 시 애로사항

<표 IV-34> 한국 생활 시 애로사항

(단위: 명, %)

		사례수	언어 소통의 어려움	외국인 에 대한 편견과 차별	낮은 임금	직장상 사 혹은 동료와 갈등	집안일 과 병 행하기 어려움	자녀 양육	긴 노동 시간	힘에 부치는 고된 일	모름/ 무응답
[전 체]		57	64.9	42.1	29.8	15.8	10.5	8.8	5.3	3.5	3.5
성별		27	74.1	40.7	37.0	14.8	7.4	0.0	7.4	3.7	0.0
	여자	30	56.7	43.3	23.3	16.7	13.3	16.7	3.3	3.3	6.7
연령	20 대	26	61.5	30.8	46.2	15.4	11.5	7.7	11.5	3.8	0.0
	30 대	21	71.4	42.9	14.3	9.5	14.3	14.3	0.0	4.8	9.5
	40 대 이상	9	66.7	66.7	22.2	33.3	0.0	0.0	0.0	0.0	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출신국가	네팔	6	33.3	16.7	66.7	16.7	16.7	16.7	33.3	0.0	0.0
	베트남	15	73.3	53.3	20.0	0.0	20.0	20.0	0.0	0.0	0.0
	인도네시아	5	80.0	0.0	80.0	0.0	20.0	0.0	0.0	0.0	0.0
	중국	9	33.3	44.4	44.4	33.3	0.0	11.1	11.1	0.0	0.0
	캄보디아	4	75.0	0.0	50.0	25.0	25.0	0.0	0.0	0.0	0.0
	태국	5	60.0	20.0	0.0	40.0	0.0	0.0	0.0	0.0	40.0
	필리핀	11	100.0	72.7	0.0	9.1	0.0	0.0	0.0	18.2	0.0
	기타/무응답	2	0.0	100.0	0.0	50.0	0.0	0.0	0.0	0.0	0.0
거주기간	3년 미만	20	70.0	35.0	40.0	10.0	10.0	0.0	10.0	5.0	0.0
	3-5년 미만	14	42.9	50.0	35.7	28.6	0.0	0.0	7.1	0.0	14.3
	5-10년 미만	15	80.0	40.0	20.0	13.3	13.3	20.0	0.0	6.7	0.0
	10년 이상	7	57.1	57.1	14.3	0.0	28.6	28.6	0.0	0.0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100.0	0.0	0.0	0.0	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57.4	42.6	29.8	17.0	12.8	10.6	6.4	0.0	4.3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100.0	37.5	25.0	12.5	0.0	0.0	0.0	25.0	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100.0	53.3	20.0	13.3	6.7	0.0	0.0	6.7	0.0
	자영업	3	33.3	100.0	0.0	66.7	0.0	0.0	0.0	0.0	0.0
	화이트칼라	7	42.9	42.9	42.9	42.9	0.0	0.0	14.3	0.0	0.0
	블루칼라	21	57.1	23.8	42.9	4.8	14.3	14.3	9.5	4.8	4.8
	전업주부	3	66.7	33.3	0.0	33.3	0.0	0.0	0.0	0.0	33.3
	기타/무직	5	40.0	60.0	20.0	0.0	40.0	40.0	0.0	0.0	0.0
	무응답	3	66.7	33.3	33.3	0.0	0.0	0.0	0.0	0.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71.4	42.9	28.6	7.1	21.4	7.1	0.0	0.0	0.0
	고등학교 졸업	18	72.2	44.4	33.3	11.1	11.1	11.1	0.0	5.6	0.0
	대학교 재학 이상	24	54.2	37.5	29.2	25.0	4.2	8.3	12.5	4.2	8.3
	모름/무응답	1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 (5) 최근 1년 업무 중 경험

- 최근 1년 업무 중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근무 중 상해’ 응답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자 혹은 직장 동료로부터 언어적 폭력’ 응답이 19.3%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근무 중 상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대 이상(33.3%), 베트남(33.3%), 인도네시아(40.0%), 3년 미만(35.0%), 10년 이상(57.1%), 자영업(33.3%), 블루칼라(33.3%), 중학교 졸업 이하(35.7%), ‘언어적 폭력’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베트남(26.7%), 인도네시아(40.0%), 중국(44.4%), 제주시 읍·면지역(25.0%), 화이트칼라(28.6%)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21] 최근 1년 업무 중 경험

IV.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정책의 현황 및 지원조직 사례 분석

<표 IV-35> 최근 1년 업무 중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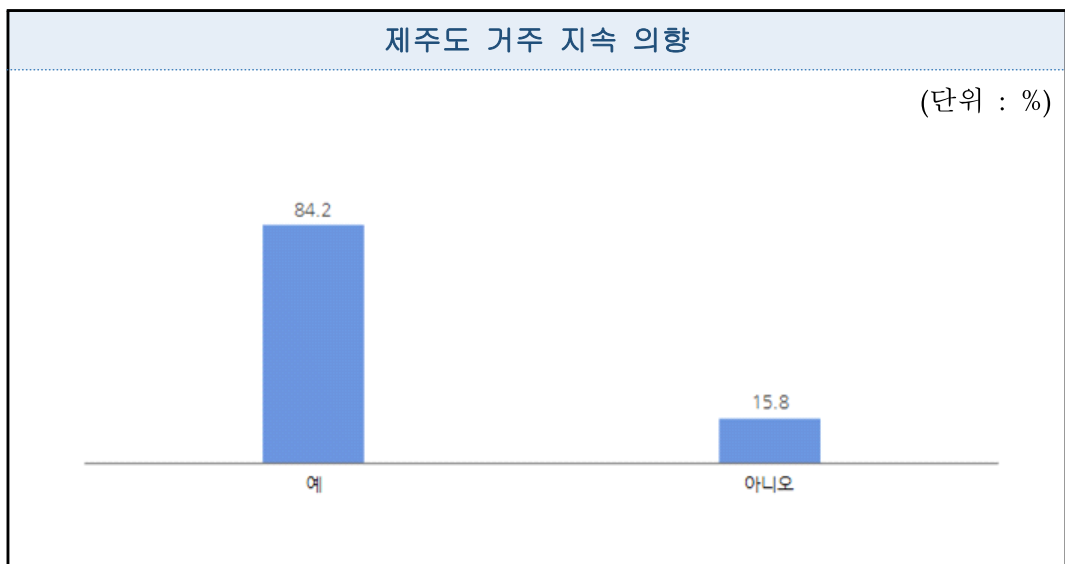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근무 중 상해	언어 적 폭력	고용 주의 협박	고용 주의 권압	임금 체불	퇴근 후 감금	불법 적인 폭력 및 체포	기숙 사가 불편하다	신체 적 폭행	기숙 사가 덥다	자기 잘못 한 것 을 정 안 함	모름 /무 응답	없음
[전 체]		57	24.6	19.3	15.8	12.3	10.5	5.3	5.3	5.3	1.8	1.8	1.8	42.1	1.8
성별	남자	27	25.9	18.5	22.2	18.5	11.1	3.7	0.0	11.1	0.0	3.7	0.0	37.0	0.0
	여자	30	23.3	20.0	10.0	6.7	10.0	6.7	10.0	0.0	3.3	0.0	3.3	46.7	3.3
연령	20 대	26	23.1	23.1	11.5	11.5	15.4	11.5	3.8	11.5	3.8	3.8	0.0	38.5	0.0
	30 대	21	19.0	19.0	14.3	14.3	4.8	0.0	9.5	0.0	0.0	0.0	4.8	42.9	4.8
	40 대 이상	9	33.3	11.1	22.2	0.0	11.1	0.0	0.0	0.0	0.0	0.0	0.0	55.6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해당국가	네팔	6	0.0	16.7	0.0	0.0	33.3	0.0	0.0	50.0	0.0	0.0	0.0	16.7	0.0
	베트남	15	33.3	26.7	13.3	13.3	6.7	20.0	13.3	0.0	6.7	6.7	0.0	26.7	0.0
	인도네시아	5	40.0	40.0	0.0	40.0	0.0	0.0	0.0	0.0	0.0	0.0	0.0	40.0	0.0
	중국	9	22.2	44.4	22.2	0.0	11.1	0.0	11.1	0.0	0.0	0.0	11.1	33.3	0.0
	캄보디아	4	25.0	0.0	25.0	5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태국	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필리핀	11	27.3	0.0	18.2	0.0	18.2	0.0	0.0	0.0	0.0	0.0	0.0	63.6	9.1
	기타/무응답	2	50.0	0.0	10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거주기간	3년 미만	20	35.0	20.0	15.0	25.0	10.0	10.0	0.0	10.0	0.0	0.0	0.0	30.0	0.0
	3-5년 미만	14	14.3	21.4	21.4	7.1	14.3	7.1	14.3	7.1	7.1	0.0	7.1	42.9	0.0
	5-10년 미만	15	6.7	20.0	6.7	0.0	0.0	0.0	6.7	0.0	0.0	6.7	0.0	60.0	6.7
	10년 이상	7	57.1	14.3	28.6	0.0	28.6	0.0	0.0	0.0	0.0	0.0	0.0	42.9	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25.5	19.1	17.0	12.8	10.6	6.4	6.4	6.4	2.1	2.1	2.1	38.3	0.0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12.5	25.0	0.0	12.5	0.0	0.0	0.0	0.0	0.0	0.0	0.0	62.5	12.5
	서귀포시 읍·면지역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20.0	13.3	6.7	20.0	0.0	6.7	0.0	0.0	0.0	0.0	0.0	60.0	0.0
	자영업	3	33.3	0.0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3
	화이트칼라	7	14.3	28.6	14.3	14.3	0.0	0.0	14.3	0.0	0.0	0.0	14.3	28.6	0.0
	블루칼라	21	33.3	23.8	19.0	9.5	23.8	9.5	4.8	14.3	4.8	4.8	0.0	28.6	0.0
	전업주부	3	0.0	0.0	0.0	0.0	0.0	0.0	33.3	0.0	0.0	0.0	0.0	66.7	0.0
	기타/무직	5	20.0	20.0	20.0	0.0	20.0	0.0	0.0	0.0	0.0	0.0	0.0	80.0	0.0
	무응답	3	33.3	33.3	33.3	33.3	0.0	0.0	0.0	0.0	0.0	0.0	0.0	33.3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35.7	7.1	14.3	14.3	0.0	7.1	7.1	0.0	0.0	0.0	0.0	35.7	7.1
	고등학교 졸업	18	27.8	22.2	11.1	22.2	5.6	5.6	0.0	0.0	0.0	5.6	0.0	50.0	0.0
	대학교 재학 이상	24	12.5	20.8	16.7	0.0	16.7	0.0	4.2	12.5	0.0	0.0	4.2	41.7	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100.0	0.0	0.0	0.0	0.0



## (6) 제주도 거주 지속 의향

- 제주도 거주 지속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예' 응답이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니오' 응답이 15.8%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93.3%), 30대(90.5%), 네팔(100%), 중국(100%), 태국(100%), 필리핀(100%), 3-5년 미만(100%), 자영업(100%), 화이트칼라(100%), 전업주부(100%), 기타/무직(100%), 대학교 재학 이상(100%), '아니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25.9%), 20대(23.1%), 인도네시아(80.0%), 캄보디아(50.0%), 3년 미만(30.0%), 농·축·수산업(26.7%), 중학교 졸업 이하(35.7%), 고등학교 졸업(22.2%)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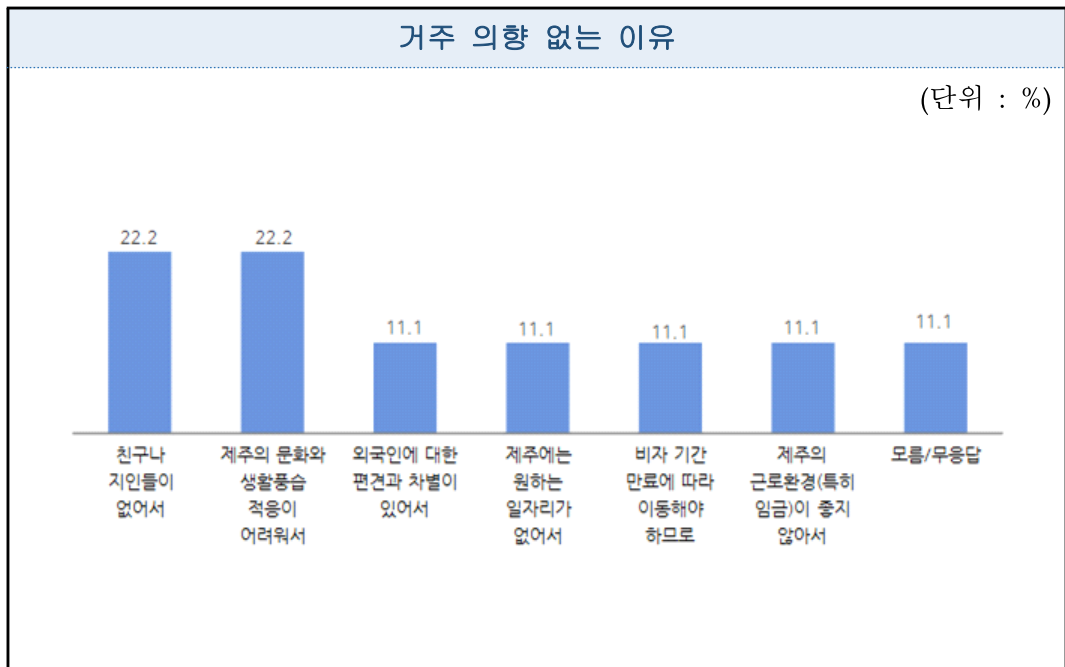
[그림 IV-22] 제주도 거주 지속 의향

&lt;표 IV-36&gt; 제주도 거주 지속 의향

(단위: 명, %)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57	84.2	15.8
성별	남자	27	74.1	25.9
	여자	30	93.3	6.7
연령	20 대	26	76.9	23.1
	30 대	21	90.5	9.5
	40 대 이상	9	88.9	11.1
	모름/무응답	1	100.0	0.0
출신 국가	네팔	6	100.0	0.0
	베트남	15	80.0	20.0
	인도네시아	5	20.0	80.0
	중국	9	100.0	0.0
	캄보디아	4	50.0	50.0
	태국	5	100.0	0.0
	필리핀	11	100.0	0.0
	기타/무응답	2	100.0	0.0
거주 기간	3년 미만	20	70.0	30.0
	3-5년 미만	14	100.0	0.0
	5-10년 미만	15	86.7	13.3
	10년 이상	7	85.7	14.3
	모름/무응답	1	100.0	0.0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83.0	17.0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87.5	12.5
	서귀포시 읍·면지역	1	10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73.3	26.7
	자영업	3	100.0	0.0
	화이트칼라	7	100.0	0.0
	블루칼라	21	81.0	19.0
	전업주부	3	100.0	0.0
	기타/무직	5	100.0	0.0
	무응답	3	66.7	33.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64.3	35.7
	고등학교 졸업	18	77.8	22.2
	대학교 재학 이상	24	100.0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 거주 의향 없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친구나 지인들이 없어서’ 및 ‘제주의 문화와 생활풍습 적응이 어려워서’ 응답이 22.2%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친구나 지인들이 없어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28.6%), 20대(33.3%), 3년 미만(33.3%), ‘제주의 문화와 생활풍습 적응이 어려워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28.6%), 20대(33.3%), 인도네시아(50.0%), 블루칼라(50.0%)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22] 거주 의향 없는 이유

<표 IV-37> 거주 의향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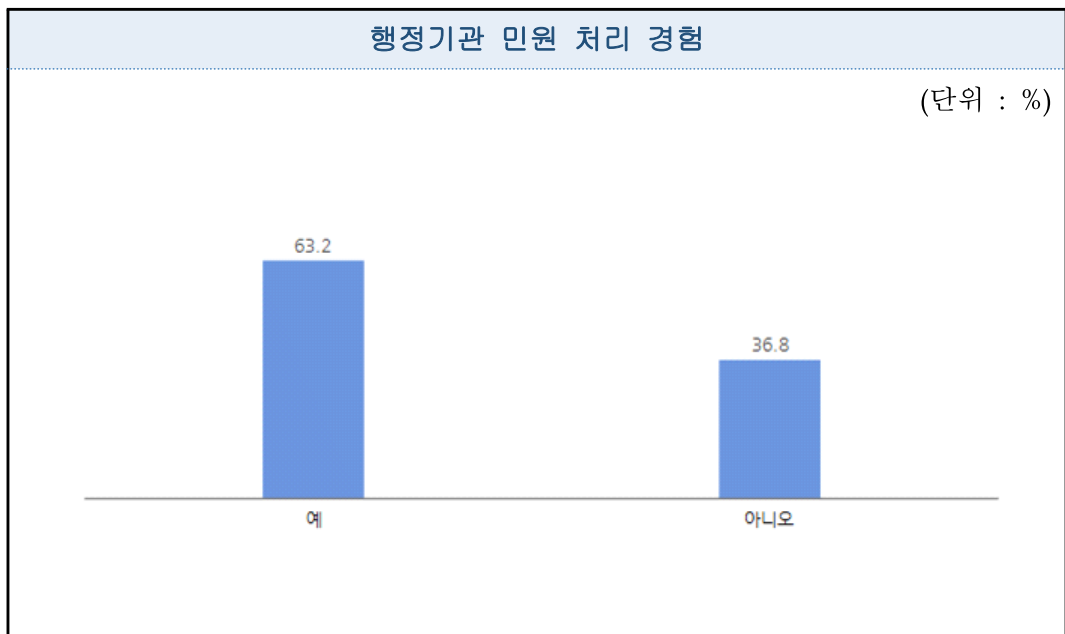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친구나 지인들이 없어서	제주의 문화와 생활풍습 적응이 어려워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 과 차별이 있어서	제주에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비자 기간 만료에 따 라 이동해 야 하므로	제주의 근로환경 (특히 임 금)이 좋 지 않아서	모름/ 무응답
[전 체]		9	22.2	22.2	11.1	11.1	11.1	11.1	11.1
성별	남자	7	28.6	28.6	0.0	14.3	0.0	14.3	14.3
	여자	2	0.0	0.0	50.0	0.0	50.0	0.0	0.0
연령	20 대	6	33.3	33.3	0.0	0.0	16.7	16.7	0.0
	30 대	2	0.0	0.0	50.0	50.0	0.0	0.0	0.0
	40 대 이상	1	0.0	0.0	0.0	0.0	0.0	0.0	100.0
출신국가	베트남	3	0.0	0.0	33.3	33.3	0.0	33.3	0.0
	인도네시아	4	25.0	50.0	0.0	0.0	25.0	0.0	0.0
	캄보디아	2	50.0	0.0	0.0	0.0	0.0	0.0	50.0
거주기간	3 년 미만	6	33.3	16.7	0.0	16.7	16.7	16.7	0.0
	5-10 년 미만	2	0.0	50.0	0.0	0.0	0.0	0.0	50.0
	10 년 이상	1	0.0	0.0	100.0	0.0	0.0	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8	25.0	12.5	12.5	12.5	12.5	12.5	12.5
	제주시 읍·면지역	1	0.0	100.0	0.0	0.0	0.0	0.0	0.0
직업	농·축·수산업	4	25.0	0.0	0.0	25.0	0.0	25.0	25.0
	블루칼라	4	25.0	50.0	25.0	0.0	0.0	0.0	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	20.0	20.0	20.0	0.0	0.0	20.0	20.0
	고등학교 졸업	4	25.0	25.0	0.0	25.0	25.0	0.0	0.0

#### 4) 행정지원서비스

##### (1) 행정기관 민원 처리 경험

- 행정기관 민원 처리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예' 응답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니오' 응답이 36.8%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70.4%), 캄보디아(100%), 필리핀(90.9%), 10년 이상(71.4%), 농·축·수산업(73.3%), 중학교 졸업 이하(85.7%), '아니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43.3%), 40대 이상(44.4%), 네팔(50.0%), 중국(66.7%), 태국(80.0%), 3-5년 미만(50.0%), 화이트칼라(42.9%), 블루칼라(47.6%), 고등학교 졸업(44.4%)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23] 행정기관 민원 처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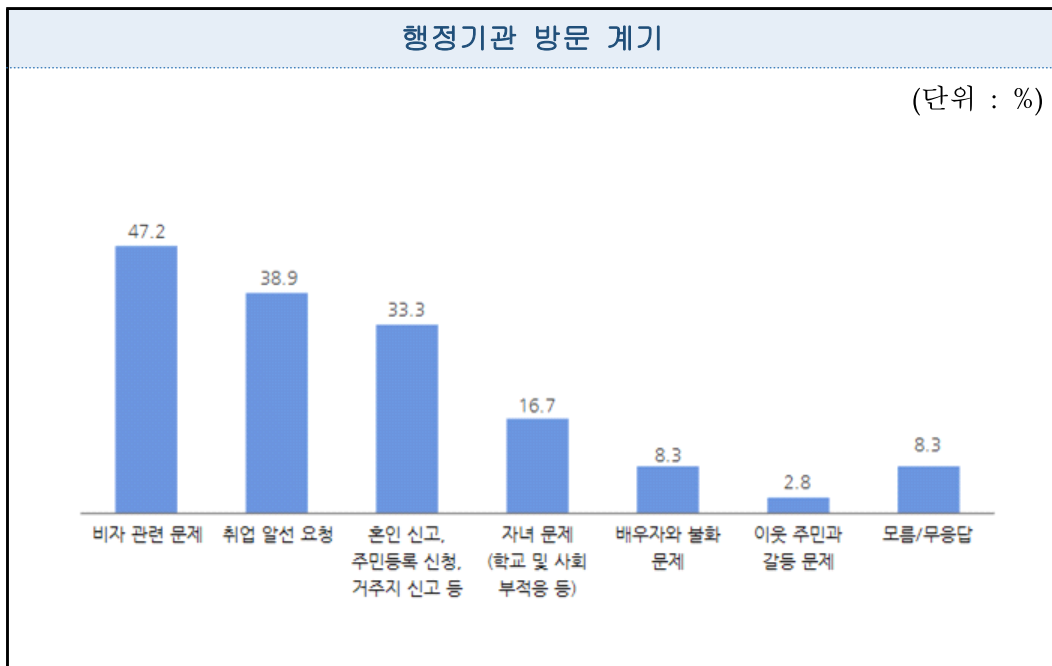
<표 IV-37> 행정기관 민원 처리 경험

(단위: 명, %)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57	63.2	36.8
성별	남자	27	70.4	29.6
	여자	30	56.7	43.3
연령	20 대	26	65.4	34.6
	30 대	21	61.9	38.1
	40 대 이상	9	55.6	44.4
	모름/무응답	1	100.0	0.0
출신 국가	네팔	6	50.0	50.0
	베트남	15	66.7	33.3
	인도네시아	5	60.0	40.0
	중국	9	33.3	66.7
	캄보디아	4	100.0	0.0
	태국	5	20.0	80.0
	필리핀	11	90.9	9.1
	기타/무응답	2	100.0	0.0
거주 기간	3 년 미만	20	65.0	35.0
	3-5 년 미만	14	50.0	50.0
	5-10 년 미만	15	66.7	33.3
	10 년 이상	7	71.4	28.6
	모름/무응답	1	100.0	0.0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61.7	38.3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62.5	37.5
	서귀포시 읍·면지역	1	10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73.3	26.7
	자영업	3	66.7	33.3
	화이트칼라	7	57.1	42.9
	블루칼라	21	52.4	47.6
	전업주부	3	66.7	33.3
	기타/무직	5	60.0	40.0
	무응답	3	100.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85.7	14.3
	고등학교 졸업	18	55.6	44.4
	대학교 재학 이상	24	58.3	41.7
	모름/무응답	1	0.0	100.0

## (2) 행정기관 방문 계기

- 행정기관 방문 계기에 대한 조사 결과, ‘비자 관련 문제’ 응답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알선 요청’ 응답이 38.9%, ‘혼인신고, 주민등록 신청, 거주지 신고 등’ 응답이 33.3%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비자 관련 문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58.8%), 20대(58.8%), 네팔(100%), 중국(66.7%), 3-5년 미만(85.7%), 제주시 읍·면지역(60.0%), 화이트칼라(75.0%), 블루칼라(72.7%), 기타/무직(66.7%), 고등학교 졸업(70.0%), 대학교 재학 이상(57.1%), ‘취업 알선 요청’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47.4%), 베트남(50.0%), 3년 미만(69.2%), 농·축·수산업(63.6%)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24] 행정기관 방문 계기

<표 IV-38> 행정기관 방문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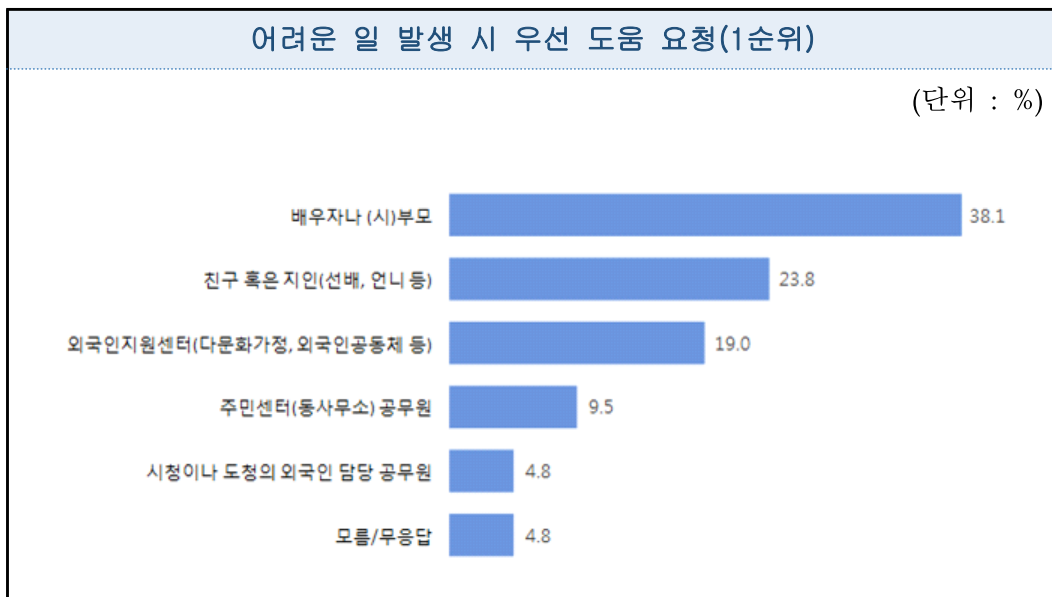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비자 관련 문제	취업 알선 요청	혼인 신고, 주민등록 신청, 거주 지 신고 등	자녀 문제 (학교 및 사회 부적 응 등)	배우자와 불화 문제	이웃 주민 과 갈등 문제	모름/ 무응답
[전 체]		36	47.2	38.9	33.3	16.7	8.3	2.8	8.3
성별		19	36.8	47.4	5.3	15.8	5.3	0.0	10.5
	여자	17	58.8	29.4	64.7	17.6	11.8	5.9	5.9
연령	20 대	17	58.8	41.2	17.6	17.6	0.0	5.9	5.9
	30 대	13	38.5	38.5	46.2	15.4	7.7	0.0	7.7
	40 대 이상	5	40.0	20.0	60.0	20.0	40.0	0.0	2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0.0
출신국가	네팔	3	100.0	33.3	66.7	0.0	0.0	33.3	0.0
	베트남	10	30.0	50.0	20.0	20.0	0.0	0.0	0.0
	인도네시아	3	33.3	33.3	0.0	33.3	0.0	0.0	33.3
	중국	3	66.7	33.3	66.7	0.0	0.0	0.0	0.0
	캄보디아	4	50.0	25.0	25.0	0.0	0.0	0.0	25.0
	태국	1	0.0	0.0	0.0	0.0	0.0	0.0	100.0
	필리핀	10	50.0	40.0	40.0	20.0	20.0	0.0	0.0
	기타/무응답	2	50.0	50.0	50.0	50.0	50.0	0.0	0.0
	3년 미만	13	38.5	69.2	0.0	7.7	0.0	0.0	0.0
	3-5년 미만	7	85.7	42.9	57.1	14.3	14.3	0.0	0.0
거주기간	5-10년 미만	10	30.0	10.0	50.0	30.0	10.0	10.0	30.0
	10년 이상	5	40.0	20.0	40.0	20.0	20.0	0.0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제주시 동지역	29	44.8	41.4	37.9	17.2	6.9	3.4	6.9
거주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0.0	0.0	0.0	0.0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5	60.0	40.0	20.0	20.0	20.0	0.0	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	0.0	0.0	0.0	0.0	0.0	0.0	100.0
	제주시 읍면지역	1	0.0	0.0	0.0	0.0	0.0	0.0	100.0
직업	농·축·수산업	11	9.1	63.6	9.1	9.1	0.0	0.0	18.2
	자영업	2	100.0	0.0	100.0	100.0	100.0	0.0	0.0
	화이트칼라	4	75.0	25.0	50.0	0.0	25.0	0.0	0.0
	블루칼라	11	72.7	27.3	27.3	27.3	0.0	0.0	0.0
	전업주부	2	0.0	0.0	50.0	0.0	0.0	0.0	50.0
	기타/무직	3	66.7	0.0	100.0	0.0	0.0	33.3	0.0
	무응답	3	33.3	100.0	0.0	0.0	0.0	0.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2	16.7	41.7	16.7	25.0	8.3	0.0	16.7
	고등학교 졸업	10	70.0	40.0	50.0	10.0	0.0	0.0	0.0
	대학교 재학 이상	14	57.1	35.7	35.7	14.3	14.3	7.1	7.1



### (3) 어려운 일 발생 시 우선 도움 요청

- 어려운 일 발생 시 우선 도움 요청(1순위)에 대한 조사 결과, ‘배우자나 (시)부모’ 응답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 혹은 지인(선배, 언니 등)’ 응답이 23.8%, ‘외국인지원센터(다문화가정, 외국인공동체 등)’ 응답이 19.0%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배우자나 (시)부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53.8%), 30대(62.5%), 중국(50.0%), 태국(50.0%), 제주시 동지역(44.4%), 화이트칼라(66.7%), 대학교 재학 이상(50.0%), ‘친구 혹은 지인(선배, 언니 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38.5%), 베트남(40.0%), 중국(33.3%), 제주시 읍·면지역(33.3%), 화이트칼라(33.3%), 블루칼라(40.0%)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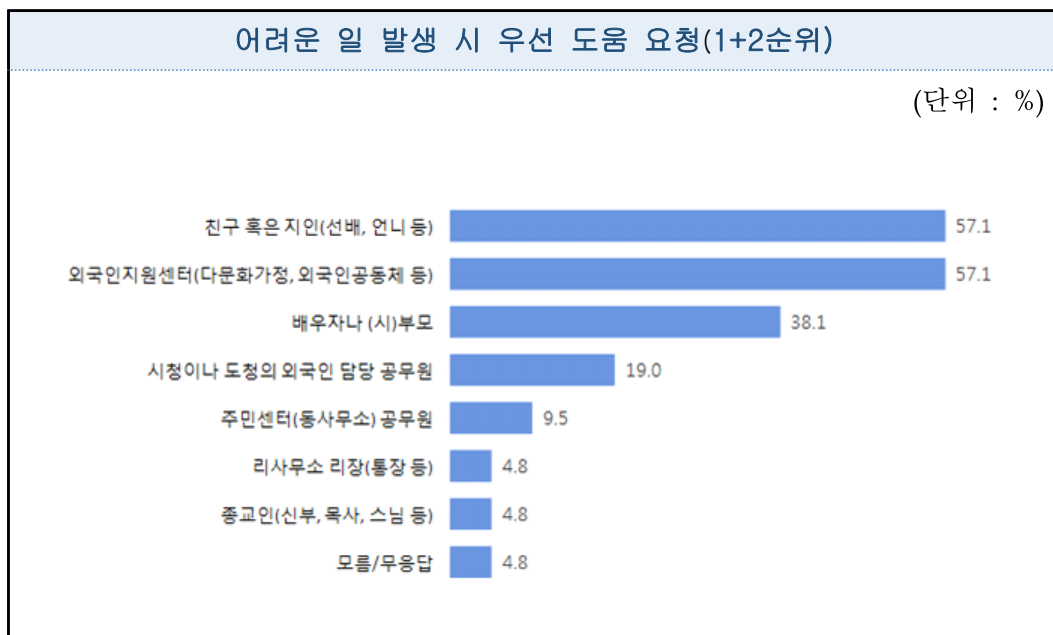
[그림 IV-25] 어려운 일 발생 시 우선 도움 요청(1순위)

&lt;표 IV-39&gt; 어려운 일 발생 시 우선 도움 요청(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배우자나 (시)부모	친구 혹은 지인(선배, 언니 등)	외국인지원 센터(다문 화가정, 외국인 공동체 등)	주민센터 (동사무소) 공무원	시청이나 도청의 외국인 담 당 공무원	모름/ 무응답
[전 체]		21	38.1	23.8	19.0	9.5	4.8	4.8
성별		8	12.5	0.0	37.5	25.0	12.5	12.5
	여자	13	53.8	38.5	7.7	0.0	0.0	0.0
연령	20 대	9	33.3	22.2	33.3	0.0	0.0	11.1
	30 대	8	62.5	25.0	0.0	0.0	12.5	0.0
	40 대 이상	4	0.0	25.0	25.0	50.0	0.0	0.0
출신국가	네팔	3	0.0	0.0	100.0	0.0	0.0	0.0
	베트남	5	40.0	40.0	0.0	0.0	20.0	0.0
	인도네시아	2	50.0	0.0	0.0	0.0	0.0	50.0
	중국	6	50.0	33.3	16.7	0.0	0.0	0.0
	태국	4	50.0	0.0	0.0	50.0	0.0	0.0
	필리핀	1	0.0	100.0	0.0	0.0	0.0	0.0
거주기간	3년 미만	7	28.6	14.3	28.6	0.0	14.3	14.3
	3-5년 미만	7	42.9	28.6	28.6	0.0	0.0	0.0
	5-10년 미만	5	40.0	20.0	0.0	40.0	0.0	0.0
	10년 이상	2	50.0	50.0	0.0	0.0	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18	44.4	22.2	22.2	5.6	5.6	0.0
	제주시 읍면지역	3	0.0	33.3	0.0	33.3	0.0	33.3
직업	농·축·수산업	4	25.0	0.0	0.0	50.0	25.0	0.0
	자영업	1	0.0	0.0	100.0	0.0	0.0	0.0
	화이트칼라	3	66.7	33.3	0.0	0.0	0.0	0.0
	블루칼라	10	20.0	40.0	30.0	0.0	0.0	10.0
	전업주부	1	100.0	0.0	0.0	0.0	0.0	0.0
	기타/무직	2	100.0	0.0	0.0	0.0	0.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	0.0	50.0	0.0	50.0	0.0	0.0
	고등학교 졸업	8	37.5	12.5	12.5	12.5	12.5	12.5
	대학교 재학 이상	10	50.0	20.0	30.0	0.0	0.0	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 어려운 일 발생 시 우선 도움 요청(1+2순위)에 대한 조사 결과, ‘친구 혹은 지인(선배, 언니 등)’ 및 ‘외국인지원센터(다문화가정, 외국인공동체 등)’ 응답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나 (시)부모’ 응답이 38.1%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친구 혹은 지인(선배, 언니 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69.2%), 20대(66.7%), 30대(62.5%), 네팔(100%), 3-5년 미만(85.7%), 화이트칼라(66.7%), 블루칼라(80.0%), 대학교 재학 이상(80.0%), ‘외국인지원센터(다문화가정, 외국인공동체 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62.5%), 20대(77.8%), 네팔(100%), 베트남(80.0%), 중국(66.7%), 3년 미만(85.7%), 제주시 동지역(66.7%), 화이트칼라(66.7%), 고등학교 졸업(62.5%)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27] 어려운 일 발생 시 우선 도움 요청(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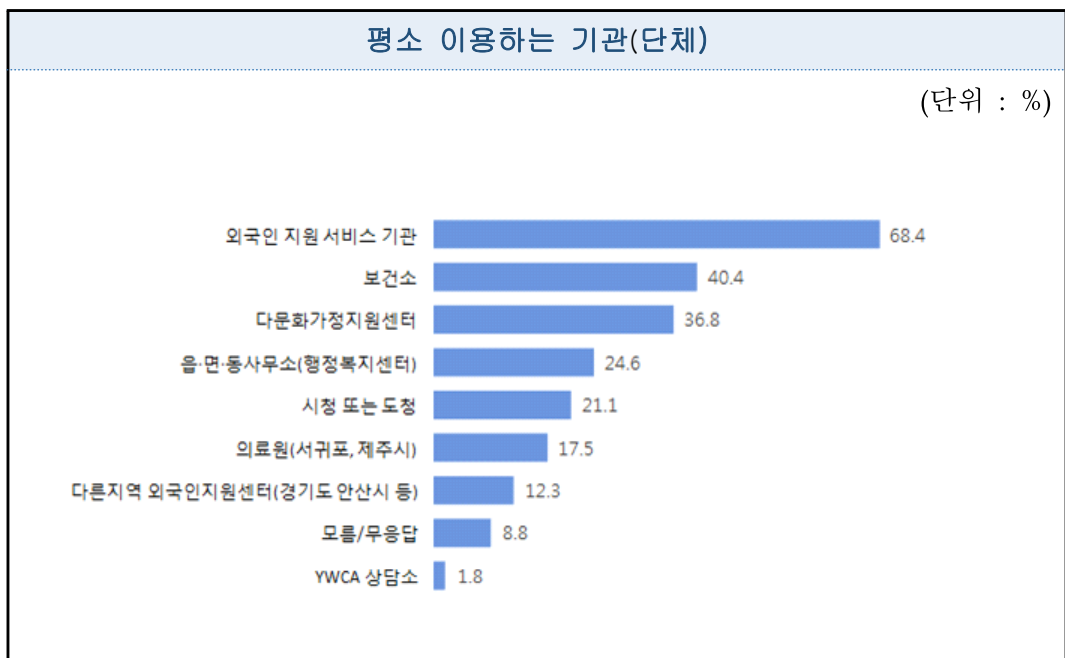
<표 IV-40> 어려운 일 발생 시 우선 도움 요청(1+2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친구 혹은 지인 (선배, 언니 등)	외국인 지원센터 (다문화 가정, 외국인공동체 등)	배우 자나 (시) 부모	시청이나 도청의 외국인 담당 공무원	주민센터 (동사무소) 공무원	리사무소 리장 (통장 등)	종교인 (신부, 목사, 스님 등)	모름/무응답
[전 체]		21	57.1	57.1	38.1	19.0	9.5	4.8	4.8	4.8
성별	남자	8	37.5	62.5	12.5	37.5	25.0	0.0	0.0	12.5
	여자	13	69.2	53.8	53.8	7.7	0.0	7.7	7.7	0.0
연령	20 대	9	66.7	77.8	33.3	0.0	0.0	0.0	0.0	11.1
	30 대	8	62.5	37.5	62.5	12.5	0.0	12.5	12.5	0.0
	40 대 이상	4	25.0	50.0	0.0	75.0	50.0	0.0	0.0	0.0
출신국가	네팔	3	100.0	100.0	0.0	0.0	0.0	0.0	0.0	0.0
	베트남	5	60.0	80.0	40.0	20.0	0.0	0.0	0.0	0.0
	인도네시아	2	0.0	50.0	50.0	0.0	0.0	0.0	0.0	50.0
	중국	6	50.0	66.7	50.0	16.7	0.0	16.7	0.0	0.0
	태국	4	50.0	0.0	50.0	50.0	50.0	0.0	0.0	0.0
거주기간	필리핀	1	100.0	0.0	0.0	0.0	0.0	0.0	100.0	0.0
	3 년 미만	7	42.9	85.7	28.6	14.3	0.0	0.0	0.0	14.3
	3-5 년 미만	7	85.7	57.1	42.9	14.3	0.0	0.0	0.0	0.0
	5-10 년 미만	5	40.0	0.0	40.0	40.0	40.0	20.0	20.0	0.0
거주지역	10 년 이상	2	50.0	100.0	50.0	0.0	0.0	0.0	0.0	0.0
	제주시 동지역	18	61.1	66.7	44.4	16.7	5.6	5.6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3	33.3	0.0	0.0	33.3	33.3	0.0	33.3	33.3
직업	농·축·수산업	4	0.0	50.0	25.0	75.0	50.0	0.0	0.0	0.0
	자영업	1	0.0	100.0	0.0	100.0	0.0	0.0	0.0	0.0
	화이트칼라	3	66.7	66.7	66.7	0.0	0.0	0.0	0.0	0.0
	블루칼라	10	80.0	60.0	20.0	0.0	0.0	10.0	10.0	10.0
	전업주부	1	100.0	0.0	100.0	0.0	0.0	0.0	0.0	0.0
	기타/무직	2	50.0	50.0	100.0	0.0	0.0	0.0	0.0	0.0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2	50.0	50.0	0.0	50.0	50.0	0.0	0.0	0.0
	고등학교 졸업	8	25.0	62.5	37.5	37.5	12.5	0.0	0.0	12.5
	대학교 재학 이상	10	80.0	50.0	50.0	0.0	0.0	10.0	10.0	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0.0	0.0	0.0	0.0	0.0	0.0

#### (4) 평소 이용하는 기관(단체)

- 평소 이용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조사 결과, ‘외국인 지원 서비스 기관’ 응답이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소’ 응답이 40.4%,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응답이 36.8%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외국인 지원 서비스 기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76.9%), 30대(76.2%), 베트남(86.7%), 캄보디아(75.0%), 3년 미만(80.0%), 제주시 동지역(74.5%), 블루칼라(76.2%), 기타/무직(80.0%), ‘보건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50.0%), 네팔(50.0%), 중국(66.7%), 캄보디아(50.0%), 3-5년 미만(64.3%), 제주시 동지역(46.8%), 화이트칼라(57.1%), 블루칼라(47.6%), 대학교 재학 이상(50.0%)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28] 평소 이용하는 기관(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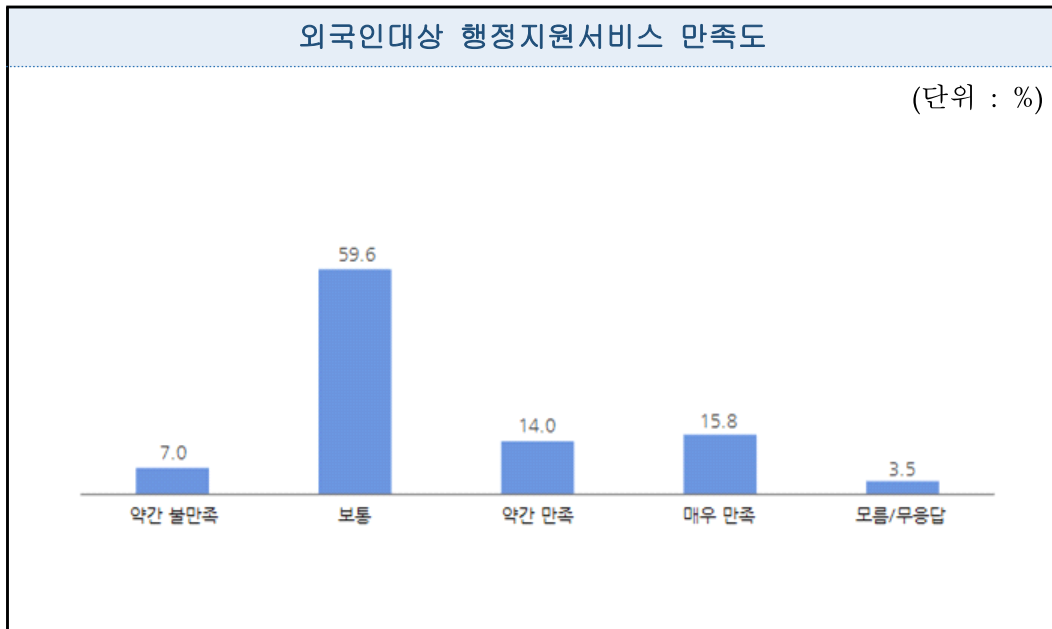
&lt;표 IV-41&gt; 평소 이용하는 기관(단체)

(단위: 명, %)

		사례수	외국인 지원 서비스 기관	보건소	다문화 가정지 원센터	읍면·동 사무소 (행정복 지센터)	시청 또는 도청	의료원 (서귀 포, 제 주시)	다른지역 외국인 지원센터 (경기도 등)	모름/ 무응답	YWCA 상담소
[전 체]		57	68.4	40.4	36.8	24.6	21.1	17.5	12.3	8.8	1.8
성별		27	66.7	29.6	14.8	11.1	7.4	14.8	18.5	14.8	0.0
	여자	30	70.0	50.0	56.7	36.7	33.3	20.0	6.7	3.3	3.3
연령	20 대	26	76.9	34.6	26.9	23.1	26.9	15.4	15.4	3.8	0.0
	30 대	21	76.2	42.9	42.9	23.8	23.8	19.0	9.5	9.5	4.8
	40 대 이상	9	22.2	44.4	55.6	33.3	0.0	22.2	0.0	22.2	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출신국가	네팔	6	66.7	50.0	50.0	33.3	16.7	0.0	16.7	0.0	0.0
	베트남	15	86.7	33.3	33.3	33.3	33.3	13.3	20.0	6.7	0.0
	인도네시아	5	60.0	20.0	0.0	0.0	20.0	20.0	0.0	20.0	0.0
	중국	9	55.6	66.7	66.7	22.2	33.3	55.6	11.1	0.0	11.1
	캄보디아	4	75.0	50.0	0.0	0.0	0.0	25.0	25.0	0.0	0.0
	태국	5	20.0	40.0	40.0	40.0	40.0	0.0	0.0	60.0	0.0
	필리핀	11	72.7	18.2	45.5	18.2	0.0	9.1	0.0	0.0	0.0
	기타/무응답	2	100.0	100.0	0.0	50.0	0.0	0.0	50.0	0.0	0.0
거주기간	3년 미만	20	80.0	30.0	10.0	5.0	15.0	10.0	20.0	10.0	0.0
	3-5년 미만	14	71.4	64.3	71.4	50.0	28.6	14.3	7.1	0.0	7.1
	5-10년 미만	15	53.3	40.0	33.3	20.0	26.7	33.3	13.3	20.0	0.0
	10년 이상	7	57.1	28.6	57.1	42.9	14.3	14.3	0.0	0.0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74.5	46.8	40.4	27.7	23.4	17.0	14.9	6.4	2.1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37.5	12.5	25.0	12.5	12.5	12.5	0.0	25.0	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66.7	26.7	26.7	0.0	0.0	20.0	13.3	13.3	0.0
	자영업	3	33.3	33.3	66.7	33.3	0.0	0.0	0.0	0.0	0.0
	화이트칼라	7	71.4	57.1	57.1	14.3	28.6	42.9	14.3	0.0	14.3
	블루칼라	21	76.2	47.6	33.3	38.1	33.3	19.0	14.3	4.8	0.0
	전업주부	3	33.3	33.3	33.3	33.3	33.3	0.0	0.0	33.3	0.0
	기타/무직	5	80.0	20.0	60.0	60.0	20.0	0.0	0.0	0.0	0.0
	무응답	3	66.7	66.7	0.0	0.0	33.3	0.0	33.3	33.3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71.4	21.4	21.4	7.1	7.1	14.3	14.3	7.1	0.0
	고등학교 졸업	18	66.7	44.4	44.4	33.3	27.8	16.7	16.7	11.1	0.0
	대학교 재학 이상	24	66.7	50.0	41.7	25.0	25.0	20.8	8.3	8.3	4.2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100.0	0.0	0.0	0.0	0.0	0.0

##### (5) 외국인대상 행정지원서비스 만족도

- ‘외국인대상 행정지원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보통’ 응답이 59.6%, ‘만족’ 응답이 29.8%(약간 14.0% + 매우 15.8%)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보통’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대 이상(77.8%), 네팔(100%), 캄보디아(75.0%), 필리핀(72.7%), 3년 미만(65.0%), 제주 읍·면지역(75.0%), 농·축·수산업(66.7%), 자영업(66.7%), 전업주부(66.7%)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29] 외국인대상 행정지원서비스 만족도

<표 IV-42> 외국인대상 행정지원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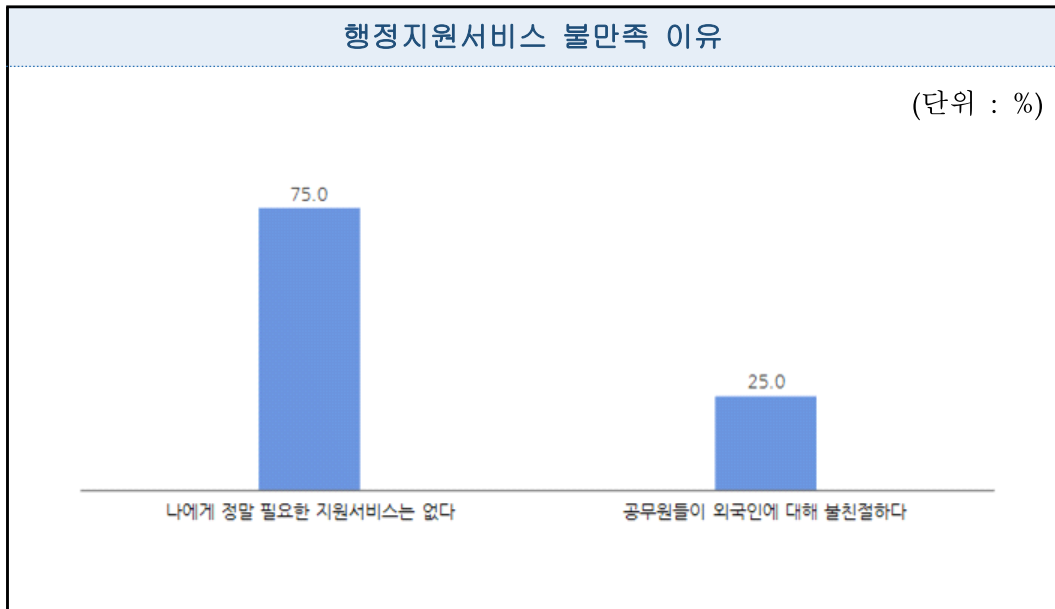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종합평가				100 점 평균
[전 체]		57	7.0	59.6	14.0	15.8	3.5	7.0	59.6	29.8	3.5	60.0
성별		27	11.1	59.3	7.4	14.8	7.4	11.1	59.3	22.2	7.4	57.0
	여자	30	3.3	60.0	20.0	16.7	0.0	3.3	60.0	36.7	0.0	62.5
연령	20 대	26	3.8	61.5	15.4	15.4	3.8	3.8	61.5	30.8	3.8	61.0
	30 대	21	14.3	47.6	19.0	19.0	0.0	14.3	47.6	38.1	0.0	60.7
	40 대 이상	9	0.0	77.8	0.0	11.1	11.1	0.0	77.8	11.1	11.1	56.3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50.0
출신국가	네팔	6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50.0
	베트남	15	20.0	53.3	20.0	6.7	0.0	20.0	53.3	26.7	0.0	53.3
	인도네시아	5	20.0	40.0	20.0	20.0	0.0	20.0	40.0	40.0	0.0	60.0
	중국	9	0.0	22.2	33.3	44.4	0.0	0.0	22.2	77.8	0.0	80.6
	캄보디아	4	0.0	75.0	0.0	0.0	25.0	0.0	75.0	0.0	25.0	50.0
	태국	5	0.0	60.0	0.0	20.0	20.0	0.0	60.0	20.0	20.0	62.5
	필리핀	11	0.0	72.7	9.1	18.2	0.0	0.0	72.7	27.3	0.0	61.4
	기타/무응답	2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50.0
거주기간	3년 미만	20	5.0	65.0	15.0	10.0	5.0	5.0	65.0	25.0	5.0	57.9
	3-5년 미만	14	7.1	50.0	21.4	21.4	0.0	7.1	50.0	42.9	0.0	64.3
	5-10년 미만	15	6.7	60.0	6.7	20.0	6.7	6.7	60.0	26.7	6.7	60.7
	10년 이상	7	14.3	57.1	14.3	14.3	0.0	14.3	57.1	28.6	0.0	57.1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5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8.5	59.6	17.0	12.8	2.1	8.5	59.6	29.8	2.1	58.7
	서귀포시 동지역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100.0
	제주시 읍면지역	8	0.0	75.0	0.0	12.5	12.5	0.0	75.0	12.5	12.5	57.1
	읍면지역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100.0
직업	농·축·수산업	15	13.3	66.7	6.7	6.7	6.7	13.3	66.7	13.3	6.7	51.8
	자영업	3	0.0	66.7	0.0	33.3	0.0	0.0	66.7	33.3	0.0	66.7
	화이트칼라	7	0.0	28.6	42.9	28.6	0.0	0.0	28.6	71.4	0.0	75.0
	블루칼라	21	9.5	61.9	4.8	19.0	4.8	9.5	61.9	23.8	4.8	58.8
	전업주부	3	0.0	66.7	0.0	33.3	0.0	0.0	66.7	33.3	0.0	66.7
	기타/무직	5	0.0	60.0	40.0	0.0	0.0	0.0	60.0	40.0	0.0	60.0
	무응답	3	0.0	66.7	33.3	0.0	0.0	0.0	66.7	33.3	0.0	58.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28.6	50.0	7.1	7.1	7.1	28.6	50.0	14.3	7.1	48.1
	고등학교 졸업	18	0.0	61.1	22.2	11.1	5.6	0.0	61.1	33.3	5.6	61.8
	대학교 재학 이상	24	0.0	62.5	12.5	25.0	0.0	0.0	62.5	37.5	0.0	65.6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50.0



## (6) 행정지원서비스 불만족 이유

- 행정지원서비스 불만족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나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없다' 응답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들이 외국인에 대해 불친절하다' 응답이 25.0%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없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100%), 베트남(100%), '공무원들이 외국인에 대해 불친절하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33.3%)로 나타남.



[그림 IV-30] 행정지원서비스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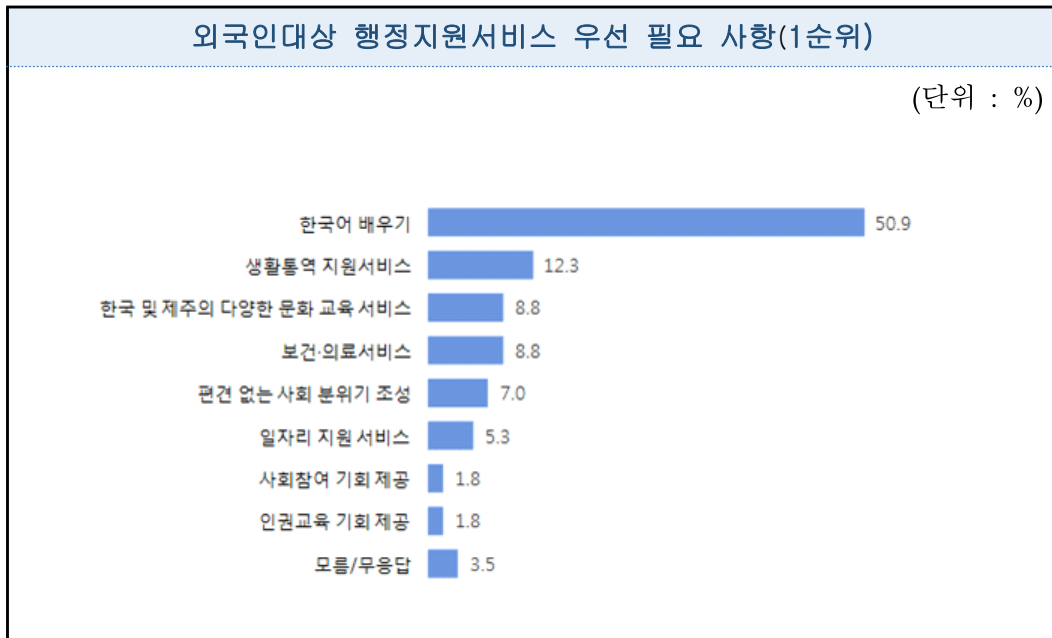
&lt;표 IV-43&gt; 행정지원서비스 불만족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나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없다	공무원들이 외국인에 대해 불친절하다
[전 체]		4	75.0	25.0
성별	남자	3	66.7	33.3
	여자	1	100.0	0.0
연령	20 대	1	0.0	100.0
	30 대	3	100.0	0.0
출신 국가	베트남	3	100.0	0.0
	인도네시아	1	0.0	100.0
거주 기간	3 년 미만	1	100.0	0.0
	3-5 년 미만	1	100.0	0.0
	5-10 년 미만	1	0.0	100.0
	10 년 이상	1	100.0	0.0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4	75.0	25.0
직업	농·축·수산업	2	100.0	0.0
	블루칼라	2	50.0	5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	75.0	25.0

### (7) 외국인대상 행정지원서비스 우선 필요 사항(1순위)

- 외국인대상 행정지원서비스 우선 필요 사항(1순위)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어 배우기' 응답이 5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계층별 분석에서 '한국어 배우기'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61.5%), 베트남(66.7%), 필리핀(81.8%), 3년 미만(70.0%), 제주도 읍·면지역(75.0%), 농·축·수산업(60.0%), 화이트칼라(71.4%), 블루칼라(57.1%), 대학교 재학 이상(62.5%)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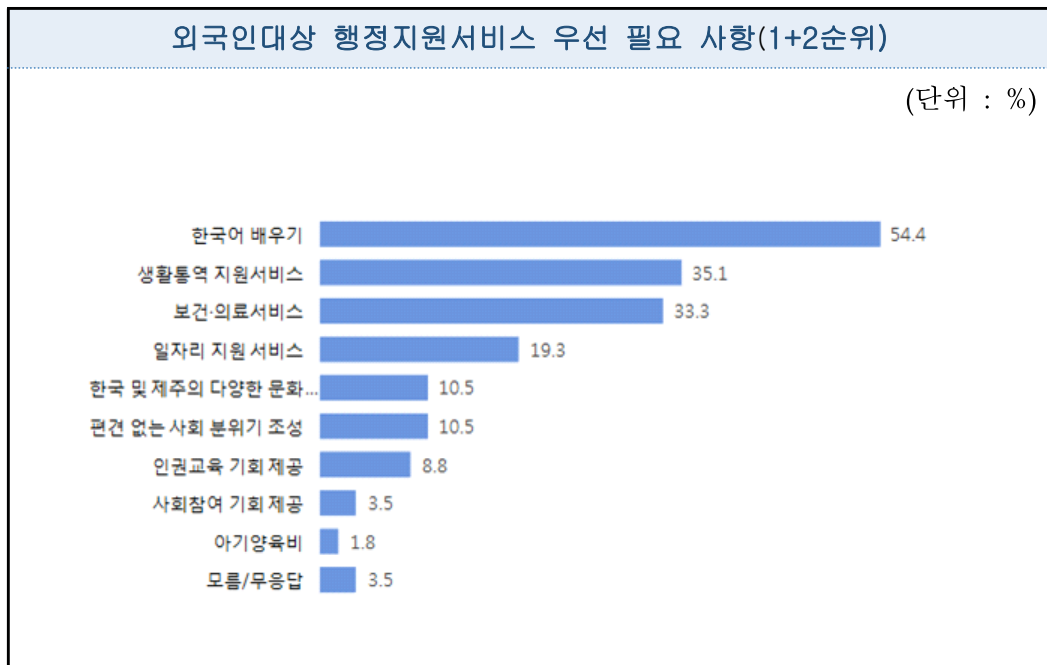
[그림 IV-31] 외국인대상 행정지원 서비스 우선 필요 사항(1순위)

<표 IV-44> 외국인대상 행정지원 서비스 우선 필요 사항(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한국어 배우기	생활 통역 지원 서비스	한국 및 제주의 다양한 문화 교육 서비스	보건· 의료서 비스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	일자리 지원 서비스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인권 교육 기회 제공	모름/ 무응답
[전 체]		57	50.9	12.3	8.8	8.8	7.0	5.3	1.8	1.8	3.5
성별		27	55.6	18.5	3.7	14.8	0.0	0.0	3.7	0.0	3.7
	여자	30	46.7	6.7	13.3	3.3	13.3	10.0	0.0	3.3	3.3
연령	20 대	26	61.5	3.8	11.5	7.7	7.7	0.0	3.8	0.0	3.8
	30 대	21	52.4	9.5	9.5	9.5	4.8	9.5	0.0	0.0	4.8
	40 대 이상	9	22.2	33.3	0.0	11.1	11.1	11.1	0.0	11.1	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출신국가	네팔	6	50.0	16.7	16.7	0.0	0.0	0.0	16.7	0.0	0.0
	베트남	15	66.7	0.0	6.7	6.7	6.7	6.7	0.0	0.0	6.7
	인도네시아	5	20.0	0.0	40.0	40.0	0.0	0.0	0.0	0.0	0.0
	중국	9	44.4	0.0	0.0	0.0	33.3	11.1	0.0	11.1	0.0
	캄보디아	4	25.0	25.0	0.0	25.0	0.0	0.0	0.0	0.0	25.0
	태국	5	20.0	60.0	0.0	20.0	0.0	0.0	0.0	0.0	0.0
	필리핀	11	81.8	0.0	9.1	0.0	0.0	9.1	0.0	0.0	0.0
	기타/무응답	2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거주기간	3년 미만	20	70.0	10.0	10.0	5.0	0.0	0.0	0.0	0.0	5.0
	3-5년 미만	14	35.7	14.3	7.1	14.3	21.4	0.0	7.1	0.0	0.0
	5-10년 미만	15	40.0	20.0	13.3	13.3	6.7	6.7	0.0	0.0	0.0
	10년 이상	7	42.9	0.0	0.0	0.0	0.0	28.6	0.0	14.3	14.3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44.7	12.8	8.5	10.6	8.5	6.4	2.1	2.1	4.3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75.0	12.5	12.5	0.0	0.0	0.0	0.0	0.0	0.0
	읍면지역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60.0	20.0	0.0	20.0	0.0	0.0	0.0	0.0	0.0
	자영업	3	33.3	33.3	0.0	0.0	33.3	0.0	0.0	0.0	0.0
	화이트칼라	7	71.4	0.0	0.0	0.0	28.6	0.0	0.0	0.0	0.0
	블루칼라	21	57.1	4.8	4.8	4.8	4.8	9.5	4.8	0.0	9.5
	전업주부	3	0.0	33.3	33.3	33.3	0.0	0.0	0.0	0.0	0.0
	기타/무직	5	20.0	0.0	40.0	0.0	0.0	20.0	0.0	20.0	0.0
	무응답	3	33.3	33.3	33.3	0.0	0.0	0.0	0.0	0.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35.7	21.4	7.1	21.4	0.0	0.0	0.0	0.0	14.3
	고등학교 졸업	18	44.4	5.6	16.7	5.6	11.1	11.1	0.0	5.6	0.0
	대학교 재학 이상	24	62.5	12.5	4.2	4.2	8.3	4.2	4.2	0.0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 외국인대상 행정지원서비스 우선 필요 사항(1+2순위)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어 배우기' 응답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통역 지원 서비스' 응답이 35.1%, '보건·의료서비스' 응답이 33.3%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한국어 배우기'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65.4%), 네팔(66.7%), 베트남(66.7%), 필리핀(90.9%), 3년 미만(70.0%), 제주시 읍·면지역(75.0%), 농·축·수산업(60.0%), 화이트칼라(71.4%), 블루칼라(61.9%), 대학교 재학 이상(66.7%), '생활통역 지원서비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대 이상(55.6%), 캄보디아(50.0%), 태국(60.0%), 3-5년 미만(50.0%), 제주시 읍·면지역(50.0%), 자영업(100%), 화이트칼라(57.1%), 전업주부(66.7%), 중학교 졸업 이하(50.0%)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32] 외국인대상 행정지원서비스 우선 필요 사항(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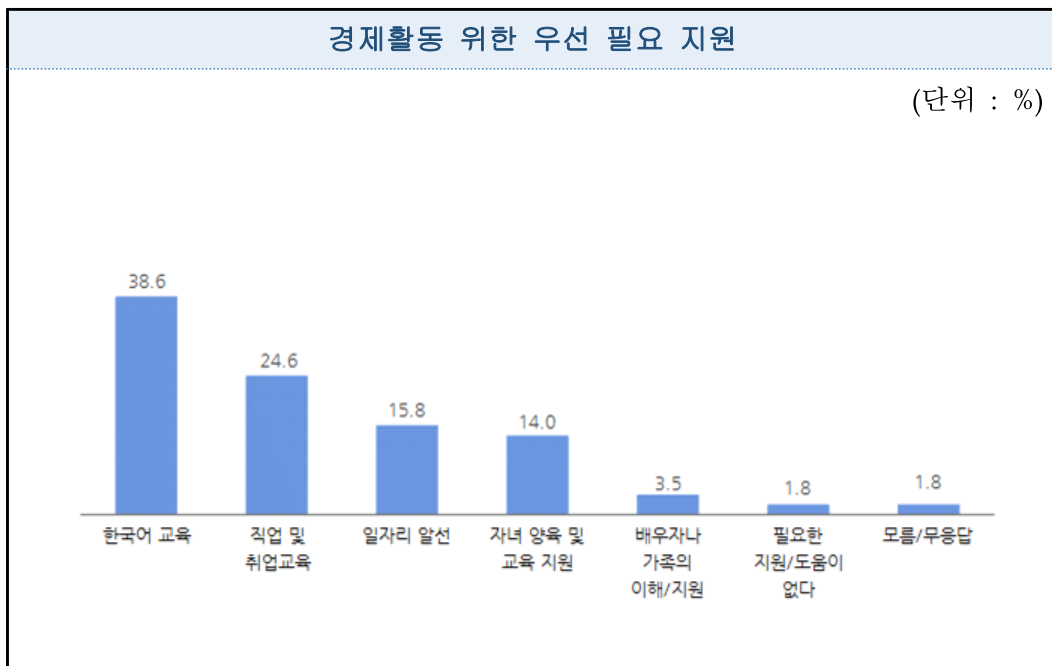
<표 IV-45> 외국인대상 행정지원서비스 우선 필요 사항(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한국어 배우기	생활 통역 지원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지원 서비스	한국 및 제주의 다양한 문화 교육 서비스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	인권 교육 기회 제공	외국인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아기 양육비	모름/무응답
[전 체]		57	54.4	35.1	33.3	19.3	10.5	10.5	8.8	3.5	1.8	3.5
성별	남자	27	59.3	33.3	48.1	7.4	3.7	0.0	7.4	3.7	0.0	3.7
	여자	30	50.0	36.7	20.0	30.0	16.7	20.0	10.0	3.3	3.3	3.3
연령	20 대	26	65.4	26.9	19.2	15.4	11.5	11.5	11.5	7.7	0.0	3.8
	30 대	21	57.1	33.3	33.3	28.6	14.3	4.8	4.8	0.0	4.8	4.8
	40 대 이상	9	22.2	55.6	66.7	11.1	0.0	22.2	11.1	0.0	0.0	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출신국가	네팔	6	66.7	16.7	0.0	16.7	16.7	16.7	50.0	16.7	0.0	0.0
	베트남	15	66.7	40.0	26.7	13.3	6.7	6.7	0.0	0.0	6.7	6.7
	인도네시아	5	20.0	0.0	40.0	40.0	40.0	0.0	0.0	0.0	0.0	0.0
	중국	9	44.4	33.3	22.2	22.2	11.1	44.4	11.1	11.1	0.0	0.0
	캄보디아	4	25.0	50.0	50.0	0.0	0.0	0.0	0.0	0.0	0.0	25.0
	태국	5	20.0	60.0	60.0	60.0	0.0	0.0	0.0	0.0	0.0	0.0
	필리핀	11	90.9	27.3	36.4	9.1	9.1	0.0	9.1	0.0	0.0	0.0
거주기간	기타/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3년 미만	20	70.0	25.0	40.0	5.0	10.0	0.0	10.0	5.0	0.0	5.0
	3-5년 미만	14	50.0	50.0	21.4	28.6	14.3	28.6	0.0	7.1	0.0	0.0
	5-10년 미만	15	40.0	40.0	40.0	26.7	13.3	6.7	13.3	0.0	0.0	0.0
	10년 이상	7	42.9	14.3	28.6	28.6	0.0	14.3	14.3	0.0	14.3	14.3
거주지역	모름/무응답	1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주시 동지역	47	48.9	34.0	34.0	19.1	10.6	12.8	10.6	4.3	2.1	4.3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75.0	50.0	37.5	12.5	12.5	0.0	0.0	0.0	0.0	0.0
직업	서귀포시 읍면지역	1	10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농·축·수산업	15	60.0	40.0	66.7	13.3	0.0	0.0	6.7	0.0	0.0	0.0
	자영업	3	33.3	100.0	33.3	0.0	0.0	33.3	0.0	0.0	0.0	0.0
	화이트칼라	7	71.4	57.1	0.0	14.3	14.3	28.6	0.0	14.3	0.0	0.0
	블루칼라	21	61.9	14.3	23.8	19.0	4.8	14.3	9.5	4.8	0.0	9.5
	전업주부	3	0.0	66.7	33.3	66.7	33.3	0.0	0.0	0.0	0.0	0.0
	기타/무직	5	40.0	20.0	20.0	20.0	40.0	0.0	40.0	0.0	20.0	0.0
학력	무응답	3	33.3	33.3	33.3	33.3	33.3	0.0	0.0	0.0	0.0	0.0
	중학교 졸업 이하	14	35.7	50.0	50.0	7.1	7.1	0.0	0.0	0.0	0.0	14.3
	고등학교 졸업	18	50.0	27.8	38.9	22.2	16.7	16.7	5.6	0.0	5.6	0.0
	대학교 재학 이상	24	66.7	29.2	20.8	25.0	8.3	12.5	16.7	8.3	0.0	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 (8) 경제활동 위한 우선 필요 지원

- 경제활동 위한 우선 필요 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어 교육’ 응답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 및 취업교육’ 응답이 24.6%, ‘일자리 알선’ 응답이 15.8%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한국어 교육’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44.4%), 40대 이상(44.4%), 인도네시아(60.0%), 태국(60.0%), 필리핀(63.6%), 3년 미만(55.0%), 제주시 읍면지역(75.0%), 농·축·수산업(60.0%), 고등학교 졸업(44.4%), ‘직업 및 취업교육’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29.6%), 20대(38.5%), 네팔(83.3%), 태국(40.0%), 3-5년 미만(35.7%), 5-10년 미만(33.3%), 자영업(33.3%), 블루칼라(33.3%), 전업주부(66.7%), 대학교 재학 이상(33.3%)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33] 경제활동 위한 우선 필요 지원

&lt;표 IV-46&gt; 경제활동 위한 우선 필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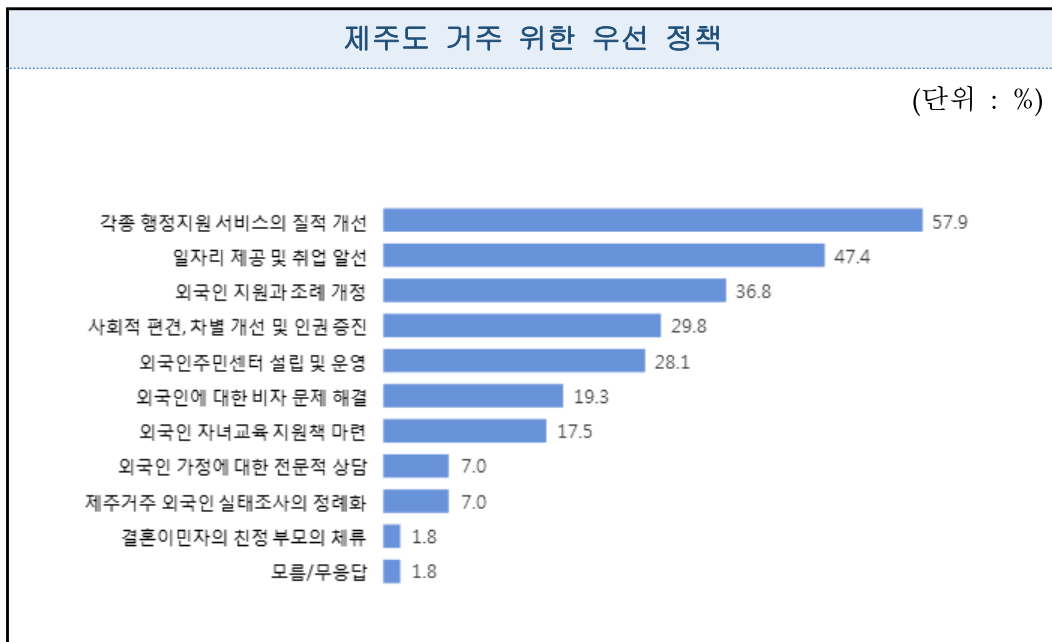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한국어 교육	직업 및 취업교육	일자리 알선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지원	필요한 지원/도움이 없다	모름/무응답
[전 체]		57	38.6	24.6	15.8	14.0	3.5	1.8	1.8
성별	남자	27	44.4	29.6	14.8	3.7	0.0	3.7	3.7
	여자	30	33.3	20.0	16.7	23.3	6.7	0.0	0.0
연령	20 대	26	38.5	38.5	11.5	3.8	0.0	3.8	3.8
	30 대	21	33.3	9.5	28.6	19.0	9.5	0.0	0.0
	40 대 이상	9	44.4	22.2	0.0	33.3	0.0	0.0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출신국가	네팔	6	0.0	83.3	0.0	16.7	0.0	0.0	0.0
	베트남	15	33.3	20.0	26.7	13.3	0.0	6.7	0.0
	인도네시아	5	60.0	20.0	20.0	0.0	0.0	0.0	0.0
	중국	9	22.2	22.2	22.2	22.2	11.1	0.0	0.0
	캄보디아	4	25.0	25.0	0.0	25.0	0.0	0.0	25.0
	태국	5	60.0	40.0	0.0	0.0	0.0	0.0	0.0
	필리핀	11	63.6	0.0	18.2	9.1	9.1	0.0	0.0
	기타/무응답	2	50.0	0.0	0.0	50.0	0.0	0.0	0.0
거주기간	3년 미만	20	55.0	20.0	15.0	0.0	0.0	5.0	5.0
	3-5년 미만	14	21.4	35.7	21.4	14.3	7.1	0.0	0.0
	5-10년 미만	15	40.0	33.3	13.3	6.7	6.7	0.0	0.0
	10년 이상	7	28.6	0.0	14.3	57.1	0.0	0.0	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47	31.9	25.5	17.0	17.0	4.3	2.1	2.1
	서귀포시 동지역	1	0.0	0.0	100.0	0.0	0.0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75.0	25.0	0.0	0.0	0.0	0.0	0.0
	읍면지역	1	100.0	0.0	0.0	0.0	0.0	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60.0	13.3	13.3	0.0	6.7	6.7	0.0
	자영업	3	33.3	33.3	0.0	33.3	0.0	0.0	0.0
	화이트칼라	7	28.6	14.3	28.6	14.3	14.3	0.0	0.0
	블루칼라	21	28.6	33.3	14.3	19.0	0.0	0.0	4.8
	전업주부	3	0.0	66.7	33.3	0.0	0.0	0.0	0.0
	기타/무직	5	40.0	20.0	0.0	40.0	0.0	0.0	0.0
	무응답	3	66.7	0.0	33.3	0.0	0.0	0.0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42.9	14.3	21.4	7.1	0.0	7.1	7.1
	고등학교 졸업	18	44.4	22.2	11.1	22.2	0.0	0.0	0.0
	대학교 재학 이상	24	29.2	33.3	16.7	12.5	8.3	0.0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 (9) 제주도 거주 위한 우선 정책

- 제주도 거주 위한 우선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 ‘외국인을 위한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통역, 교육, 보건의료 등)의 질적 개선’ 응답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에게 필요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알선’ 응답이 47.4%, ‘외국인 지원과 생활개선 등의 현실을 고려한 조례 개정’ 응답이 36.8%로 나타남.
- 계층별 분석에서 ‘각종 행정지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63.0%), 40대 이상(88.9%), 인도네시아(80.0%), 중국(66.7%), 태국(100%), 필리핀(81.8%), 3-5년 미만(64.3%), 제주시 읍·면지역(87.5%), 농·축·수산업(66.7%), 자영업(66.7%), 전업주부(100%), 대학교 재학 이상(70.8%),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알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53.3%), 베트남(60.0%), 인도네시아(80.0%), 태국(60.0%), 5-10년 미만(66.7%), 10년 이상(57.1%), 농·축·수산업(60.0%), 화이트칼라(57.1%), 중학교 졸업 이하(57.1%)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33] 제주도 거주 위한 우선 정책

<표 IV-47> 제주도 거주 위한 우선 정책

(단위: 명, %)

		사례 수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알선	외국인 지원과 조례 개정	사회적 편견 차별 개선 및 인권 증진	외국인 주민 센터 설립 및 운영	외국인 에 대한 비자 문제 해결	외국인 자녀 교육 지원책 마련	외국인 가정에 대한 전문적 상담	제주 거주 외국인 실태 조사의 정례화	결혼이민자의 친정 부모의 체류	모름/무응답
	[전 체]	57	57.9	47.4	36.8	29.8	28.1	19.3	17.5	7.0	7.0	1.8	1.8
성별	남자	27	63.0	40.7	33.3	37.0	22.2	25.9	11.1	0.0	11.1	0.0	3.7
	여자	30	53.3	53.3	40.0	23.3	33.3	13.3	23.3	13.3	3.3	3.3	0.0
연령	20 대	26	46.2	50.0	19.2	23.1	30.8	26.9	19.2	3.8	7.7	0.0	3.8
	30 대	21	61.9	47.6	47.6	38.1	19.0	14.3	23.8	9.5	4.8	4.8	0.0
	40 대 이상	9	88.9	44.4	55.6	22.2	33.3	11.1	0.0	11.1	11.1	0.0	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출신국가	네팔	6	33.3	33.3	33.3	16.7	66.7	66.7	33.3	16.7	0.0	0.0	0.0
	베트남	15	33.3	60.0	20.0	40.0	26.7	13.3	26.7	0.0	13.3	0.0	0.0
	인도네시아	5	80.0	80.0	40.0	0.0	20.0	0.0	0.0	0.0	0.0	0.0	0.0
	중국	9	66.7	44.4	55.6	33.3	22.2	0.0	11.1	33.3	0.0	11.1	0.0
	캄보디아	4	25.0	0.0	50.0	25.0	25.0	0.0	25.0	0.0	0.0	0.0	25.0
	태국	5	100.0	60.0	80.0	0.0	40.0	0.0	0.0	0.0	20.0	0.0	0.0
	필리핀	11	81.8	45.5	18.2	36.4	9.1	45.5	18.2	0.0	0.0	0.0	0.0
거주기간	기타/무응답	2	50.0	0.0	50.0	100.0	50.0	0.0	0.0	0.0	50.0	0.0	0.0
	3년 미만	20	55.0	40.0	35.0	35.0	30.0	25.0	10.0	0.0	5.0	0.0	5.0
	3-5년 미만	14	64.3	35.7	42.9	42.9	28.6	28.6	7.1	14.3	14.3	7.1	0.0
	5-10년 미만	15	60.0	66.7	26.7	26.7	13.3	6.7	26.7	6.7	6.7	0.0	0.0
	10년 이상	7	57.1	57.1	42.9	0.0	57.1	14.3	28.6	14.3	0.0	0.0	0.0
거주지역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0.0	0.0	0.0
	제주시 동지역	47	53.2	48.9	38.3	27.7	31.9	17.0	19.1	8.5	6.4	2.1	2.1
	서귀포시 동지역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주시 읍면지역	8	87.5	37.5	37.5	50.0	12.5	37.5	12.5	0.0	12.5	0.0	0.0
	읍면지역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직업	농·축·수산업	15	66.7	60.0	40.0	60.0	6.7	33.3	6.7	0.0	0.0	0.0	0.0
	자영업	3	66.7	33.3	66.7	66.7	0.0	0.0	33.3	0.0	33.3	0.0	0.0
	화이트칼라	7	57.1	57.1	42.9	28.6	14.3	0.0	14.3	28.6	0.0	14.3	0.0
	블루칼라	21	52.4	42.9	23.8	9.5	33.3	19.0	28.6	0.0	14.3	0.0	4.8
	전업주부	3	100.0	33.3	66.7	33.3	33.3	0.0	0.0	0.0	0.0	0.0	0.0
	기타/무직	5	20.0	40.0	40.0	0.0	80.0	20.0	20.0	40.0	0.0	0.0	0.0
	무응답	3	66.7	33.3	33.3	33.3	66.7	0.0	0.0	0.0	0.0	0.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4	42.9	57.1	42.9	42.9	14.3	7.1	14.3	0.0	0.0	0.0	7.1
	고등학교 졸업	18	55.6	50.0	50.0	22.2	33.3	22.2	22.2	5.6	11.1	0.0	0.0
	대학교 재학 이상	24	70.8	41.7	25.0	29.2	29.2	25.0	16.7	12.5	8.3	4.2	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 다. 조사 결과 주요 시사점

- 현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조사대상자들의 제주 거주 불만족 이유 가운데 가장 높게 인식한 이유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나타남(50.0%).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조사대상 외국인들의 제주 거주 만족 이유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78.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제주사람이 좋아서'(36.8%), 그리고 '제주의 풍습과 문화가 좋아서'(31.6%) 등으로 나타남. 따라서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할 다양한 정책들이 중요하게 인식됨.
- 도내 공공시설 가운데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평화공동체 등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 이러한 공공시설에서 외국인 이용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또한 이들 기관들이 시설 이용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외국인 이용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이주여성지원센터, 읍면동 행정기관(특히 주민센터), 도서관, 제주고용센터, 행정시 공공의료원, 학생문화원 등도 외국인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나타남. 이에 이와 같은 공공시설에서도 이용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비자문제, 건강관리(질병 예방 및 치유), 그리고 상담, 일자리 및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많이 이용하므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서비스 현황과 개선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제주지역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주민들이 공공시설 이용 시 불편한 사항으로는 우선 '의사소통'이 56.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이 42.1%, '이용시간의 제한'이 31.6%로 나타남.
  - 따라서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행정기관, 민간단체(외국인지원기관 또는 단체), 그리고 외

국민고용 사업주 등이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주변인들과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지만 잘 지내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24.6%를 차지하고 있음. 이 사례를 통해 외국인들이 주변인들과 불편하게 지내는 이유를 좀더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6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42.1%, 그리고 '낮은 임금'이 2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언어 소통의 원활화와 편견 및 차별 해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물론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낮은 임금 책정은 원래 외국인이 처음 입국하여 고용을 위한 계약서 작성 시부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특히 외국인 고용허가에 따른 낮은 임금 책정은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임.
- 조사대상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들이 최근 1년간 일을 하면서 부정적 경험에 대한 결과는 '근무 중 상해'가 24.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관리자 혹은 직장동료로부터 언어적 폭력'이 19.3%, '고용주의 협박'이 15.8%, '고용주의 여권 압류'가 12.3%, 그리고 '임금 체불'이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외국인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 상해, 언어폭력, 고용주의 협박 및 여권 압류, 그리고 임금체불 등 부정적인 문제의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한 행정의 세심하고 단호한 대책이 요구됨.
- 절대 대다수의 조사응답 외국인들은 제주도에 계속 거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84.2%), 반면에 15.8%의 외국인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음.

- 제주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친구나 지인들이 없어서' 및 '제주의 문화와 생활풍습 적응이 어려워서' 가 크게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들이 제주사회 적응과정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제주 이해 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행정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조사응답 외국인주민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한 계기에 대하여 '비자 관련 문제'가 47.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취업 알선 요청'이 38.9%, 그리고 '혼인신고, 주민등록 신청, 거주지신고 등'이 3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행정서비스 가운데 외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들이 비자문제, 취업, 혼인신고 등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행정지원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외국인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 우선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자는 '배우자 혹은 (시)부모'가 38.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 혹은 지인(선배, 언니 등)' 23.8%, 그리고 '외국인지원센터(다문화가정, 외국인 평화공동체 등)' 1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외국인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 공적 행정기관보다 가족, 친구(혹은 언니, 선배 등) 그리고 민간지원기관(단체)로 나타남. 따라서 제주거주 외국인의 다양한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공적 지원 시스템(외국인 콜 119 등) 구축도 필요함.
- 조사응답 외국인주민들이 행정지원서비스 만족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만족하다'는 인식이 29.8%이고, '불만족하다'는 7.0%를 차지하였음. '행정지원서비스 불만족' 이유 중에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없다'라는 인식이 75.0%를 차지하고, 이어서 '공무원들이 외국인에 대해 불친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25.0%를 차지함.
- 따라서 제주 거주 외국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행정지원서비스가 없다는 사실은 그만큼 서비스 전달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공무원의 불친절이 개입되면서 결국 행정지원서비스의 불만족으로 연계됨.

- 외국인 행정지원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루려면 우선 행정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이용자들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거기에 맞는 행정지원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주민 조사대상자들은 외국인 대상 행정지원서비스들 가운데 가장 우선 필요한 사항(제1순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어 배우기’가 50.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생활통역 지원서비스’ 12.3%, ‘한국 및 제주의 다양한 문화교육서비스’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각각 8.8%, ‘편견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7.0%, ‘일자리 지원서비스’ 5.3%, 그리고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인권교육 기회제공’이 각각 1.6%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외국인주민 대상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 개선(교육시설, 강사 수준, 강의 일정, 교육 프로그램 내용, 교육시설 접근성 등)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외국인주민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행정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도 ‘한국어 배우기’가 38.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직업 및 취업교육’ 24.6%, 그리고 ‘일자리 알선’이 15.8%를 차지함.
- 외국인주민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도 한국어 능력 향상은 필요하고, 또한 직업 재교육 및 취업 알선도 중요함. 제주 거주 외국인들 가운데 취업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 인력 수요 조사를 통해서 도내 기업들이 원하는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임.
- 끝으로 조사대상 외국인들이 제주에 거주하기 위한 우선 정책과제로 제안한 사항을 보면, ‘외국인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서비스(통역, 교육, 보건의료 등)의 질적 개선’이 57.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외국인에게 필요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알선’ 47.4%, ‘외국인지원과 생활개선 등의 현실을 고려한 조례 개정’ 36.8%, ‘사회적 편견·차별 개선 및 인권 증진’ 29.8%, ‘외국인주민센터 설립 및 운영’ 28.1%, ‘외국인의 비자문제 해결’ 19.3%, 그리고 ‘외국인 자녀교육 지원책 마련’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들은 행정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서비스(통역, 교육, 보건의료 등)의 질적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행정기관(제주특별

자치도, 행정시)에서는 외국인주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행정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 실태와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 이외에 외국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 알선을 위한 행정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인권증진, 외국인주민센터 설립 및 운영, 외국인의 비자문제 해소, 외국인 자녀교육 정책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됨.

## 4. 전문가 면접 조사 결과

### 가. 조사 개요

-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 지원 업무 담당자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
- 심층면접 대상자는 외국인 지원정책 업무 담당자, 민간단체 관계자, 산업별 중간관리자 등 16명이며, 3회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였음.
  - 면접 조사 방법 : 2회 집단 면접, 1회 개별 면접 등 3회 실시
  - 주요 조사 내용 :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환경,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특성, 외국인주민 지원조직 현황 및 정책 지원 방향 등

### 나. 주요 조사 내용

####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

- 제주지역은 2007년 1천2백명에서 2016년 2만명으로 10년 간 외국인주민(근로자, 결혼이주여성)이 6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최근 들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이 있음.

- 2014년 15,568명(남자 8,324명, 여자 7,244명), 2015년 19,903명(남자 10,501명, 여자 9,402명), 2016년 19,524명(남자 10,712명, 여자 8,812명) 등인데,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다소 감소 추세로 나타남.
- 제주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없는 실정이므로, 다른 지방의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노동의 질이나 수입이 낮아서, 일부 근로자들은 다른 지방으로 사업장 및 직종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는 인원수만큼 신규 근로 인원이 대체가 되지 않는 등 근로 가능한 외국인 인력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한편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외국인근로자들이 항공과 선박을 이용하기 때문에 체류자와 거주자의 신분 확인이 명확해서 관련 정보 공유가 가능한 이점이 있음.
- 또한 외국인근로자 중에는 근무 환경이나 업무상 만족도, 자신의 미래 계획에 따라 경제적인 수입은 낮더라도 제주지역에서 계약 만료 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음.
- 제주지역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사업장별 소수로 근무하므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외국인근로자 간에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소통 기회가 부족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 외국인근로자들에 비해 이동과 교류 활동에 제약이 따름.
- 제주지역의 외국인근로자 간 또는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교류 활동에 제약이 생김.
- 따라서 제주지역의 지리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외국인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특정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외국인과 제주 도민이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외국인주민들이 문화·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거의 없으므로, 이들을 위한 '외국인거리'를 조성하고, 외국인주민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착을 위해서도 산업별 관련 기관에서 근로 환



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입국 관련 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현재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제주국제공항까지 인솔해 온 다음 사업주에게 바로 인계하는 행정 업무만 담당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같은 기관에서는 2017년 제주지역에서 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2) 외국인근로자의 산업별 특성화 지원

- 제주지역의 산업 특성상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려는 내국인이 줄어들고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이 직종에 대체되어 근로하고 있는 실정임.
-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이 불규칙하고, 거주지역 주민들의 선입견과 편견 등 부정적인 시각이 외국인근로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제주지역 수산업 분야는 절대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조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고, 축산업(양돈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적어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 정책 등 산업별,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외국인선원인 경우 고용허가제(E-9비자)와 외국인선원제도(E-10비자)에 따라 입국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에는 이 제도로 입국한 선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고용허가제(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양식장에서 일할 수 있으므로 미등록체류자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양식장 근무는 최장 4년 10개월까지 가능함.
- 외국인선원제(E-10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들은 배에서만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할 확률이 낮은 편임.

- 외국인선원제(E-10비자)를 가진 선원들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서 사전 교육을 받고 입국하지만 고용허가제(E-9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은 그러지 못한 실정임.
-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본국에서 몇 가지 심사자격을 통과해야 함.
  - 나이 및 건강검진 통과, 금고형 이상의 과거 범죄 무경력,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약 10일간의 기초교육을 받은 후에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법무부 등의 관련된 행정절차에 따라 입국하게 됨.
  - 정부 간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후에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는 노동관계법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받게 되며, 최저임금 또한 마찬가지로임.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면 3년간 계약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이직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해야 함.
  - 사업주의 귀책사유(구타사고, 계약서 위반, 급여 미지급, 사업장 휴·폐업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및 법무부에 신고 후에 즉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이 가능함.
- 예술 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예술홍행비자(E-6) 소지자이며, 여기에는 E-6-1와 E-6-2 두 종류가 있음.
  - 예술홍행비자(E-6)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 외국인의 여권과 프로필을 보내면 공연의 적합 여부를 판정한 후 발급되는데, 유효기간은 1년이고 계속하여 비자 연장이 가능함.
  - E-6-1비자는 상설공연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기적인 공연을 하는 예술인에게 발급되고, 전문적인 공연으로 보고 외국인 대상 교육이 모두 면제임.
  - E-6-2는 소규모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예술인에게 발급됨.
- 현재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공연팀(E-6-1비자)은 5곳에 소

속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에서 공연추천서를 발급 받고 있음.

- 서커스월드(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점보빌리지(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더마파크(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포니벨리(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아쿠아플라넷(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등이 있음.
- 예술홍행비자(E-6비자)를 소지한 공연자들은 팀별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숙식을 제공하고, 급여는 대부분 팀별로 계약이 진행됨.
- 이들은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구성원 간에 갈등이 있거나 이탈자가 없으며, 공연 시 사고 예방 및 조치를 위해 산재보험, 영업책임배상에 가입되어 있음.
- 예술홍행비자(E-6비자) 소지자도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함.
- 따라서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들의 체류자격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과 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3) 외국인주민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 지원

-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시민, 평화, 인권 등의 기본 교육과정 운영을 제도화함.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들 간 정기적인 교류 기회가 없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내국인(사업주, 중간관리자, 근로자)과 외국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인권과 문화다양성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함.
- 기업 임직원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성실 근로자 및 모범 기업 우대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제주지역의 제조업과 외국인근로자의 상생 방안을 마련함.
- 제조업 관련 기업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하므로,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우해 줄 수 있는 ‘성실 근로자 우대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함.

- 현재 1차,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함.
-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채용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일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 제도가 필요함.
- 이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국해서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정책을 의미함.
-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를 대우해 주는 모범적인 기업도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존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을 권장할 필요가 있음.
- 기업들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근로조건, 임금 격차 등을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

#### 4)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지원정책 담당 부서 신설

- 현재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주민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함.
- 향후 전담부서가 주도적으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등 근로환경, 제주지역의 산업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인주민수의 변동 요인 분석과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외국인에 대한 인권 문제는 제조업보다 농·수·축산업 등 1차 산업 분야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조사가 필요함.
- 1차 산업은 영세사업장이 많은 편임.

#### 5)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찾는 NGO센터 운영

- 현재 고용노동부는 노동법 내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성격의 NGO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함.

- 사업주 입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NGO센터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지원 센터 설치가 필요함.
- 한국인 중간관리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에 갈등과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 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문제점을 원만하게 중재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공 조직이 필요함.
- 일부 사업주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경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한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중간관리자, 사업주 등 조직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갈등 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함.

## 6) (가칭)제주외국인주민센터 설립

- 정부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여러 부처별로 분리·운영되고 있어서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은 편임.
-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정부정책을 이행하는데 부처별 상이성 때문에 담당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향후 외국인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통합 지원조직이 필요한 실정임.
- 외국인주민 대상 의료서비스, 문화예술 활동 참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이 부족함.
-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사업장에서는 언어적·문화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배우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함.
- 향후 제주지역 외국인주민들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가칭)제주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하여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지원 거점센터를 조직하고 지역별 중간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
- 예를 들면 생활문화권을 중심으로 제주시 동부권·서부권, 서귀포시 동부권·서부권 등 외국인주민의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가능함.

- 외국인근로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임금과 인권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문제 발생 이후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 체계가 필요함.
  - 지역주민들이 외국인들을 대하는 태도 등 외국인근로자를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제주 거주 외국인들이 종교와 문화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함.
- 현재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주민들은 국가별로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좀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이 센터에서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목적을 고려하여 나라별로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현재 외국인종합센터(1345)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사이트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가 필요함.

## 다. 조사 결과 시사점

- 제주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사업장 별로 소수로 근무하여 고립된 생활, 정보공유의 한계, 소통기회의 부족, 접근 및 이동의 제한 등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제도적으로 필요함.
- 제주지역의 산업특성상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려는 내국인 인력은 감소하여 그 대체 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산업별·업종별 특성들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제주 거주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다양한 비자 유형을 소지하

고 있기 때문에 비자 유형에 따른 외국인 지원정책의 다양화도 필요함.

- 성실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모범 고용주 및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업체(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외국인주민들이 문화 사회활동의 참여기회와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인거리’를 조성하고,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제주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지원 업무들이 이원화되어서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함.
-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주와 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인권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공조직이 필요함.
- 제주거주 외국인주민들의 실태조사, 행정지원서비스의 체계적·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주민공동체의 활성화,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공동체의 상생 발전 등과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가칭)외국인주민센터 설립 및 운영이 요구됨.

## V.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방안

### 1.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 가. 기본 방향

##### 1) 사람 중심의 지원시스템 구축

- 인종, 민족, 종교, 계층, 국가, 지역 등의 차이로 법적·제도적·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물론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임.
- 이러한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조직은 특정 집단(조직, 단체)이나 사람 혹은 계층 등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따라서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은 우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고,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음.

##### 2) 외국인주민 참여·이용의 극대화

- 제주 거주 모든 외국인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여러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주민들이 우선 지원조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려는 참여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지원조직 운영 관계자들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태도와 실천적 노력도 요구됨.

##### 3) 지역사회와의 통합·상생의 문화조성

- 외국인 지원조직은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과 사업들을 추진



하는 업무가 우선이지만, 동시에 지역주민들도 함께 동참하여 외국인주민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는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임.

- 제주 거주 외국인과의 지역주민 간의 유·무형의 긴장, 불화, 대립, 갈등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관리하여 제주사회가 외국인과의 지역사회의 상생 공동체 생활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들이 서로 함께 공감, 나눔, 배려의 정신을 표방하게 되면 지역사회 통합과 상생 발전이 가능할 것임.

#### 4) 외국인의 삶의 질 향상

- 외국인주민(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은 일터와 거주지의 위치, 정보접근의 한계, 언어 소통과 문화 이해의 부족으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 열악한 주거환경(노후주택, 공동주거, 교통이용의 불편 등), 사회 참여 활동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문화 활동의 제약 등으로 삶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지원조직은 다양한 국가와 체류기준(비자), 다양한 산업별 고용지위, 다문화가족 등의 특성을 지닌 제주 거주민족도를 높여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적극적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임.
- 외국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외국인 지원조직이 제주지역의 권역별(제주시권, 서귀포시권, 동부권, 서부권)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외국인 복지지원 및 전달 체계를 갖추어 필요 있음.

### 나. 추진전략

#### 1) 수요자 맞춤형 지원전략

- 외국인 지원조직은 우선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들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서 외국인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주 거주 외국인들의 출신 국가, 종교, 민족, 비자 유형, 다문화 가족 유

무, 산업별·업종별 고용형태 등의 외국인 수요자 욕구와 특성이 반영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함.

## 2) 자기역량 강화 전략

- 외국인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에 대체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동안 자신들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미래 설계를 해 나갈 수 있는 동력 제공이 필요함.
- 제주 거주 외국인들이 스스로 자기역량을 강화(self-empowerment)하고 자기결정권의 확장을 통해 제주사회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감.

## 3) 지역사회 연계 전략

- 외국인 지원조직이 외국인들에 의해서만 시설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지역사회와 격리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지역주민들은 이용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
- 이에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기관은 외국인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조직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때 사회통합이 가능해지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게 될 것임.

## 4) 다변화 · 허브화 · 복지화 전략

-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은 우선 다양성을 존중하여 이용 외국인의 출신 국가, 종교, 체류 자격(비자유형), 고용형태별, 다문화가족 유무, 외국인근로자 유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외국인 지원조직을 찾아가면 각종 민

원사항의 원스톱(one-stop) 지원 및 해소,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제공, 정보교류의 기회 확대, 각종 문화 활동의 참여, 친구 만들기 등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허브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국인 지원조직은 외국인의 교육, 고용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수립 시부터 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복지화 전략을 적용해야 할 것임.

## 2.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조직의 운영 방안

### 가. 외국인 지원조직의 성격

#### 1) 다양한 행정서비스 지원

- 외국인 지원조직은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법률지원 서비스(출입국 관련 비자문제, 고용, 결혼, 귀화 등 법률 상담 및 지원), 외국인 대상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 의료통역서비스 도입, 생활 적응을 위한 행정 민원 서비스(교통이용, 전출입 신고 등) 등 제주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센터 기능을 담당함.

#### 2) 외국인 대상 다양한 정보 제공

- 외국인 지원조직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모든 복지서비스, 교육, 행정, 종교, 법률, 고용, 사회활동참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방법, 산재 발생 시 문제 및 해결 등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사항임.
- 외국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접근하려면 외국인 지원조직에서 직접 정보를 생산 및 분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토록 네트워크 연결의 매개체가 되어야 함.

### 3) 외국인을 위한 공익성 실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들은 우선 행정 서비스 소비자인 일반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것임.
- 특히 외국인 지원조직이 민간단체(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할 경우에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서비스 제공과 공공의 이익 창출에 벗어나는 일에는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임.

### 4) 외국인 친화 생활문화 조성

- 외국인 지원조직은 외국인들이 제주지역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동시에 외국인들이 유·무형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합서비스 및 복지 지원의 성격을 지녀야 할 것임.
-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필요한 요구(needs)에도 경청하며, 동시에 외국인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제주 도민들과도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다문화 공동체 생활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임.

## 나.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의 접근 유형

### 1) 단기 과제

#### (1)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 설치 등 행정 지원조직의 일원화

- 현재 외국인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전담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국내 과 단위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함.
  -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노사협력계에서 담당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가족친화계에서 담

당하고 있으며, 제주 거주 외국인 지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 향후 외국인지원과를 신설하고, 이 부서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그 외 다양한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계를 배치함.

<표 IV-48> 국내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조직 사례(2017. 03. 기준)

자치단체		총인구/외국인 (비율)	소속부서	담당직제
시·도	서울특별시	9,904,312/468,083 (4.10%)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외국인정책·다문화가족·외국 인주민인권·글로벌센터운영팀
	인천광역시	2,890,451/89,515 (3.10%)	보훈다문화 봉사과	다문화가족·외국인생활지원· 보훈지원·자원봉사담당
	경기도	12,479,061/549,503 (4.40%)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외국인지원팀
시·군·구	경기도 안산시	747,035/75,965 (10.20%)	외국인지원본부	1국 2과 6담당 -다문화정책과: 정책·인권·특 구담당 -다문화지원과: 복지·교육문화 담당
	경기도 시흥시	425,184/43,295 (10.20%)	다문화지원과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건전 가정지원담당

- 현재 정부 각 부처별로 외국인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통합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조직 운영이 필요함.
- 또한 행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제주지역의 외국인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시민교육 또는 국제사회 이해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을 이해하고 다문화사회 유지 필요성을 홍보하는 정책이 필요함.
- 외국인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언어 통역 등 각종 신청 안내서비스를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게 담당할 수 있어야 함.

## (2) (가칭)제주외국인주민센터 설치 관련 기본계획 수립

- 외국인 관련 업무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기구 설치를 준비해야 하므로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함.
- 이에 행정에서는 ‘(가칭)제주외국인주민센터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조직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기본계획에는 지원조직의 기능 및 역할, 운영 체계, 운영 주체, 자원 마련 방법, 운영 인력 등 조직 구성, 운영 사업 유형, 시설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운영, 민간위탁 운영 방식 등도 포함되어야 함.
- 행정에서는 전담부서를 두고 외국인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장기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 중 · 장기과제

### ☐ (가칭)제주외국인주민센터 설치

- (가칭)제주외국인주민센터 설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운영, (가칭) 제주외국인재단 설립(도 출자·출연기관) 후 직접 운영, 민간단체 위탁 운영 방식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진단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법을 결정함.

##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직접 운영 방식

-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칭)제주외국인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개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2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에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동지역(제주시, 서귀포시), 동부지역(성산읍 중

- 심), 서부지역(대정읍 중심) 등 4개의 중간 거점조직을 운영함.
- 외국인들의 특성상 근무지와 근접한 곳에 지원센터가 있어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며,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경우 민간단체와 운영 협력이 가능함.
- 경기도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운영사례 참고.

## (2) (가칭)제주의국인재단 설립(도 출자·출연기관) 후 직접 운영 방식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가칭)제주의국인재단을 설립하여 제주 거주 외국인 관련 모든 정책을 담당함.
- 이 기구는 외국인 관련 여러 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합적·포용적 관점에서 운영해야 함.

## (3) 민간단체 위탁 운영 방식

- 행정조직의 전담부서 운영이나 직접 운영 방식을 벗어나서 좀더 개방화된 운영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칭)제주의국인주민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민간위탁 운영 방법이 결정되면 운영주체, 역할 등 위탁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진행함.
- 민간위탁에 따른 조례 제정 등 공정하고 엄격한 규정에 입각하여 적합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

## 다. 외국인 지원조직의 주요 운영 사업

### 1)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상시 모니터링

-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은 199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2003년 발효된 협약으로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역점을 둔 포괄적인 국제인권조약에 해당됨.

- 이 협약은 현재 50개 국가에서 비준되었으나, 한국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안정적인 노동환경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관련 조례에 국제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반영해야 함.

## 2) (가칭)제주외국인협의회 조직 및 운영

-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2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외국인 지원관련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의 인권 보호 및 업무 증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정책을 다문화가족 중심 지원정책에서 벗어나서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제주지역 거주 모든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전라북도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제주 거주 외국인 중심의 민간협의체 운영을 지원함
- 국가별 대표자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국가별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에도 도움을 줌

## 3) 외국인 대상 다양한 복지·교육 및 문화사업 추진

- 제주지역의 각 산업체별 고용주(또는 중간관리자 등) 대상 인권교육, 문화다양성교육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업종과 사업장 규모, 고용주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복지와 처우 문제에 격차는 있겠지만, 일부 사업체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외국인 지원 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해 고용주(한국인근로자 포함) 대상 인권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4) 다문화가족 대상의 취업 상담·알선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

- 다문화가족 구성원(결혼이민자 중심)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 업무를 담당함.

#### 5) 외국인 건강보건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사업

- 제주 거주 외국인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의료기관 및 의료진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함.

#### 6) 외국인 2세대 혁신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한국사회의 교육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심리적 격차를 좁히는 역할을 담당함.

#### 7)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의 정례화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유형과 거주 목적, 제주 산업 구조 등 다양한 기초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의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이에 외국인주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8)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 출입국 관련 대행 사무

- 외국인들의 제주 입·출국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함.

## 9) 제주 도민 대상 외국인 및 다문화 바로 알기 교육 사업

- 제주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외국인과 상생 방안을 마련함.
- 제주 거주 외국인들이 제주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점을 인식하고, 외국인들과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는 평화공동체 실현 조성이 필요함.
- 외국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외국인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환경 조성, 향후 제주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의 역할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기 마련이 필요함.

## 10) 제주 거주 외국인 재능기부 발굴 및 활성화 사업

- 외국인들은 여러 정책의 수혜자이고, 도움을 받는다는 수동적 시각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여 봉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줌.

## 11) ‘(가칭)제주외국인의 날’ 지정 및 운영

- 현재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념일을 지정하여 지역공동체 또는 문화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함.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는 세계인의 날을 포함하여 세계인주간이 지정되어 있음.
- 세계인의 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서 정한 국가기념일 ; 5월 20일)을 기념하여 제주지역에서도 ‘제주다민족문화제’가 개최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최로 제주 글로벌·다문화축제도 개최(매년 10월)되고 있음.
- 세계인의 날, 세계인주간 등을 포함하여 제주 거주 외국인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가칭)제주외국인의 날’ 운영도 필요함.

## VI. 정책제언

- 제주 거주 외국인 지원 조직의 신설과 그에 따른 외국인주민센터 등 공식 기관의 설치는 단기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하다고 봄.
- 이에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 신설이나 지원조직 설치 등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책과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 1. 외국인 지원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 활성화

-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은 한국국적 미취득자, 난민, 미등록체류자 등 제주 지역에서 주거, 일자리, 인권 보장 등이 가능하도록 행정과 민간 지원이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금융기관과 민간 지원단체, 행정이 협력하여 서비스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협력 방안을 권장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외국인주민의 편의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2017. 05. 17.),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임.
  - 이는 행정의 재원 부담, 민간단체의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과 지역사회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제공, 우리은행의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방향을 보여줌.
- 위 사례는 제주에서 외국인 지원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 구체적인 사업이 시작됨을 보여줌.

## 2. 외국인 친화적인 제주 만들기 지원

-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노동 조건과 거주 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만족하는 이유와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다양할 수 있음.
- 이에 제주지역에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지면서 다문화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외국인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또한 난민지위신청자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들이 제주로 입국하여 생활하거나, 제주를 경유하여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 없도록 개방적인 외국인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제주지역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외국인 인력지원 정책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적용 대상임.
- 따라서 이들 이외에 단기·장기 체류 외국인들이 제주사회에 적응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적인 거주 환경 조성이 필요함.

## 3.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방안 마련

- 정부는 비숙련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체류 기간을 9년 8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음(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보도자료, 2017. 07. 18.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행’).
- 현재까지는 비숙련 이주노동자들이 4년 10개월 국내 체류 후에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 고용부의 특별한국어시험을 통과하면 고용허가증을 발급받고 법무부의 비전문취업 비자(E-9) 갱신을 거쳐 재입국 후 4년 10개월간 체류해 왔음.
- 정부의 숙련기능인(E-7) 제도는 자격 요건이 강한 편이어서, 제주지역의 산업체에서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산업별(특히 제조업) 숙련기능 인력 유입 방안을 보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제주의 핵심 산업인 농·수·축산업과 관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외국인 체류 자격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주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외국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 및 고용시장 상황에 직면해 있음.

####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의 보완 시행

- 제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도입 정책 시행을 앞두고 점검한 결과<sup>21)</sup> 이행 실적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정부에서는 2015년 제주지역의 특수성(국제관광지)을 감안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음식점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를 허가하였으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 이 제도에 따른 고용조건이 까다로워서 영세업소는 인력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일부 조건을 완화하여 업종별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함.
- 따라서 제주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 보완을 요청하고 추진해야 함.
  - 현재 고용 조건은 체류 기간, 숙식과 임금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영세농가에서는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90일이라는 단기 체류 기간으

---

21) 2017년 상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 시행에 앞서 수요 조사한 결과 제주시는 44개 농가에서 외국인 88명을, 서귀포시는 19개 농가에서 외국인 33명 등 총 121명을 희망했으나 최종 고용 현황을 보면 제주시 10개 농가에서 외국인 19명을, 서귀포시 7개 농가에서 외국인 13명 등 총 32명을 고용하는데 그침.

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도 어려움.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또는 마을단위)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계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최종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제주지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과 동반 입국이 가능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5. 무사증제도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들의 국내 미등록체류를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사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외국인 이탈에 따른 미등록체류자가 발생하면서 제주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범죄, 폭력, 미등록체류, 외국인에 대한 불신 등)가 외국인 지원정책의 취지를 상쇄시키고 있음.
- 향후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통해 의도적인 미등록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에 홍보해야 함.



## 참고문헌

- 강동관(2016),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 IOM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No. 2016 - 05.
- 강휘원(2007),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정부”, 『한국행정학회 2007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상우 외(201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울산발전연구원.
- 김원숙(2012),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IOM 이민정책연구원 위킹페이퍼 시리즈. No. 2012-04.
- 김이선 외(2011),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류유선(2016), 『대전지역 체류 이주민 현황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대전 세종연구원.
- 법무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법무부(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및 이수 교육 교재』.
- 법무부(2017),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통계자료』.
- 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2017), 『내부자료』.
-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 (2013),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일조각.
- 아산시 여성가족과(2017),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내부자료.
-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다문화정책과(2017. 01. 01.),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다문화지원책과(2017. 03. 31.),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 오창균·안지민(2008), 『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대구 경북연구원.
- 이규용·김기선·정기선·최서리·최홍엽(2015),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이동기 외(2010),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방안』, 전북발전연구원.

이선미(2011), 「서구이민정책의 이론적 기초」,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2015), “이주민 분류방식 및 용어 사용의 부처별 차이와 문제점”, 『이민 정책연구원 이슈 브리프』 No. 2015-13.

이혜경(2010), 『한국이민정책사』, IOM 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2016), “외국인정책 정책용어 개념논란과 이해”, 『이민정책연구원 이슈 브리프』 No. 2016-08.

정기선 외(2016),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법무부.

정기선 외(2012), 『2012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통합 정책 연구』, 행정안전부.

정명주(2012),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정책 실태 분석-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41권,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정미애(2011), “일본의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문화공생으로의 인식변화와 다문화 공생의 거버넌스”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2017), 『내부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2017), 『내부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2017). 『내부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6), 『제주통계연보』, 각 연도.

조석주(2007). “다문화공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강화방안 -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과제와 전망 제1회의』.

조원탁 외(2012),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 양서원.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2017), 『내부자료』.

최병두(2012),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도시 및 지역정책과제.” 『국토』 통권364호, 국토연구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4월호.

충남 아산시 여성가족과(2017), 『내부자료』.

통계청(2016. 11). 『인구주택총조사』.

하종범(2012), 『국내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및 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

뉴스1, “아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2017. 09. 08.)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홈페이지(<http://global.iansan.net/>)

제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u.go.kr>).

충남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liveinkorea.kr/center/intro/introduce.do>)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http://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ReplMigED/Korea.pdf>.



## **Abstract**

### **Study of Forming of Organization to Support Foreigners in Jeju Region**

**Moon Soon Deok & Koh Seung hahn & Ko Kyung Min**

Keyword : foreign workers, marriage immigrants,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organizations for foreigners, foreign residents,  
undocumented residents

There are currently 2,024,813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more than 20,000 of them are residing in Jeju region. As such,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operate the various policies for foreigners efficiently is needed.

This study presents the necessity and operational measures for an integrated support organization for foreigners to provide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upport for the foreigners residing in Jeju to carry out their lives stably.

As part of the study, we conducted the FGI interviews of experts and survey of foreigners on the support system and operation for the foreigners residing in Jeju to examine the current issues and reflected the result.

The study proposed the 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support short-term to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foreign residents as the short-term program and

the construction of Jeju Foreign Resident Center (tentatively named) as the mid- to long-term program. It also suggested three options to operate the support organization transparently in public interest: direct management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irect operation by newly established the (tentative) Jeju Foreigner Foundation, and management by a private organization under a contract.

## 부록 1.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유형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4. 사증면제(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5. 관광·통과(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6. 일시취재(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7. 삭제 <2011.11.1>	
8. 단기방문(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9. 단기취업(C-4)	일시 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10.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11.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12. 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13. 일반연수(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제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4. 취재(D-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또는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15. 종교(D-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과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및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6. 주재(D-7)	<p>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다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p> <p>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 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17. 기업투자(D-8)	<p>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li> </ol>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8. 무역경영(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 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 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8의2. 구직(D-10)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홍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9. 교수(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0.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21. 연구(E-3)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2.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23. 전문직업(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4. 예술홍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5.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5의2. 삭제 <2007.6.1>	
25의3.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5의4. 선원취업 (E-10)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26. 방문동거(F-1)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영주(F-5) 가목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7. 거주(F-2)	<p>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p> <p>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li> <li>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li> <li>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li> </ol> <p>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p> <p>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p> <p>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li> <li>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li> <li>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li> </ol>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p>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p> <p>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28. 동반(F-3)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8의2.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8의3. 영주(F-5)	<p>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p> <p>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p>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p>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p> <p>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li> <li>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ol> <p>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p> <p>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카.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p> <p>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p>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p>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하. 거주(F-2) 차목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p>거.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p> <p>너.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품행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p> <p>더.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28의4. 결혼이민(F-6)	<p>가. 국민의 배우자</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29. 기타(G-1)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0.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1. 방문취업(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p>“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li> <li>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li> <li>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li> <li>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li> <li>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li> <li>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li> <li>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li> </ol> <p>나. 활동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li> <li>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li> <li>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li> <li>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li> <li>바) 소금채취업(07220)</li> <li>사) 제조업(10~33).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li> </ol> </li> </ol>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p>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p> <p>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p> <p>차) 건설업(41~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한다.</p> <p>카) 산동물 도매업(46205)</p> <p>타)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p> <p>파) 가정용품 도매업(464)</p> <p>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p> <p>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p> <p>너)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p> <p>더)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p> <p>러) 무점포 소매업(479)</p> <p>머) 육상 여객 운송업(492)</p> <p>버)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정한다.</p> <p>서)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p> <p>어) 여관업(55112)</p> <p>저) 일반 음식점업(5611)    처) 기타 음식점업(5619)</p> <p>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p> <p>터)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p> <p>퍼)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p> <p>허)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p> <p>고)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p> <p>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p> <p>도) 사회복지 서비스업(87)</p> <p>로)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p> <p>모)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p> <p>보)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p> <p>소) 욕탕업(96121)    오) 산업용 세탁업(96911)</p> <p>조)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p> <p>초) 가구 내 고용활동(97)</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법무부(개정 2016. 07. 05.).

## 부록 2.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 및 정책 지원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외국인들이 제주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지원 조직을 설치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코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 처리되며, 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7월

제 주 연 구 원 장

연구책임 : 문 순 덕 박사(☎ 726-7407, FAX 751-2168)

면접원 이름 (통역사)		외국인 관련기관	
조사일시	2017년      월      일		



## I. 제주 거주 만족도

1. 귀하는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1-1번 문항으로)
- ② 약간 불만족 (☞ 1-1번 문항으로)
- ③ 보통 (☞ 2번 문항으로)
- ④ 약간 만족 (☞ 1-2번 문항으로)
- ⑤ 매우 만족 (☞ 1-2번 문항으로)

1-1. 귀하가 제주도 거주에 불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2개만 골라주십시오)

- ①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서
- ②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 ③ 주거시설이 좋지 않아서
- ④ 편의시설(마트, 병원 등)이 부족해서
- ⑤ 제주의 언어, 풍습과 문화에 적응이 힘들어서
- 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서
- ⑦ 육지(제주도외 지역)에 가는 게 불편해서
- ⑧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1-2. 귀하가 제주도 거주에 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2개만 골라주십시오)

- ① 자연환경이 좋아서
- ② 내가 살았던 고향 같아서
- ③ 제주사람들이 좋아서
- ④ 생활하기에 편리해서
- 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 ⑥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적어서
- ⑦ 제주의 풍습과 문화가 좋아서
- ⑧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2. 귀하가 느끼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주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비우호적이다
- ② 약간 비우호적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우호적이다
- ⑤ 매우 우호적이다

## II. 제주 생활

3. 귀하는 제주도에서 거주하면서 다음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 표시하여 주십시오.

공공시설(서비스)	이용한 적 있음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해당 공공시설 모름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문화 교육, 상담 등)			
2. 이주여성지원센터(각종 지원 내용 상담 등)			
3. 읍면동 행정기관(서류 신청 및 발급 등)			
4. 보건소(진료,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5. 도서관(독서, 인터넷, 정보서비스 이용)			
6. 고용센터(취업, 직업상담 등)			
7. 외국인공동체(상담, 교육 등)			
8. 출입국관리사무소(비자 발급 등)			
9. 시 공공의료원(진료 등)			
10.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4. 귀하는 제주에서 거주하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의사소통 (        )
- ② 공공시설의 접근성 (        )
- ③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부족 (        )
- ④ 이용시간의 제한 (        )
- ⑤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친절 (        )
- ⑥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        )
- ⑦ 어려운 점이 없음 (        )
- ⑧ 기타 (        )

5. 귀하는 이웃 주민,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등과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지내고 있지 못하다
- ② 약간 잘 지내고 있지 못하다
- ③ 보통
- ④ 약간 잘 지내고 있다
- ⑤ 매우 잘 지내고 있다
- ⑥ 서로 알고 지낼 시간이 없다

6. 귀하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어려움 중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언어 소통의 어려움
- ② 힘에 부치는 고된 일
- ③ 긴 노동시간
- ④ 낮은 임금
- ⑤ 직장상사 혹은 동료와 갈등
- ⑥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 ⑦ 자녀 양육
- ⑧ 집안일과 병행하기 어려움
- ⑨ 기타\_\_\_\_\_ (적어 주십시오)

7. 귀하는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어떤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근무 중 상해 (            )
- ② 관리자 혹은 직장 동료로부터 신체적 폭행 (            )
- ③ 관리자 혹은 직장 동료로부터 언어적 폭력 (            )
- ④ 직장 관리자에 의한 퇴근 후 감금 (            )
- ⑤ 고용주의 여권 압류 (            )
- ⑥ 고용주의 협박 (            )
- ⑦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불법적인 폭력 및 체포 (            )
- ⑧ 임금 체불 (            )
- ⑨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8. 귀하는 제주도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9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8-1번 문항으로)

8-1. 귀하가 제주도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어서
- ② 제주에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 ③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가 좋지 않아서
- ④ 친구나 지인들이 없어서
- ⑤ 비자 기간 만료에 따라 이동해야 하므로
- ⑥ 제주의 근로환경(특히 임금)이 좋지 않아서
- ⑦ 제주의 문화와 생활풍습 적응이 어려워서
- ⑧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 Ⅲ. 행정지원서비스

9. 귀하는 행정기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시청, 도청)에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9-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0번 문항으로)

9-1. 그렇다면 귀하는 어떤 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였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비자 관련 문제 (                      )  
② 혼인 신고, 주민등록 신청, 거주지 신고 등 (                      )  
③ 이웃 주민과 갈등 문제 (                      )  
④ 취업 알선 요청 (                      )  
⑤ 배우자와 불화 문제 (                      )  
⑥ 자녀 문제 (학교 및 사회 부적응 등) (                      )  
⑦ 기타 \_\_\_\_\_(적어 주십시오)

10. 귀하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가장 먼저 찾는 순서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1순위 (                      )번                      제2순위 (                      )번

- ① 배우자나 (시)부모  
② 친구 혹은 지인(선배, 언니 등)  
③ 외국인지원센터(다문화가정, 외국인공동체 등)  
④ 리사무소 리장(통장 등)  
⑤ 주민센터(동사무소) 공무원  
⑥ 시청이나 도청의 외국인 담당 공무원  
⑦ 가까운 이웃 동네 주민  
⑧ 종교인(신부, 목사, 스님 등)  
⑨ 기타 \_\_\_\_\_(적어 주십시오)

11. 귀하가 **평소 이용하는 기관(단체)**들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
- ② 보건소 (        )
- ③ 시청 또는 도청 (        )
- ④ 의료원(서귀포, 제주시) (        )
- 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        )
- ⑥ 외국인 지원 서비스 기관 (        )
- ⑦ 다른지역 외국인지원센터(경기도 안산시 등) (        )
- ⑧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12. 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13-1번 문항으로)
- ② 약간 불만족 (☞ 13-1번 문항으로)
- ③ 보통 (☞ 14번 문항으로)
- ④ 약간 만족 (☞ 14번 문항으로)
- ⑤ 매우 만족 (☞ 14번 문항으로)

13-1. 그렇다면 귀하는 **무엇이 가장 불만족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공무원들이 외국인에 대해 불친절하다
- ② 행정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안 되어 있다
- ③ 행정기관에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다
- ④ 나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없다
- ⑤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1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행정기관에서 외국인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서비스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항을 우선순위대로 골라 주십시오.** 제1순위 (        )번 제2순위 (        )번

- ①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 배우기
- ② 한국 및 제주의 다양한 문화(예절, 풍습, 음식 등) 교육 서비스
- ③ 보건·의료서비스(병원 내 안내판, 안내 및 통역 서비스 등)
- ④ 생활통역 지원서비스(관공서, 병원 이용, 인권 상담 등)
- ⑤ 일자리 지원 서비스(취업상담, 일자리 소개, 창업교육 등)
- ⑥ 외국인에 대해 우호적이고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
- ⑦ 외국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재능기부 자원봉사 참여 등)
- ⑧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기회 제공
- ⑨ 기타 \_\_\_\_\_(적어 주십시오)

15. 귀하가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도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중에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필요한 지원/도움이 없다
- ② 일자리 알선
- ③ 직업 및 취업교육
- ④ 한국어 교육
- ⑤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 ⑥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지원
- ⑦ 기타 \_\_\_\_\_(적어 주십시오)

16. 귀하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제주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외국인 지원과 생활개선 등의 현실을 고려한 조례 개정
- ② 불법 체류 및 난민 신청 외국인에 대한 비자 문제 해결
- ③ 가정 폭력과 이혼 등에 대해 외국인 가정에 대한 전문적 상담
- ④ 외국인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 서비스(통역, 교육, 보건의료 등)의 질적 개선
- ⑤ 종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주민센터 설립 및 운영
- ⑥ 제주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의 정례화
- ⑦ 제주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차별 개선 및 인권 증진

- ⑧ 외국인에게 필요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알선  
 ⑨ 외국인 자녀교육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 마련  
 ⑩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 IV. 개인적 특성

1. 귀하는 제주도에 얼마 동안 거주하셨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2. 귀하의 현재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제주시 동(洞)지역                      ② 서귀포시 동(洞)지역  
 ③ 제주시 읍·면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3. 귀하의 출신 국가는 어디입니까?  
 \_\_\_\_\_ 국가
4. 귀하는 현재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① 농·축·수산업                      ② 자영업(숙박, 음식 등)  
 ③ 전문직(회계, 의료, 등)              ④ 경영·관리직  
 ⑤ 기술생산직                      ⑥ 판매서비스업  
 ⑦ 일용단순직                      ⑧ 공무원  
 ⑨ 전업주부                      ⑩ 직업이 없다  
 ⑪ 기타 \_\_\_\_\_
5. 귀하는 제주에서 현재 경제생활 형편은 어떠합니까?  
 ① 매우 어렵다                      ② 대체로 어렵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은 편이다



6. 귀하는 제주에서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 ① 혼자                      ② (시)부모와 함께                      ③ 배우자와 단둘이  
④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⑤ 배우자 없이 자녀와 함께  
⑥ 친구와 함께                      ⑦ 친척과 함께                      ⑧ 직장 동료  
⑨ 기타 \_\_\_\_\_

7.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중퇴 포함)  
③ 중학교 (중퇴 포함)    ④ 고졸 (중퇴 포함)  
⑤ 전문대학 (중퇴 포함)    ⑥ 4년제 대학 (중퇴 포함)  
⑦ 대학원 이상 (석사 수료 이상)

8. 귀댁(귀하)의 제주에서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만원

9.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10.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3.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정) 2007-05-09 조례 제 237호

(일부개정) 2008-05-14 조례 제 363호

(일부개정) 2015-11-04 조례 제 1464호

(일부개정) 2017-03-29 조례 제 183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주외국인 등의 차별방지와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거주외국인등”이라 함은 거주외국인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자녀를 말한다.
3. “거주외국인등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 등의 지위) ①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제주자치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주자치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도지사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

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거주외국인등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3. 29.]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7. 3. 29.>

1. 거주외국인등
2. 거주외국인등 지원단체
3. 거주외국인단체

② 도지사는 거주외국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4.>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사업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사업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사업
4. 문화·체육행사 사업
5. 외국인 근로자 쉼터 지원사업
6.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7.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

## 제2장 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

제6조(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거주외국인등의 지원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차별 방지에 관한 사항
5. 거주외국인 등 지원단체 및 거주외국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2008. 5. 14, 2017. 3. 29.>

1. 당연직 위원(6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관련 국장·경제관련 국장·보건복지여성관련 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관련 실국장, 제주지방경찰청 외국인 관련 과장,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2. 위촉직 위원(9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거주외국인등, 거주외국인등 단체 대표, 거주외국인등 지원 단체 대표, 그 밖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1. 4.]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거주외국인등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거주외국인등의 지원 활성화

제15조(거주외국인등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거주외국인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세계인의 날) ①도지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4, 2017. 3. 29.>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4. 유공자 및 단체 포상
  5. 그 밖에 거주외국인등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4>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호, 2015. 11. 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1835호, 2017. 3. 2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구진

---

연구책임	문순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고승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고경민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현안연구 2017-05

###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

발행인 || 강기춘

발행일 || 2017년 9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63147 제주도 아연로 253 (오라2동)

전화 : (064) 726-0500 팩스 : (064) 751-2168

홈페이지 : [www.jri.re.kr](http://www.jr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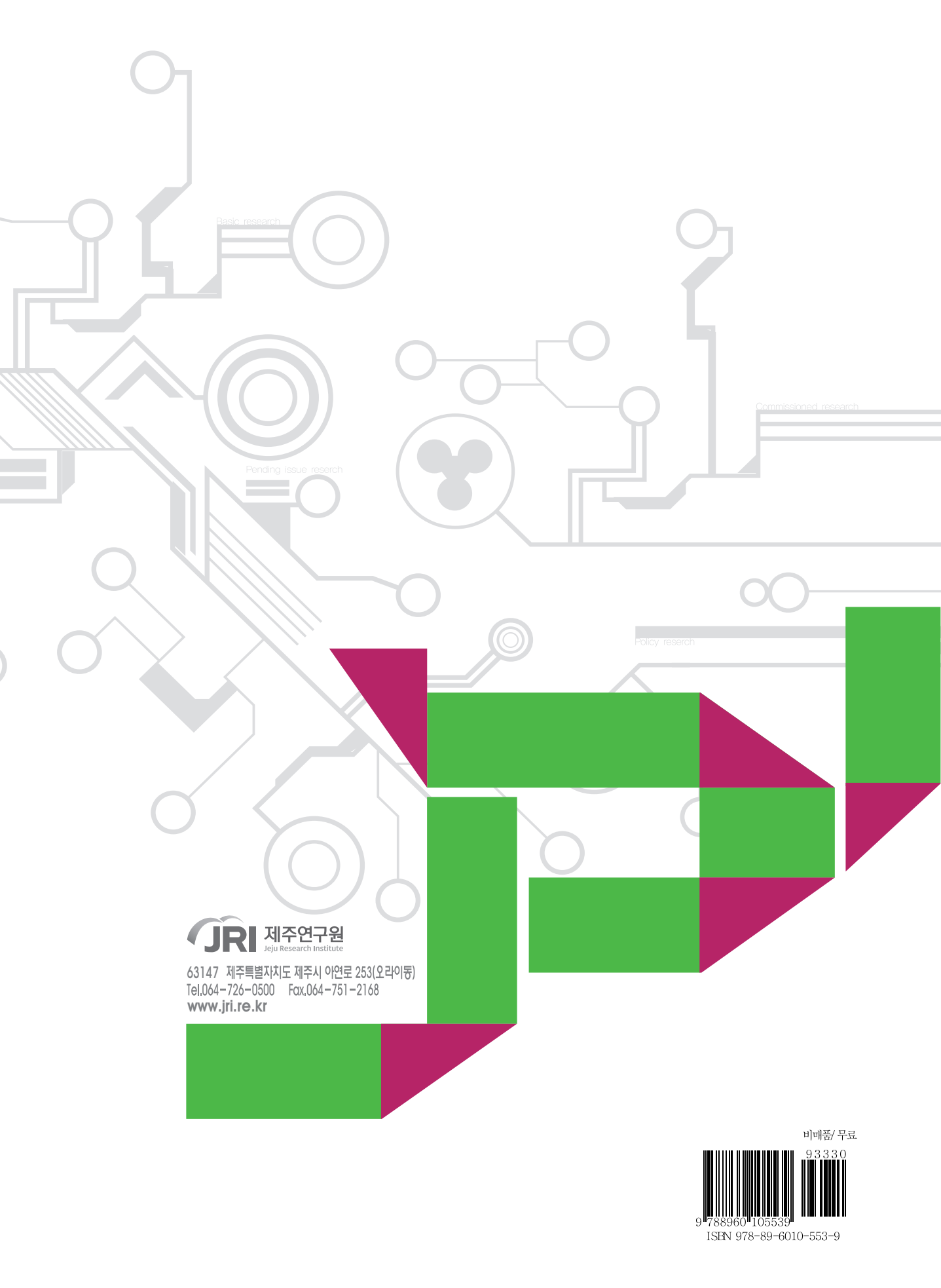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

ISBN : 978-89-6010-553-9 93330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Tel.064-726-0500 Fax.064-751-2168  
[www.jri.re.kr](http://www.jri.re.kr)

비매출/ 무료



9 788960 105539  
ISBN 978-89-6010-553-9